

인권정보자료실
R1.1.10

인권하루소식

합본10호
(98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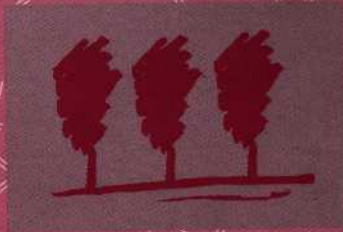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1144호 F86) 푸이출판

인권정보자료실
R1.1.10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하루소식〉 98년 4월분 총목차(1094-111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05	4/16	1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만화사랑방〉 실업
		2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시작돼-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 개설/ 전국연합, IMF 재협상, 재벌개혁 촉구집회
1106	4/17	1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4·3 추모행사 마무리, '진실규명, 이제 출발'
		2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강용주·김진성 씨 고문사태 발표/기혼여성노동자 교통심각, 고용불안·취업상담 급증/민주노총·전교조 등,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1107	4/18	1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소의계층 고통전가' 비판-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2	"우리도 한국사람입니다"- 국회인권포럼, '해외입양인 인권' 토론/불심검문 2차 캠페인 전개/서준식 씨 4월혁명상 수상
1108	4/21	1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컴퓨터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
		2	"동티모르 인권 지지"호소- 노벨상 수상자 호르타 씨, 김 대통령에 서한/참여연대, '고스톱 의원' 13명 검찰 고발/주간인권흐름(4월 13일-4월 19일)
		3	〈인권시평〉 아프리카 주장이 온다고 해도(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1109	4/22	1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새로나온 책〉 '면의시설 다 시보기' (김정열 등 지음)
		2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 "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하나들 늘어가는 양심수 새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1110	4/23	1	3개월 개압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만화사랑방〉 일본군 위안부
		2	불법 검문 불복종운동 대학가 확산조짐, 24일부터 통신공간에서 선언운동 전개/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실질적 조직화
1111	4/24	1	물대포 5시간 난사·고공침투- 도원동 강제철거 완료, 농성자 전원 연행/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목요일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
		2	"노동은 국민의 권리"- 국민승리21, 1차 실업자대회 가져/ "허위자백 외 불증없자 기자회견 시켜", '구미유학생 사건' 양동화 씨 증언
1112	4/25	1	대답없는 메아리 "의문사 진상규명"- 유기협 등, 대국민캠페인 돌입/도원동 굴러와 농성자들 계속 구금, 향의시위자들도 연행
		2	말뿐인 경찰의 '전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검문/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석탄특사, 양심수 포함하라"- 전국연합, 법무부장관에 공개서한/사회적 통합 위한 교육 절실, 독일 시각장애인학교장 특강
1113	4/28	1	'교통'의 성역, 배 불리는 자본- 한국타이어, 순이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2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주간인권흐름(4월 21일-4월 26일)
1114	4/29	1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새로나온 책〉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노라 칼린 지음)
		2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명동성당 경찰 모습 사라져, 불심검문 캠페인 영향/ 연세대 불심검문 캠페인 한창, 27일 동아리연합회 설명회
1115	4/30	1	'NO! MAI!' 향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선 '인권·환경' 시수
		2-3	〈인권하루소식〉 98년 4월분 총목차(1094호-1115호)

인권하루소식

98년 5월

(제1116호 - 제113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1일(금)

제 11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경북대, 고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형행 불심검문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경찰폭력과 공권력 남용의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범죄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유명무실한 '천질 검문요령'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은 하루속히 과거의 억압적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척결과 국민 기본권 보장 △학생운동 탄압 중지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며, "경찰이 억압적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강력하게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국 대학 총학생회의 선언문 발표의에도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는

'불법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명운동이 진행중인 게시판은 하이텔 '바통모'(go barun), 나우누리 '찬우물'(go cw), 참세상 '인권정보센터'(go rights) 등이다.

☞ 2면으로 이어짐

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물 혐의 최근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의 구속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의 적용

을 확대하고 있는 공안기관이 지난 29일 출판사 사장을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과거경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수사3대는 29일 오전 10시경 대동출판사 사장 이상관(35) 씨를 중앙동 자택에서 연행한 뒤, 이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부인 현영숙 씨에 따르면, 경찰이 제시한 체포영장에는 『항일무장투쟁사』를 비롯한 16종의 서적이 이적표현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 최근 출판된 『썩어지지 않는 역사』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 씨는 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간 미출판 원고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도 문제삼으려 하는 것 같다"고 밝히며, "이 원고들은 남편이 출판하지 않기로 했던 원고"라고 말했다.

만
화
사
랑
방

어머니는 아직도 울고 있다!

이문사 당한 자식을 가슴에 품고 난 후
우리집은 웃음을 잃었다



조용한가정들

잔혹, 비참한 현실!

영화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 3면에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과
자본의 세계화'

이동수

위기의 대학! 민중연대로 돌파구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 열려

대학생들의 함성이 종로거리를 가득 메웠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공원에서 '제10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및 노동-대학 연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가 수도권 40여 개 대학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학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편적인 권리조차 말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학생들도 미래를 보장받기는커녕 늘어만 가는 실업문제와 교육비용의 증가, 민주적 권리의 축소 속에서 경쟁으로만 편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고용안정 쟁취, 민중생존권사수 운동을 통해 자본의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사회제도에 맞서 힘차게 청년학생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집회에 같이 한 민주노총 이성도(조직감화위원장) 씨는 "힘들게 대학을 들어가도 취직이 안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해 실직자가 되는 학생들을 이제 동지라고 부르겠다"며 청년학생들에 대한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 씨는 또 "지금까지 재벌이 부정축제한 돈을 모두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재벌은 재산권을 주장하지만 그 돈은 합법적으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한화의 폐수 무단방류 압력으로 자살한 고 정준희 씨의 유가족이 나와 "부검으로 갈기갈기 찢긴 채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다"며 "오늘로 35일째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 학생들의 힘찬 연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경제를 완전히 내주는 MAI(다자간투자협정)는 우리 경제를 비롯한 모든 주권을 빼앗아 갈 것"이라며 "독점투기자본만 살찌우는 MAI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학생들은 대 학교까지 인도를 따라 평화행진을 벌였고, 저녁 8시부터 연세대에서 문화제를 가졌다.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

양심수 사면을 기대해온 사람들에게 오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은 다시 한번 실망감만 안겨줄 전망이다.

30일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은 계획된 바 없으며, 다만 예전처럼 일반수들에 대한 가석방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법무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제엠네스티는 29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5월 3일 양심수 사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한국정부의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엠네스티는 또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환영을 표현 하지만, 장기수감이 여전히 구금중이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청협, 전대협동우회, 한국기독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10개 청년단체 대표들은 30일 오전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월 3일 석탄일을 맞아 추가사면이 있을 것이라 밝혔던 정부가 다시 말을 바꾸어 추가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법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합의4부는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으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부원에서 떠나 할 것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또 국가보안법상의 기밀누설죄와 관련해서도 "한총련 등 운동단체에 대한 내용을 공지의 사실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불심검문> 1면에서 이어짐

한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경찰이 불심검문의 불법성을 제거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5월 1일 집회 등 이후 대중적인 거리집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불심검문이 이뤄질 경우 유인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은 현행 '불심검문'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경찰·법조계·정치계·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루소식 합본9호 발행
97년 하반기 인권상황
가격: 1만원

구독료 납부!
전국 모든 은행
7618848

<특별기고>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대표)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오늘날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유화의 경향'이 점차 법적 강제력을 획득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관련 협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실례는 수다한 쌍무간 투자협정과 몇몇 자유무역협정내의 투자관련 조항들에서 쉽게 발견된다. 90년대 이후 각 나라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투자협정은, 거의 대부분이 투자를 촉진하거나 투자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WTO(세계무역기구)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이미 그 내부에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내에서는 투자원칙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NAFTA는 남아메리카지역을 포괄하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로의 확대 계획에 이미 들어섰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투자협정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70년대 후반까지는 선진국과 제3세계 모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수많은 조건과 통제가 존재했었다. 해외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고, 해외기업은 반드시 투자대상국의 고용 창출과 기술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세계적 확산과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제기구·협약들에 의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 변화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위해서 투자유치국 정부들의 기존 법률과 정책은 수정되거나 혹은 폐기되어야 한다. MAI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협약인 것이다.

협상 중인 MAI의 대표적 조항과 예상되는 효과를 살펴보자.

무제한적인 투자의 자유

첫째, MAI는 투자자(기업)와 '계약 당사자(정부)'가 MAI내에서 동일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초국적 기업은 국민국가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는 MAI가 제안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에서 잘 드러난다. 투자자나 그의 투자에 대해 손실을 입히는, MAI 조항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기업은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 반대는

"전세계 민중들은 시민으로서의 근본적 권리와 지구의 생태적 권리들을 조금도 남김없이 초국적 자본들에게 강탈당할 것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로써 기업은 국민 국가의 권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권력체로 등장할 전망이다.

둘째, MAI는 '투자'의 개념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투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 MAI가 제안하는 투자의 정의이다. 이 개념 안에 '투기적 자본'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조항은 정부가 자국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초국적 기업에게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제화와 용역의 판매, 구매는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에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력발전, 상수도, 철도, 전화 사업 등은 이러한 이유로 금지될 수 있다. 공기업민영화 과정에서도 해외기업에게 입찰이 허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해외 기업에게 투자에 대

한 이행요구-고용내역, 수출입쿼터, 기술이전, 현지구매 등 -를 내거는 것은 금지된다.

넷째, 어떤 정부도 기업이 수익을 자유롭게 회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투자자는 소유권을 빼앗긴 자신의 투자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절대적 보장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기업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해외로 뺏아 가는 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될 상황을 보여준다.

다섯째, MAI는 '점진적 철폐(rollback clauses)' 조항과 '현상유지(standstill)'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점진적 철폐' 조항에 따라서, MAI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 국가의 법률은 축소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한다. '현상유지' 조항에 의해, 앞으로는 어떤 개별국가도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법률, 정책, 계획 등을 도입하지 못하게 된다.

여섯째, '탈퇴' 조항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효력발효 후 5년까지는 어떤 나라도 MAI로부터 탈퇴하지 못한다. 또한 만약 5년 후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투자를 15년 동안 더 보호해야 한다.

민중 권리의 강탈

MAI하에서, 국가는 더 이상 투자정책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MAI가 타결된다면 전세계 민중들은 시민으로서의 근본적 권리들과 지구의 생태적 권리들을 이미 잃을 대로 잃어버린 권리지만 -조금도 남김없이 초국적 자본들에게 강탈당할 것이다. 국가는 오로지 '초국적 자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일할 것이다.

초국적 자본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협약들에 대한 반대와 경쟁체제의 통제를 위한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과 반격이 필요한 때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일(토)

제 11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본노의 폭발

제 108주년 세계노동절

본노 서린 군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경제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떠맡은 채 실업대란에 휘말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재벌재산 환수'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예비실업자의 처지로 내몰린 대학생들과 생존권의 위협을 겪고 있는 시민들 또한 이 대열에 합류했다.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제10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는 노동자·민중들이 제벌과 부패관료 등 기득권 세력에게 최후의 경고장을 보내는 자리였다.

종묘공원 기념집회

이날 오후 종묘공원에서 수만의 인파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주최측 추산 3만5천명, 보도진 추산 2만 명.

20대 청년노동자에서부터 깊게 팬 주름의 중년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참석자들의 표정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 갑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전 간부진과 각계 사회인사들이 대거 자리한 연단의 분위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노래패 '꽃다지'의 공연에 맞춰 즐겁게 노래를 따라부르며 힘차게 팔뚝을 치켜들던 한 아주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보였고, "더 이상 우리를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부랑자로 만들지 말라"는 사회자의 외침은 절절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 연단에 선 이강

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의 '한판 투쟁'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권은 명백히 자본가와 기득권세력을 위한 정책만을 시행해왔다"며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을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할 것을 당당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재벌체제의 해체와 총수재산의 환수 △노동탄압 기업주에 대한 구속처벌 △불로소득세에 대한 고용세 부과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IMF 제협상 △택시완전월급제를 비롯한 대선공약의 즉각 이행 및 공공부문 감원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말-6월초에 걸쳐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지도부를 제척시킬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전세계 노동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치열한 가두시위

한편, 집회가 끝날 무렵이던 오후 3시 30분경, 집회장소인 종묘공원으로 난데없이 경찰의 최루탄이 날아들었다. 당초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이기로 되어 있던 참석자들은 평화적 집회에 최루탄을 난사한 경찰에 분노했고, 하나둘씩 짱들을 집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시위대와 전투경찰 간의 공방전은 종로3가와 종로4가를 오가며 세시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다.

같은 시각 을지로4가 일대는 대학생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 3백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전투경찰과 대치한

대학생들은 노래와 구호를 섞어가며 거리를 '해방구'로 삼았고, 이어 퇴로를 거쳐 충무로로 이동했다.

저녁 6시경 종로에 있던 시위대가 충무로로 합류하면서 다시 시위대와 전투경찰 간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측은 몸과 몸을 부딪히며 대치했고, 시위대는 명동성당까지의 행진을 계속 요구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길을 터주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결국 저녁 6시 30분경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난사하며 대열을 밀어냈다.

명동성당 정리집회

명동성당으로 들어간 민주노총 지도부와 일부 대열은 긴급기자회견과 정리집회를 갖고 경찰의 폭력해산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명동까지의 행진은 사전 집회신고에 의한 적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야만적인 폭력으로 행진을 가로막았다"며 "이는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본질을 너무 쉽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승환(한국후포우 노동자), 임세진(전국연합 간부), 정태균(인덕전문대 학생) 씨등 시위대 다수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범민련 김영제 씨 연행

안기부 이송 예정

범민련 전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영제(43) 씨가 1일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해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활동과 관련, 수배상태에 있던 김 씨는 1일 종묘공원 집회장으로 가던 중 체포돼 구로경찰서에 구금됐다. 김 씨는 곧 안기부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료 납부!

**전국 모든 은행
지로번호 7618848**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지난 겨울 프랑스는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실업자, 무주택자, 이민노동자, 임금노동자, 학생, 여성들의 "우리에게 직장을! 빈곤이 아니라 부를 나누자!"는 연대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인구의 12.4%인 3백만 명이 이상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나라, 프랑스. 그러나 실업자가 2백만 명(정부통계상)에 가까운 우리에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그 겨울 프랑스 전국 실업 보충청은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연대 기금'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매년 받아왔던 성탄 보너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실업자들이 마르세유에 실업사무소를 점거함으로써 실업자투쟁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투쟁의 밑바닥에는, 유럽 단일 통화의 조건인 재정적자 삭감을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 축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 깔려 있다.

프랑스-사회보장 축소 정책 항의

따라서 실업자들 뿐 아니라 무주택자, 이민노동자, 임금노동자, 여성, 학생까지 이에 가세하였고, 그들의 요구도 성탄절 특별 수당을 넘어서, > 모든 실업자를 위한 정규 수당 인상 >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 모든 배제에 대한 반대로 확장되었다.

이들의 행동 양식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무주택자들은 파리의 건물 점거를 시도하였고, 실업자들의 전기를 끊는 전력공사를 점거했으며,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생대주의자들이 포함된 급진 그룹들은 파리의 고급식당 푸케와 꾸뵐을 점거하여 극단적인 빈부 격차에 대한 상징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시위대는 많은 국가 지도자들을 배출한 파리의 명문 대학 파리고등사범학교를 점거, 지성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는데, 이에 이 대학의 학생, 교수들까지 참여했다.

이와 같이 한달 넘게 진행되었던 실

업자 시위에 대한 한 여론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70%가 이들의 시위를 '정당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95년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당시에도 57%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경험을 상기해 볼 때 그다지 의외는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신을 언제든 실업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실업자로 보고 있으며, 실업이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 시위에 대한 지지는 높다.

프랑스 국민 70% 지지

오랜 싸움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결국 저소득계층을 위해 5백억 프랑(103조원)을 투입하는 소외방지법안과 35시간으로의 주당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 원충장치를 국가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진정한 성과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실업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조직화해냈고, 단순한 구직자가 아니라 빈곤층으로 자신을 규정지면서 이민노동자, 무주택자 등 같은 빈곤계층들과의 연대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업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이고, '실업자 조직'은 붙은시된다. 실업자 동맹에 대해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동부, 실업자의 조직화 움직임에 대해 실정법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하겠다는 의기양양한 검찰과 고개 숙인 실업자들의 모습만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임금노동자들과 실업자, 비정규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끈끈한 연대의 운동을 기대해본다.

미국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대표인 마이클 브라운 씨가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대 수출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가 주최한 회의에서, 그는 "한국의 노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에게 다섯번째로 큰 해외시장인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브라운 씨는 구조조정이 한국의 경제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 10여년간 미국의 경쟁력 복원의 선례를 들어 설명했다. 즉,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요기업들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단행함에 따라 수천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노동자들의 조업 중단시 대체근로 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파업권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노동권 기금(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의 대표인 페리스 하비(Pharis Harvey) 씨는 "미국 기업들은 대체근로 고용을 비롯한 법적 방편들을 통해 미국에서 노동권을 깎아먹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이 미 실업문제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 요구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 출처 : IPS(InterPress Third World News Agency) 워싱턴 발 4월 26일자 Tim Shorrocks의 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5일(화)

제 1118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국민의 정부 처음으로 폭력시위가 발생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 방침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불법수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 중 이훈재 씨(고려대, 98학번)는 전경들에 의해 무수히 구타를 당해 은몸에 멍이 들고, 안면과 왼쪽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중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씨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고 통증이 더욱 심해진 3일에서야, 강북 삼성의료원에서 진찰받는 것을 허용하였다. 진단 결과는 균핵발에 무참히 밟힌 왼쪽 눈 주위의 뼈가 함몰되어 당장 정밀 CT 촬영을 받고, 2주 내에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강행 방침에 따라 그는 왼쪽 팔만 기브스한 채, 경찰서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4일 오후 4시 40분 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씨 외에도 경찰에 의한 집단 구타와 불법연행의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전국연합의 임세진 부장은 전경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구타 도중 다행히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구출되어 병원에 실려간 임씨는 결국 머리 두 군대를 15바늘이나 꿰매고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치료중이다. 서울대 3학년 장진범 씨는 시위 이후 동국대 근처에서 뒤돌아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게 폭력을 당했다. 5월 4일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범죄 행위'를 할 수상한 거동도, '홍기'도 없었던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제 시도 없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인덕전문대 정택규 씨는 전경이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아 윗입술이 찢리고, 이빨 세 대가 부러진 데다가, 잇몸과 뒤통수가 함몰되는 상처를 입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3일 동안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5월 4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일의 노동절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불응시 검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안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서를 발표, "5.1절 행사의 우발적 충돌을 의도된 폭력시위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그날의 충돌이 대량 실업 사태와 경제위기의 파장이 노사

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노동계에 전가되고 있는 데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지난해 6월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 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이철용 씨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관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3반장 등 네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이 씨는 한총련 출범식에 재야세력으로서 연대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려 했던 자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이를 공군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과거 탈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군부대로 이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또 자신의 부상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황 아무개 경감 등 세 명의 경찰관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씨와 담담변호인 이정택 변호사는 경찰의 폭력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주요 공판 안내

- ▷ 5월 6일 (수)
 - 나철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조세형(보호감호처분 재심) 오후 4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 ▷ 5월 7일 (목)
 - 주장환 (명예훼손)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8부, 속행
- ▷ 5월 8일 (금)
 - 엄기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 김종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이천재 (국보법 간첩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 지응호 (무고) 오전 10시, 서울지법 423호, 합의7부, 선고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지난 2일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는 여러 진보적 통신단체들의 주최로 최근 통신인들의 구속에 대한 '사상·표현의 자유보장과 구속통신인 석방을 위한 집회'가 관련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도 휴지조각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 이후 통신공간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인권과 사상의 자유 탄압에 대해 김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남북분단이라는 명목하에 수없이 자행된 공안정국 조성을 가능하게 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인들은 오동진(한국통신노동자)씨와 하영준(한양대사학과)씨, 조용신(나우누리 민중가요 동호회 운영자)씨 등 통신인 3명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에 항의해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통신자료를 위한 모임, 청년정보문화센터, 한국통신 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나우누리 맑스 동호회·찬우물·메아리(언론비평동호회), 하이텔 인터네셔널·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참언론을 사랑하는 모임 등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우누리 민중가요동호회에서는 지난 3일 자정에 운영자 구축에 따른 온라인 시위를 가졌다.

통신에는 "대화방에서 당신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대화방에는 있지도 않는 누군가가 열보고 있다면..."(deker)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아리) "안기부도 이름을 바꾸는데 약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samuel) "약법도 법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지금 약법은 법이 아니다"(신속배달) 등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후 민가협 목요집회 참석과 5·18 광주행사 참여 등 현장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연행 이틀만에 이례적인 조치

지난 1일 경찰에 연행, 안기부에 이송되었던 전 범민련 집행위원장 김영제(43) 씨가 3일 무혐의 석방되었다. 지난해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 활동과 관련, 수배상태에 있었던 김씨에 대한 안기부의 무혐의 석방은 범민련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전 안기부의 태도에 비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어린이날 휴일 관계로 내일 자 쉽니다.

주/간/인/권/호/름

(98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4월 27일 (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춘 대법관),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연행됐던 시민 김남연 씨등 5명에 각각 2백만 원씩 배상 판결/서울대 총학생회, '에비실업자 선언운동' 펼쳐기로/박상천 법무부장관, 민주노총 대표 7명 만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단방침 밝혀/일본 야마구치현 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한국인 군대 위안부 및 조선인여자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 이순덕 씨 등 3명의 위안부 출신자들에게 일본국은 각각 30만 엔씩 총 90만 엔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29일 (수)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 시한 7월 31일까지 연장/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야마구치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 판결에 불복해 일본 고등법원에 항소 의사 밝혀/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배무기), 올 3월 말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총 10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4건에 비해 무려 112% 증가했다고 밝혀

◆30일 (목)

대검찰청 강력부(임휘윤 검사장), 미성년자와 유락행위 적발되면 예외없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징역형 구형하기로 하는 등 미성년자 유락행위 근절방안 마련/일본 <니혼게이지이신문>, 한국과 타이, 인도네시아 등 IMF 구제금융 대상국들이 96년에 비해 실업률이 2-4배 증가해 실업자가 1천3백만 명에 도달했다고 보도/서울지검 공안1부, 오익제 편지사건등 북공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 구속

◆5월 1일 (금)

노동절 맞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규모 기념행사와 집회,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과 학생·노동자 충돌해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격렬 시위/광주지검 순청지청, 교수 체용과 관련해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순천대 최덕원 총장 구속

◆2일 (토)

<콤파스데일리>,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시위 한층 격렬해지면서 3개 도시에서 대학생들이 보안군과 충돌해 학생 60명과 경찰관 7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세계식량농업기구,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 식량부족을 겪게 될 나라가 지난해 31개국에서 37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미 잡지 <뉴요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르완다 정부의 투치족 학살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나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

◆3일 (일)

정부, 노동절 집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합법적으로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불법 폭력시위 주도세력을 분리처리하기로/서울 동부경찰서, 술집에 고용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함아무게 씨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 신청

인권
시평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요즘 내 머리에는 몇 년 전 읽었던 한 그림책이 자주 떠오른다. 1928년 대공황 전야에 미국에서 출판된 『백만 마리의 고양이』가 그것이다.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어하던 중 할아버지가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언덕에 도달한다. 할아버지는 그 고양이들이 모두 예뻐서 다 데리고 오게 된다. 집에 담도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껌을 내어 고양이에게 가장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결정토록 한다. 그러자 고양이는 서로 물어뜯고 핏물을 흘리며 그 예쁜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자신임을 주장하다가 모두 죽게 된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의 고양이는 할아버지가 "아우아,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나 되는 고양이들 중에 오직 너만 살아 남았으니 어떤 일이지?" 하고 묻자, "할아버지께서 누가 가장 예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랑 싸우려 하지 않았지요"라고 대답한다.

만만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는 실업이다. 날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쫓겨난다. 회사와 가족을 위해 뼈까지 일만 했던 가장들이 졸지에 실업자로 거리에 내몰린다. 가까스로 쫓겨나지 않은 노동자들도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일자리 동료가 어울리게 강제 퇴직을 당해도 외면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노동자는 하청업체가 해고를 당하는 것이 다행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나라로 쫓겨가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우선 급한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대한민국'의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 그런 절망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파급된다. 가난이 싫다며 죽는 아이들까지 생겨날 정도가 아닌가.

치열한 경쟁은 필연이고, 살벌한 '시장'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싸워 이기라는 죽음의 독려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5월1일 종묘공원에서 제108회 세계 노동절 집회가 열렸다. 매년 있는 집회였지만,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 집회에 쏠린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IMF의 비위를 건드리는 주장이나 행동이 나올까 정부는 전전긍긍했고, 개혁은커녕 오히려 경제 위기를 역이용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던 재벌들도 자신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분출될까 봐 주시했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어느 때보다도 IMF와의 제협상, 재벌개혁, 실업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질박하게 외쳤다.

대회가 무르익어 갈 무렵 노동자들의 대오 속에는 도시락이 나누어졌고, 다 먹은 도시락은 종이 상자에 담겨 길가에 모아졌다. 그때 주위에 있던 부랑인들 중 일부가 노동자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찾아 먹었다. 그런 모습은 종묘에서만이 아니라 시위 도중의 길거리에서도 종종 눈에 띄었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지도 모를 그 모습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음식 쓰레기 주워먹던 부랑인

IMF는 경제개혁을 이유로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구 사회주의 동구유럽에서도 심지어는 아이들의 급식마저 빼앗고, 그 아이들이 배우던 학교마저 문닫게 만든 잔혹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최근 진보학자들의 분석서들을 통해 고발되고 있다. IMF를

비롯한 각종 국제금융자본들은 '세계화'라는 거창한 화두를 앞세우는 인류 최대의 경제침략자임이 이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들의 착취적, 투기적 행태는 오히려 규제받아 마땅하고, 규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정부도 재벌도, IMF와 외국자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설설 가는 쥐 꼴이다. 대통령은 폭력시위보다 최루탄과 돌이 난무하는 그 시위 현장을 침묵으로 끝까지 지켜본 다수의 거리의 시민들을 주목해야 한다. 마치 10여년 전 '전두환 정권 타도'를 외치던 학생들의 시위를 말없이 지켜보았던 그 다수의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있던 거리의 사람들이 에타게 무엇을 열망하는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경쟁을 거부하고 연대를 실천할 때

백만 마리의 고양이는 하나의 밥그릇을 저마다 차지하려다 서로 죽고 죽었다. 지금 치열한 경쟁으로 내모는 세계화의 논리는 오로지 탐욕스런 경제 논리로 인류가 쌓아온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압살한다. 치열한 경쟁은 필연이고, 살벌한 '시장'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싸워 이기라는 죽음의 독려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각자 살길을 찾아 절망스런 전의를 불태울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의 가치를 찾아야 할 때다. 또, 마지막 살아남은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싸움판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넘어 서로 싸우면 다 죽는다는 것을 목소리 높여 동료들에게 외쳐야 한다.

인권의 기본은 연대성이다. 유엔이 발행한 어느 인권 시리즈에서 서술하였듯이 "연대란 인류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질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경쟁을 거부하고 세계 곳곳의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일만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진정한 생존을 확보하는 길이지 않을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7일(목)

제 11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 해고 우선

백없이 생존의 위협에 방치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른바 '사내 하청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IMF시대 이래 최우선의 인원정리 대상이 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힘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행태는 회사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해지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같은 회사 내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는 등 차별대우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현재 용역업체의 수는 67개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정리되고 약 10여 개 업체만 남아 있다. 용역업체 당 노동자들의 숫자는 평균 60-70명 선이며, 따라서 약 3천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해고를 당한 셈이다. 아시아자동차에서도 지난해 약 1천2백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도 챙겨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비정규직노동자 전국모임] (대표 김기일)을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기일 전국모임 대표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적인 파견근로

자에 해당하며, 이들은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 등 사무직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96년 9월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6백만 명 노동자 중 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국모임측은 전국적으로 약 1백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다. 김 대표는 "대부분 회사 내의 3D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도 정규직에 비해 50-80% 정도의 수준인데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

장 혜택도 별로 못받는 속에서 해고시엔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작업복의 색깔마저도 다르게 입고 있어, 정규직은 상류계층, 비정규직은 하류계층으로 취급하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임금이 적다보니 인격적으로도 무시당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등의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신규채용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얻어내고, 나아가 비정규직도 똑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가정의 달 5월에도 아이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만병통치 아니다”

민주노총, 2기 노사정위 불참

대량 해고, 실업 등 일방적으로 고용 전담을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선언했다. 6일 민주노총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정치 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노사정위에 참여 않겠다”고 전제하며, 핵심직 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인 대외신인도 제고와 고용안정 등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근로자과거제 등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당한 바 있는 민주노총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또다시 “외자유치를 위해 노동자를 들러리 세우려는 의도”라고 규정짓고,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재벌과 정치권 개혁 및 대등한 협상기구로서의 노사정 위상 정립 등 본질적인 개혁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또 ‘경제위기 극복-외자유치’라는 일반적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와 같이 국내 경제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외자유치는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불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국민의 혈세로 키운 공기업마저 국민과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투쟁이 외자유치에 타격을 주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금융위기는 오히려 무분별하게 외자(Hot Money)를 유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경제토대를 망가뜨리는 무분별한 외자유치에 반대하고, 노조와 고용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외자유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시위 이후 강드씨의

금지 인화 발언을 예로 들면서, “IMF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싸울 때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인식 하에 △경제과당 책임자 처벌 및 제벌제해체, 제벌총수 재산 환수 △불로스득자에 대한 고용세 도입, 국방비 감축 등 20조원의 실업기금 마련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장 △부담노동행위 척결 △사회보장제도 개혁 △IMF 제협상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5월말과 6월초 총과업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모든 사회, 종교 단체와의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7일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는 40여 단체의 참여 속에 「고용·실업대책,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 개혁, IMF제협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KBS 개혁프로 불방 규탄
“시민단체 연대행동” 촉구

‘조선일보에 대한 해부’ ‘광주대학살’ ‘KBS 굴종과 오욕의 역사’ 등을 방영할 예정이던 KBS 시사프로그램 ‘이제는 말한다’가 결국 화사측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KBS노조는 지난 4일부터 사실상 앞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 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방송을 취소한다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개혁프로그램을 예정대로 방송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도 6일 규탄성명을 통해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연대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강대영 TV본부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행사와 동정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때: 5월 7일(목) 오전 11시
·곳: 세실레스토랑
- 이용찬의 제주 4·3 역사사진전
·때: 5월 6일(수)-5월 12일(화)
·곳: 인사동 도올아트라운
- IMF와 장애오복지에 관한 공청회
·때: 5월 7일(목) 오후 2시-4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제2회 녹색생명 환경정책 토론회 ‘환경·주민참여·에너지자립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방향’
·때: 5월 7일(목) 오후 2시-5시
·곳: 흥사단 3층 강당
- 통성에 대토론회 ‘통성에, 비정산인가!’
·때: 5월 8일(금) 오후 5시
·곳: 한양대 학생회관 4층 콘서트홀
- 『별이 소리 찾아서』 출판기념회
·때: 5월 8일(금) 오후 4시-6시
·곳: 서초구 여성회관 (522-0291)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민기집 양심수후회회 제10차 정기총회
·때: 5월 9일(토) 오후 3시 30분
·곳: 대학로 흥사단 강당 3층
- 두밀리 반도불학교를 위한 큰 잔치
·때: 5월 9일(토) 오후 4시30분
·곳: 옛 두밀분교 교정
- ‘22일간의 고백’ 시사화
·김태일 감독/다큐멘터리/50분
·때: 5월 10일(일) 오후 3시
·곳: 민예총 강당
- 조성만 통일일사 10주기 추념 ‘98년 평화통일 심포지엄’
·때: 5월 11일(월) 오후 7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조사발표회- 장애인의 선거의식 및 선거환경, 어디까지 와 있다
·때: 5월 12일(화) 오후 2시
·곳: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국회복지포럼
-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창립 5주년 매일노동뉴스 지령 1500호 기념식
·때: 5월 13일(수) 오후 6시 30분
·곳: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8일(금)

제 11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갈수록 과거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여,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노동자·학생 등의 거리시위에 대해 기존의 해산위주 방침에서 검거위주 방침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빚어졌던 공권력 남용과 인권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공격적 시위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87년 이한열(연세대) 씨의 사망, 91년 강경대(명지대), 김귀정(성균관대) 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96년 노수석(연세대)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 정권마다 발생해 왔다. 또한 지난해 김준배(한총련 투쟁국장) 씨가 사망한 것도 무리한 검거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한총련 시위 구경도중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이철용 씨 사건도 검거위주의 시위진압 방침이 빚어낸 결과였다.

이와 관련, 정당상 변호사는 “연행범을 검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검거위주의 진압방침은 자칫 국가폭력까지 용인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위진압 양상으로 볼 때, 과잉진압을 통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경찰의 방침이 ‘폭력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공권력 남용과 경찰폭력에 대한 방지책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또 다른 인권피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잠잠한 듯하던 경찰의 불법 불법검문 이 재개되고 있다.

7일 경찰은 한양대, 외국어대, 시립대, 건국대 등 서울동부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정문 앞에서 일제히 불법검문을 실시했다. 경찰이 검문을 실시한 이유는 “이날 동총련(서울동부지역총학생회연합)의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문이 경찰관지무집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대학별로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 검문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불법 검문을 묵으로 지지하는 행동을 벌인 끝에 검문을 중단시켰다. 또 한양대에서는 법대 학생들이 법전을 들고 나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양대 정문 앞에서 검문을 지휘하던 한 책임자는 “왜 불법검문을 하느냐”는 지적에 “여기서 따지지 말고 상부에 가서 따져라”며 “경찰관지무집행법 같은 것은 모른다. 여기서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계속되는 항의 끝에 한양대에서도 검문은 중단되었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실제 집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대학에서 마구잡이 검문을 벌였으며, 이는 직무수행의 편

의를 위해서라면 법과 인권조차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난 4월 ‘친절검문’을 내세우며 여론의 시선을 피해 가려왔던 경찰이 앞으로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불법 관행을 되풀이 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는 5월 대동제 기간을 맞아 불법검문과 관련한 캠페인을 펼치는 곳이 늘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법대 형사법학회가 지난 5, 6일 불법검문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한양대 법대 학생회도 6일 ‘불법 불법검문 철폐운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양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불법검문 철폐위원회를 꾸렸으며, 다음주중 ‘불법검문의 거리’ 행사를 통해 불법검문 거부운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원 혐의

7일 밤 10시경 박종호 씨등 11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일제히 연행됐다. 이들은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 조직원이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종호 씨는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연행했으며,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일 새벽 현재 연행자들에게 유치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채, 남영동 대공분실에 계속 구금할 뜻을 밝혔다. 경찰이 이들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은 ‘탐색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최근 검찰의 방침에도 위배되는 불법 수사에 해당한다.

한편, 주수영(덕성여대 92학번) 씨도 이날 밤 11시경 같은 혐의에 의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⑬ - 문만식(전북 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 인권> 편집인)

지역인권운동의 싹을 틔운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인권하루소식>과는 또 다른 인권전문지를 매주 한차례씩 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령 95호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 문규현)가 발행하는 주간 인권신문 <평화와 인권>이다.

전주교도소의 재소자 인권침해 문제에서부터 '전주시 치매병원 설립 무산' 사건, 군산 미군기지 사용료 인상문제 등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사안들은 어김없이 <평화와 인권>의 감시망에 걸리고, 이는 곧 전국으로 전달된다. 아직 독자층이 넓지는 않지만, 이 지역 내에선 독보적인 인권과 수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와 인권>이 인권의 파수꾼으로 자리잡기까지 문만식(29·4대 편집인) 씨의 고민과 노력은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부정기물이던 이 신문을 주간지로 정착시키면서, 초기의 '지역운동 소식지'를 지금의 인권전문지로 발돋움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준비된 운동권'

전북대 88학번인 그가 운동에 투신한 과정은 '평범'하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선생님이 들려준 '5월 광주'의 이야기를 통해 여느 80년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충격을 겪었던 그는 교내 문예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의식을 접하고, 03 신분으로 참가한 87년 6월 항쟁 경험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운동권 선배를 '현탕'하고 다녔다"는 그의 말은 그가 일찍잡치 '준비된 운동권'이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대학교 2학년 때 교문 앞 시위과정에서 구속돼 98일간의 감방체임을 갖기도 했던 그는 대학 3학년 때 '조직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동권을 떠나게 된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잠시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새벽시장 일을 6개월간 했

고, 이후 천안으로 진출해 1년간 '노동자 학습생활'도 했다. 그러나, 운동에 대한 '미련'과 '일념'은 그를 다시 전주로 불러들였고, 97년 3월 '운동을 하고 싶어' 선배를 찾아가길 결국 <평화와 인권연대>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자생적 인권활동가로

<평화와 인권연대>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곧바로 <평화와 인권>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 생소하기만 했던 그는 이 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권'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인권의 역사', '유네스코 인권교육자료집', '인권의 정치' 등 '인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책들을 하나 하나 읽어보고, 인권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 그의 인권운동의 출발이었다.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한 자료들을 분류하면서 '인권'에 대해 조금씩 눈뜨기 시작했다"는 그는 이른바 '자생적 인권활동가'인 셈이다.

지역인권운동의 난관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인권운동의 싹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다. 서울만 해도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등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전북지역에선 좀처럼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작은 인권사건 하나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지원 하나가 어렵다"고 말한다.

또 지역운동의 특성상 인권운동을 전문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점도 그에겐 고민이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역 내 문제들을 외면하지 못하다보니 이 일 저 일 가릴 것없이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전문적인 인권단체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더 불어 <평화와 인권연대>에서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인권에 대

한 이해수준이 다르고, 활동가들 사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인권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와 인권연대"에서 시작한 인권운동을 통해 많은 성장을 했다"고 말한다. 가장 큰 변화는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 것"이라는 데, "과거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외국인노동자 문제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한 가지 예"라고 말한다. 또 최근 들어 지역언론과 대학생들이 인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평화와 인권>이 가져온 고무적 변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자발적 청빈'을 원칙 삼아

<평화와 인권연대> 식구들도 여타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처럼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문만식 씨에게 지금 월 한달 활동비는 약 40만원 선이지만, 실제로 받는 액수는 대개 20만원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다지 불만은 없는 모습이다. <평화와 인권연대> 활동가 모두가 '자발적 청빈'을 소중한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 인권운동을 꿈꾸며

요즘들어 그는 '노동자정치운동'과 '진보적 인권운동'에 관심이 많다. 대학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그에게 '노동자정치운동'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한가지 이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인권운동이 '노동자운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깊기 때문이다.

어려운 지역환경 속에서 인권운동의 싹을 피우려는 문만식 씨의 분발은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9일(토)

제 1121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IS 혐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

경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이 권영혜 전 안기부장 등의 자해사건 이후 '밤샘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고위직 피의자들에 대해 '통근 수사'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찰에서는 여전히 밤샘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수사는 법원에서조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 관행이다.

지난 7일 밤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 관련 혐의로 연행된 주수영(27·덕성여대 92학번) 씨는 새벽 5시까지 수사를 받고 단 두 시간만 취침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5월 8일자).

8일 오전 주수영 씨를 면회한 가족에 따르면, 경찰은 주 씨에게 "몸이 아프니까 2시간이라도 재워주는 것으로 알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 씨는 2주전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무릎까지 기브스를 한 상태에 있다. 이같은 면회 내용에 따르면,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된 나머지 피의자들도 밤샘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찰은 7일 밤 10시경 IS 관련 혐의로 서울시립대생 5명을 연행한 뒤, 이들이 소속해 있는 '언론협의회' 동아리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밤 10시 30분경 학생회관으로 들어온 전경들이 수색영장과 관계없는 동아리 사무실도 뒤지고, 건물 내에 있던 학생들을 무조건 1층으로 내몬 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압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7일 밤 남영동으로 연행된 사

람외에 유영미, 김동철 씨(부부)가 역시 IS 관련 혐의로 홍제동 대공본실에 구금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또 조영제(28) 씨는 8일 새벽 5시경 자취방에서 연행됐으나, 가족들에게 소제가 통보되지 않고 있다. 조 씨의 연행과정을 목격하던 김 아무개 씨는 "보안4과 소속이라는 형사 5명이 조 씨에게 IS 관련

혐의가 있다며 그를 연행해 갔고, 형선지는 홍제동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연행자는 박종호, 주수영, 박효근, 문명주(서울시립대 행정 91), 류민희(시립대 행정 95), 한규환(시립대 국사 92), 한은솔(시립대 국사 93), 이정원(시립대 환경원에 94, 이상 남영동), 유영미, 김동철(이상 홍제동), 조영제 씨 등 11명이며, 최소 13명에서 15명이 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주수영 씨의 가족은 "경찰이 체포영장과 함께 가져온 종이에 모두 15명의 명단이 올라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지난 95년 폐교된 두밀분교에서 다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두밀리 주민들은 대안학교의 하나로 '두밀리 반딧불 학교'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9일 오후 4시 옛 두밀분교 교정에서 '반딧불학교'를 만들어가는 모임(공동대표 왕종실, 정유성)의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은 "4년 전 폐교 당시 교육청에서 두밀분교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임은 또 '두밀리 계곡을 밝히는 반딧불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를 만들 생각'이라며 "반딧불학교는 옛 두밀분교처럼 두밀리 어린이들을 꺼안고 가르치는 사랑과 배움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된 반딧불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학교로 △마을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과정 △미취학아동을 위한 공동육아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도시와 농촌 어린이들이 함께 만나 자연을 공부하는 주말 및 방학 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두밀분교는 지난 94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조치에 맞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폐교철회투쟁을 했지만 95년 고등법원이 주민들의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학교는 폐교되었다. 그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하고 현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감순원 한신대 교수는 "농촌의 학교는 도시학교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며 "도시와 달리 학교이외에 아무런 문화적 공동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농촌의 학교는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마을주민 전체가 어울리고 노는 사회문화 교육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모임은 옛 두밀분교를 사회교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진정서를 보냈다.

실직노숙자 인권보장 촉구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 가져

실직노숙자에게도 인권은 소중하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직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의사당에서는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실직노숙자(Homeless)의 인권과 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역 실직노숙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가 실직노숙자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해 기초발제를 했고, 이에 대해 심철호(사회복지재단 '사랑의 전화' 회장) 씨, 이광택 국민대 교수(산업사회연구소 소장),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 송경용 신부(봉천동 '나눔의 집' 대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초발제를 맡은 정원오 교수는 실직노숙자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50명의 심층 상담 결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 "노숙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91.9%로서 대부분이 최근의 IMF 사태 이후에 발생한 노숙자"라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고용구조가 취약한 직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다양한 부분의 실직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숙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원오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태함, 의존적, 열등의식, 욕구불만'과 같이 흔히 노숙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그들이 본래부터 지닌 특성이 아니라 노숙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의 실직노숙자 급증의 원인을 "사회보장제도,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미성숙, 소비생활의 대부분이 임금에 의존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가족간의 유대관계 약화"로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그 장기적 대책으로 내놓았다.

토론에 나선 이광택 교수는 "표면상 실업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사회도 부익부빈의 빈 현상이 심화되어, 대다수 민중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상실, 곧 소외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노동권의 실현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김성이 교수는 실직노숙자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기존의 대책이 "국민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노숙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이들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으로 실직 노숙자들의 기본적인 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경용 신부는 특히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일용직 저소득 계층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는 민간단체의 실직노숙자 지원대책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2백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계속됐는데, 정부에 대한 민간 단체의 불신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다.

3시간 넘게 지속된 이번 심포지엄은 실직노숙자 대책에 대해 학계, 민간단체,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교류하는 최초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직노숙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생략한 채, 사후적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에바다 투쟁, 5백28일 경과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장장 5백28일째 제단퇴진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평택 에바다농아학교 청각장애인들이 8일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96년 12월 22일 김 대통령은 에바다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장애인을 치부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러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통합교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계속 자민련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는 에바다농아학생과 에바다공동대책위 회원들은 9일 오후 2시 평택역 앞에서 '에바다 비리제단 퇴진과 장애인 인권수호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에바다제단을 옹호하고 사태해결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선기 평택시장이 최근 자민련의 제공천을 받게 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자민련 중앙당사 앞 농성을 진행해왔다.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인권유린을 파헤친 영화

<22일간의 고백> 시사회

김태일 감독/ 비디오/ 다큐멘터리/ 50분
주요사건: 93년 남매간첩 사건, 95년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

분단을 빌미로 이뤄진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의해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인해온 우리들의 무관심을 질타합니다.

· 때: 5월 10일(일) 오후 3시
· 곳: 민에총 강당 (02-738-6058, 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12일(화)
제 11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지옥같은 노동현장

한국타이어 노동자, "여기는 교도소"

21세기 목전의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준다. (주)한국타이어(대표이사 조충환) 대전공장에서는 IMF와 정리해고 시대를 맞아, 극도로 강화된 노동강도와 통제체제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첨단 경비시스템을 통해 공장 안팎을 구축구석 감시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빌어 '병영'보다 더한 공장 내 실상을 전달한다.

사실상의 강제노동
최근 한국타이어에서는 이른바 '현장 자주보존활동(TPM)'이라는 이름 아래, 작업시간외의 무급노동이 진행되고 있다. 본래 TPM은 '경제위기를 노동자 스스로 헤쳐나가자'는 취지로 기계를 정비하고 작업장을 청소하는 활동 등을 말하지만, 실제로 TPM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과에 근무하는 강영식(가명·31) 씨는 "TPM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무급노동을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강 씨는 또 "TPM을 왜 작업시간 이외에 하느냐고 항의했다가 곧바로 '타부서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활동에 불만을 표시하는 순간 곧 해고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작업공정 1인화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른바 '생산할당량'과

노동강도의 강화다. 현재 대전공장 내에서 승용차 타이어(PCR)를 생산하는 성형과에서는 한 달에 20일만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가 작업공정을 1인화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강영식 씨는 "옛날에는 두 사람이 PCR 230-240개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개조된 기계를 이용한 한 사람이 250-260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일수를 늘리면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때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회사측으로서 걸리는 문제다.

또한 한 달에 20일 밖에 일하지 못하다 보니 노동자들(5급 기준)의 임금이 50-60만 원 대로 곤두박질쳤다. 더불어 작업공정의 1인화가 인여인력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남은 인력이 타부서로 이동되거나 정리해고의 수순을

밧을 수밖에 없다는 데서, 노동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잇따르는 산재사고

또 이같은 노동강도의 강화는 곧바로 노동자들을 쫓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강 씨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3건을 포함해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팔에 기브스를 하고 작업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등 '웬만한' 사고는 산재 취급도 받지 못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5분만에 피문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이곳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형설비 아래서 노동강도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하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그 사실조차 담담히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화장실이 곧 휴게실

특히 무리한 생산물량에 맞추기 위해 선 휴식시간조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다.

☞ 2면으로 이어짐

.....주요 공판 안내

- ▷13일(수)
 - 나현균(폭력, 전 전해주위원장) 오후 4시,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 정재영(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김영진(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 김보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총련)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 ▷14일(목)
 -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변경
 - 김대성 외5(집시법 등,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이철우 외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총련)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이철우(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강상구(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15일(금)
 - 이장희 외1(국보법)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 524호, 4단독, 변경

유일한 휴식공간 '화장실' 변듯한 휴게실, 눈치 보여 못가

▶ 1면에서 이어짐 <한국타이어>

이들의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은 화장실에서 가장 작나라 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강영식 씨는 "50이 넘는 아저씨가 화장실에 꾸그러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검사와 박성철(가명·32) 씨는 "화장실 옆에 '끝내주는' 휴게실이 있지만, 관리직에게 찍힐까봐 함부로 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박 씨는 심지어 "검사와 화장실은 문짝마저 때어버려 소변보는 모습을 밖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또한 식사시간도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형과 김주영(가명·28) 씨는 "식당까지 걸어가는 시간, 밥 먹기 위해 줄서는 시간을 빼고 나면, 5분 동안 밥을 먹고 뛰어서서 담배 한 대 피우면 끝"이라고 말했다.

가로막힌 '단결'

그러나, 이같은 불만이 쌓여도 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사실상 원천봉쇄되어 있다. 박성철 씨는 "회사측이 공문을 통해 단합대회를 금지한 것으로 안다"며 "반장(관리직) 참여없이 5명 이상 술자리를 가져본 일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가 있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대의원을 모두가 친회사측 인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노동자들은 미리 주임(관리직)에게 입후보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놀랍게도 대의원선거는 사실상 공개투표로 치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투표행위는 붓뚜껑을 후보자의 이름 옆에 찍는 방식이지만, 한국타이어에서는 투표자가 친필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각자가 소신껏 행동할 수가 있지만, "찍이면 그만뒀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속에서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3월 치러진 대의원선거에서 이른바 '민주파' 대의원은 단 한 사람도 당선은 커녕 출마조차 못한 것으로 전한다.

패배주의와 희망

97년 해고된 박희태(29) 씨는 "지난해 해고자들의 투쟁이 흐지부지 끝난 이후 회사 내에는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말한다. 박성철 씨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탄압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것"이라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일하면서 신경질이나 팡팡 내는 것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과거 섬유계통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거기는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영식 씨는 "입사 초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애가 '나 전업 안해요'라고 단정히 말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면서,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면 나름대로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걸었다.

주/간/인/권/호/름 (98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 4일(월) KBS노조, 시사프로그램 <이제는 말한다>가 사측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항의농성 돌입/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용수(71) 할머니 등 3명,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발해 정부 지원금 3천1백50만원의 수령 거부/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위원회, 3일부터 아프리카트헤이트 치하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유적활동 등에 대한 청문회 시작

◆ 5일(화) 노동부, 현재 진행중인 1차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4만5천9백91명 중 절반 가량이 2만2천5백26명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됐다고 밝혀/AFP연합, 유럽 최대 노조인 독일 금속노조 임금 삭감없이 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단축할 것 제의 예정

◆ 6일(수) 교육부, 사립대학의 교수임용 비리 의혹, 재단 비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립대학 분규처리를 전담할 사회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대도 조세형 씨의 변호인인 임상의 변호사, 84년 10월12일 청송교도소에서 조 씨와 함께 독거수용시설인 7사동에 수감돼 있던 박아무개 씨 의문사 당했다고 전해/정부, 올해 확보된 실업대책기금 7조9천억 원 중 38%인 3조원을 6월말까지 집중배정키로/검찰,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검거위주로 전환해 강력 대응 방침/김대중 대통령, 올해 말까지 70%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내년 상반기까지 1백% 실시하도록 지시

◆ 7일(목) 민주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50여 노동·사회·종교단체, '고용·실업대책과 차별개혁, 국제통화기금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시키고 민간차원의 실업극복 대책 마련/정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에게 1인당 3천4백50만원씩의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용산구 도원동과 동대문구 청량1동 철거민 등 13명, 청와대 정문 앞에서 주거대책 마련과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박종호 씨등 11명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조직원 혐의(국보법 위반)로 연행/외신종합, 인도네시아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주민 폭동으로 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가운데 공공건물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등 약탈과 반정부시위 계속 확산

◆ 8일(금) 5백여 일제 제단퇴진투쟁을 벌이고 있는 에바다 농아학교생들,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요구

◆ 10일(일) 서울경찰청, 민원부서 경찰관들의 비리근절과 경찰기강 확립을 위해 집중 감찰활동 벌여/경찰청,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3천4백22명에 이르는 전국 파출소 중 10% 가량이 3백여 개 통합해 예정/서울시교육위원회 이수호 위원장, 시내 초·중·고교 중 도서관이 없는 학교 전체의 14.2%에 해당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13일(수) 제 11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해방? 꿈도 꾸지마라”

정치연대·전해투 유인물 등 ‘불은’ 낙인

“암울한 시대라도 해방을 꿈꾸는 것은 불순한 생각이다!” 지난 1일 노동절 집회 이후 검찰의 시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검찰총장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현장에서 수거된 문건들에 의하면 좌익세력들은 여전히 정부를 반노동자 반민주 정권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노학연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폭력시태를 선동한 배후세력을 색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5월 1일 집회현장에 배포된 유인물 중, 서울연합, 정치연대, 전해투, 서울대 학생연대 명의의 유인물에 대해 △5월말 대학생 총궐기 투쟁 선동 △민중해방, 노동해방, 인간해방 선동 △노동해방 건설을 위한 투쟁 선동 △미국의 영구분단책동 분쇄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순'이란 딱지를 붙였다(관련내용 상자 참조).

목비권 행사에 과섬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목비권을 행사한 것이 과섬죄에 걸렸다. 12일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제)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목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적단체구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순제, 윤수근 피고인

지적하는 것이 일정부분 편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는 사상의 자유 아래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수 변호사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는 책들을 보관했다고 처벌하는 것 역시 형사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선고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검찰이 지목한 '불순 유인물' 내용>

- 5월말 대학생 총궐기 투쟁 선동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철폐, 재벌-금리생활자 개인재산 몰수를 통한 실업예산 확보, 누진세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장을 멈추고, 대학을 멈추고, 세상을 멈추시다. (4.30자 서울대 학생연대 명의 유인물)
- 민중해방·노동해방·인간해방 선동
 -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 당하는 전세계 노동자 계급과 민중과 연대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발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공세를 투쟁으로 진압하고 민중해방,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세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땅의 노동자·민중이며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5.1자 정치연대 명의 유인물)
- 노동해방건설을 위한 투쟁 선동
 -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세계자본가들의 경쟁적 자본축적 과정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생산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발버둥쳤고, 그 결과 경제공황으로 치달은 것이다. 이들 스스로 파멸을 원한다면 파멸의 길을 가도록 놔두자. 그리고 우리들은 노동해방 세상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5.1자 전해투 명의 유인물)
- 미국의 영구분단책동 분쇄 선동
 - 단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노동자의 뜻대로 남북 통일운동 진영의 통일단체에 기초한 거족적인 민족대단결을 올해 8월에 반드시 실현하여 미국과 IMF의 음모를 분쇄하고 통일조국의 전환적 국면을 획기적으로 만들어감시다. (5.1자 서울연합 명의 유인물)

동성애, 비정상인가?

동성애자인권연합 등, 토론회 개최

지난 8일 한양대에서는 대학동성애자 인권연합(대표 양지용, 대동인) 주최로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성애 인권운동에 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동성애에 관한 토론회는 몇 번 있었지만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당하게 사회로

대동인 대표 양지용 씨는 "지난 95년 이후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Coming Out)을 돕고 동성애자 공동체의 질적 발달의 기초를 이룬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양지용 씨는 "그러나 그 동안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소수에 의해 한정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신장을 집약적이고 결집된 목소리로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정치적 이슈로 내세워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자로 참석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씨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인권운동이 양심수, 정치범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온 한계를 벗어나 '성적소수자의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함으로 새로운 인권개념의 지평을 넓힌 것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갖는 큰 의미"라고 말했다.

사회운동과 연대 필요

최은아 씨는 "우리나라의 동성애 운동은 '천막'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인권운동'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은 동성애를 '개인적인 선택'이나 '취향'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관계'속에서 모색하려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의 끈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성애자 자신들이 소수자로서의 자각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씨는 동성애 인권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고용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조항 신설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 실시 △동성애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지용 씨는 현재 동성애자의 인권상황에 대해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된 97년 말부터 탄압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 밝히고 "문화부문에서의 탄압과 에이즈를 이유로 한 탄압, 동성애자 업소에 대한 불법단속 등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무리한 학생운동 탄압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영장제시없이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법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 아래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관련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검거하여 현재 50여 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 후에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속학생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미 오래 전에 발간된 책을 문제삼고 교지에 실린 글, 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과 교수의 논문을 통신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편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현 정부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인권의식과 잣대를 가지고 학생운동을 무조건 불온시하여 체제전복

세력이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은덩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강경일변도인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을 전향적으로 전환할 것 △학생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인권유린 행위 방지를 촉구했다.

IS 검거, 프락치 덕

회원 침투, 회의내용 녹취

지난 7일과 8일 사이 연행된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 회원들은 경찰 프락치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구금중인 박효근(국민대 중문 86) 씨는 자신을 잠깐만 조공회 변호사를 통해 "박장미라는 지부원이 사실은 경찰의 프락치였다"며 "98년 2월까지 지부모임의 회의내용 등이 모두 녹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박효근 씨는 또 "박장미 씨는 '지원'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대우자동차의 한 정비소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연행된 국제사회주의자그룹 회원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6명,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11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학계 공동성명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전국 사회복지학 교수 209명은 12일 대량실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불행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기존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노동계·시민단체·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실업기구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14일(목)
제 11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교육계 논란

학생체벌, '사랑의 매'일 수 있는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없애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높일 것이다"는 취지로 매의 제질, 체벌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학생체벌 지침' 마련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매의 제질과 종류 등 체벌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우선 '사랑의 매'는 나무나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길이는 50-60cm, 두께나 굵기는 3-5cm 정도로 하고 체벌 방법은 남학생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여학생은 손바닥으로 제한해 비인격적인 체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체벌장소의 경우, 급우들 앞에서의 체벌이 비인격적이라는 인식 하에 교사들만 있는 장소로 제한했고, 체벌대상은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잘못을 3회 이상 어긴 학생 등으로 하되 학생이 체벌을 원치 않을 경우엔 교내 봉사를 시키거나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의 이은옥 씨는 "기본적으로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학생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과잉체벌이 행해지는 현 상황에서, 강원도 교육청이 체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는 "체벌문제

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히고,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체벌을 유발시키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시급히 '체벌 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역시 "체벌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할 교육청이 그런 지침을 내린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의 관계자는 "학생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하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약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방식을 떠나 체벌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일 뿐더러 일종의 폭

력"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체벌이 없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당국, 노동자 추적

5·1절 시위자 사진채증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추적'이 진행중이다.

5.1 노동절 가두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사진 채증에 의한 추적 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노동자들에 대해 출두 요구를 하는 한편 이들을 연행, 수배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재환 씨 등 9명에게 출두를 요구했으며, 그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한라중공업 나성훈 씨와 현대자동차 배만수 씨 등 5명에게도 출두를 요구했다.

▶ 2면으로 이어짐

만화 사랑방



이동수

... 변함없이! ~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제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 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제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전국 40여 개 지사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는 산재 환자에 대한 '재요양 억제', '강제 치료종결', '입원환자 통원조치' 등을 통해 총 5백32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각 지사별로 환자 5% (1760명) 이상을 '색출'해 치료종결 조치함으로써 요양비 및 휴업급여 159억6천8백만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입원환자를 방문해 통원여부를 결정하고, 통원환자는 월 1회 이상의 면담 등을 통해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하며, 치료종결심의회의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재요양 환자에 대해서도 "급속 편제거 등 당면 재요양이 필요한 환자 이외에는 재요양심의회의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20% 이상 재요양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1백14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입원환자가 통원환자에 비해 약 7.3배 정도의 진료비가 더 부담된다는 이유로 입원환자의 10%를 통원조치할 방침이며, 1년 이상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소속사업주에게 보험지급액을 알려줌으로써 '자주적 요양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책에 대해 전국산재지업병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등은 "고통분담을 빙자해 노동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등은 14일 오후 2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라승관 차장은 "노동계의 지나친 오해"라며 "이번 대책은 보호해야 할 산재환자를 더 확실히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IMF제제 아래 많은 사업장이 도산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엔터리 환자'를 가려내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 라 차장은 또 "급여는 늘고 정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조세를 늘릴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추적> 1면에서 이어짐

또한 경찰이 LG화학 청주 지부장 최수희, 조지부장 주명국 씨를 사업장에서 연행하려다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상계백병원 이용희 지부장과 여의도성모병원 주상환 조지부장을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행사와 동정

- 5·18 국제학술심포지엄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때: 5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곳: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
·주최: 한국사회학회 (871-8747)
- 전국실업자동맹(준) 실업대책 수립촉구 서명운동
·때: 5월 14일(목) 낮 12시-1시30분 ·곳: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
·주최: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 '산재노동자 생명권 박탈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
·때: 5월 14일(목) 오후 2시 ·곳: 근로복지공단 본부(영등포로타리)
·주최: 전국산재지업병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때: 5월 15일(금)-5월 17일(일)
·광주(숙식: 무등산파크호텔/토론회: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
·주관: 아시아인권위원회(홍콩), 광주시민연대모임
- 민기협·유기협 정타
·때: 5월 15일(금)까지 ·곳: 서울대 학생회관
- 시민운동지원기금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제3회 한국시민운동상 시상식·'98해빈기 지원사업 발표회
·때: 5월 15일(금) 오후 5시-7시 ·곳: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주최: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704-9830)
- 5·18 18주년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과 민주개혁 실현 결의대회
·때: 5월 16일(토) 오후 1시30분 ·곳: 종묘공원
·주최: 전국연합
- 고용안정과 민중생존권 시수를 위한 결의대회
·때: 5월 16일(토) 오후 2시 ·곳: 종묘공원
·주최: 민주노총
- '인도네시아 민주화 촉구 및 시위 폭력진압 반대' 시민사회단체 집회
·때: 5월 18일(월) 낮 12시 ·곳: 인도네시아대사관 부근
·문의: 참여연대 (723-5300)
- 재주 4·3항쟁 기념 전시회 및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
·때: 5월 19일(화)까지 ·곳: 광주 송월갤러리(송월백화점 8층)
·주최: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62-227-600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15일(금)

제 11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우연한 만남' 트집

기획사 실장, 경찰에 시달려

경찰이 수배자를 잡기 위해 한 기획사 운영자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하고, 심지어 사업과 생명을 담보로 온갖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충무로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는 한 아무개 씨는 "지난 4월말 경 수배 중인 유병문(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96년 한총련 조동위원장) 씨를 만났다는 이유로 계속 경찰의 시달림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씨는 유병문 씨가 동국대 총학생회장이 되기 전부터 자료집과 포스터 제작 사업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유 씨가 수배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4월 말경 유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를 만났고, 이때 유 씨는 "요즘 글을 쓰고 있는데 책을 내고 싶다"며 "원고가 마무리되면 보내겠다"는 말을 전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경찰이 찾아온 것은 그 직후. 한 씨는 "수배자를 만난 사실은 총학생회 몇 명만 알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내용이 새는지 경찰은 확실한 정보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당시 형사들은 "동국대에 등록금을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 알아냈다"고 말했다고 한 씨는 밝혔다.

경찰, 프락치 강요
'본청' 소속이라고 밝힌 형사들은 한 씨에게 "지명수배자를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죄지만 우리를 도와주면 보호해주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섞어가면서 한 씨에게 사실상의 프락치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한다. 형사들은 한 씨에게 연락처를 적어주며, "유병문 씨가 오면 우리에게 연락해라.

그리고 그에게 만나자고 하면 우리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들은 근처 다방 또는 여관에 상주하면서 한 씨 주변을 계속 감시했으며, 심지어 한 씨가 출퇴근 또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때로는 "의형제를 맺자"고 회유하다가도 "다리를 분지르겠다. 생매장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으며, "세금을 들먹이면서 '말 안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국민승리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14일 낮 1시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 '전국실업자동맹을 준비하는 사람들'(747-8219)과 '국민승리21'(763-0102)에서 진행하는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과 범국민서명운동이 한창이다. 막 서명을 마친 50대 후반의 한 아주머니는 "제법들은 몇 년씩 먹고 살 것을 다 장만해 놓고 있는데, 그 재산이라도 환수해서 실업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같이 서명에 참여한 다른 아주머니도 "정부는 실업대책에 적극적이지 않고, 말과 행동도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며 거들고 나선다.

서명작업을 하는 회원들 옆으로는 길을 따라 선전벽보가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싶을 뿐이다"는 실업자들의 요구는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 △실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등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약 1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250-350만 명의 실업자에게 1년 간의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선 약 10-14조의 실업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기금의 마련을 위해 이들이 제시하는 대책도 구체적이다. 첫째, 높은 금리로 폐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자제한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이자소득세 약 1조6천192억에서 2조3백60억을 추진할 것. 둘째,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3조원 마련. 셋째, 부정축제한 제벌총수 및 부패관료, 부패정치인의 재산환수. 넷째, 대대적 군비축소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이 이들의 제안이다. 이날로 세 번째 진행된 캠페인은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마다 청량리, 영등포 등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의 눈으로 본 광주”

한국사회학회, 5·18 국제 학술심포지엄

다시 오월이다. 광주민중항쟁 18돌을 맞아, 광주민중항쟁을 인권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1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사회학회 주관, 5·18 기념재단 주최 하에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주제로 광주민중항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는 노르웨이대의 요안 갈통(Johan Galtung) 교수, 서울대 한상진 교수 등 국내외 정치 사회학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은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요안 갈통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알랭 푸렌스 교수의 연설문이 그의 불참으로 대독형식으로 읽혀졌고, 1부의 끝으로 한상진 교수

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5·18의 자유해방주의적 해석'이라는 주제의 김성국 교수의 발표와 '권력 투쟁과 해방 쟁취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배동인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김두식 교수가 '5·18에 대한 의미구성과 재해석의 변화 과정'에 대해, 최정운 교수가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 민중항쟁과 절대공통체의 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고, 한시간여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요안 갈통 교수의 연설과 알랭 푸렌스 교수의 글은

요안 갈통 교수의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여겨졌던 인권개념은 서구의 산물로서 개인의 권리에 국한되어, 개인이 아닌 집단, 즉 성별 세대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영역에 두었다. 반면, 집단중심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동체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앞으로 선포될 아시아 인권 헌장에도 스며들어 있다.

개인중심 문화와 집단중심 문화의 갈등은 인간존재의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개인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개별 국민국가의 능력을 감소시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집단적 인권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상임을 볼 때, 두 가지 문화를 평화롭게 공존시키면서,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결합·발전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세계화는 첫째, 국가의 주권 통제, 서민의 고용과 생계 셋째, 인권을 희생시킨다. 물론 기업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주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세계화 움직임에 대항하는 세계 시민들의 형성 또한 가능할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경우, 서구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학자들이 있다. 나는 광주항쟁 당시 내부에 형성되었던 권력이 매우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었던 데에 주목한다. 그런데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많은 왜곡들이 존재했듯이, 광주민중항쟁의 경우도 정부와 언론 모두 사실을 왜곡시키고,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몰아갔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광주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①진실규명 ②가해자의 사과 ③희생자 복권, 배상 ④용서 ⑤사면 ⑥화해를 단계별로 밝아나간 남아프리카의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활동은 권장할 만 하다.

세계화 속의 인권과 사회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주민중항쟁이 정당히 자리매김되지 못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는 국내외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광주에서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가 열려, 광주항쟁과 인권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노래패 '천리마'는 96년 10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단원 6명이 구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권영준, 김대성 씨에 대해 "경기남부 총련(경기남부지역총학생회연합)의 감령을 수용해 천리마 노래단을 만들어 이적단체 구성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나머지 구속자 4명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수원의 다산인권상담소(소장 노정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경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제기를 박는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개정 내지 폐지를 통해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씨 등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에도 잇따라 천리마 단원 4명이 구속돼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진행될 이들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16일(토)

제 11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아시아민중 인권의지 집약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개막

아시아 지역 최초의 인권헌장으로 기록될 아시아인권헌장을 채택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회의가 15일 오전 10시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막되었다.

5·18 18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대회 개막식에서 주관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 바실 페르난도 위원장은 "아시아는 수많은 정부가 이념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반대하는 세계 유일 지역"이라며 "아시아에서 가난과 억압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인권에 대한 진정한 논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장에 대해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을 유도하고,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제안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유엔에서 제시하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아시아인들의 기대수준에 적합한, 국가가 보장하는 아시아인권헌장의 탄생이 앞당겨질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강신석 대외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우리가 떠나고자 하는 21세기와 우리 가슴에 품고자 하는 21세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민주와 인권의 도시인 광주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의 진지한 토론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인도의 전대법관 V.R. 크리시나 아이이(82) 씨, 스리랑카 실종자대책위원회의 마노리 무테투에가 씨, 홍콩대학의 야시 가이 교수 등 해외 인사 30여명과 국내 인권단체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아이어 씨 인터뷰 3면 게재>

'전향제 폐지' 굴기투쟁 동참 15일 첫 회의에서는 '아시아 인권헌장의 재확인', '아시아 경제위기와 인권'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이 전개됐다 <관련내용 아래 상자, 3면>. 토론에 앞서 가진 사례발표에서는 한국의 전향제도 철폐문제, 동티모르 인권침해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강용주(36, 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연루 12년 복역, 안동교도소 수감증) 씨의 어머니 조순선(72) 씨는 사례발표를 통해 "악법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거부하라는 평화적 불복종의 정신으로 양심을 지키고 전향제도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 용주의 의지"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단지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 취임 경축사에서 감형

조차 되지 못했다"며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지어 먹이고 싶은 비원을 안고 14년을 기다려 왔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강 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전향제도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1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강 씨의 석방과 전향제도 철폐를 요구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두 명을 제외한 전원이 16일 점심을 모두 굶기로 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참석자 전원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막식에 앞서 14일 저녁에는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리셉션이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남아공의 스피스 대사, 송인종 광주시장, 박형규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대회는 16일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헌장', '지역 인권위원회 등의 필요성', '아시아에서 여성의 권리를 향한 도전' 등을 주제로 토론을 갖고, 17일 5·18 18주년 전야제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첫날 토론 주요내용-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제 1주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식민주의적 경험과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서방 세계의 착취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은 방임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구화, 자유화, 민영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기류에 의해 아시아 전반의 인권이 고조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재차 확인된 것은 권리는 나눌 수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인권 또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논리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왜곡·강조하면서 아시아 민중의 삶을 파괴하게 했고, 아시아의 풍부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 속에서 실현 가능한 인권 보장의 길을 좌절시켰다.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위기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의 새로운 도전은 민중 자신의 조직과 투쟁을 통한 인권 기제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인권을 이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 인권 헌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2주제 3면 게재

CCTV 감시 아래 근무 직원들, 심리적 위압감 시달려

최근 서울의 한 외국계 은행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CCTV로 촬영하기 시작해, 인권침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을지로2가 내외빌딩 13층에 위치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지난 4월부터 사무실 내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해 24시간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녹화하고 있다. 이 CCTV는 직원 70-80명의 모습을 한꺼번에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정 개인의 모습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 더구나 CCTV 모니터가 인사부장실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인경 인사부장은 "서류나 컴퓨터를 분실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것 같다"며 "총무과에는 모니터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인사과에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병문 과장은 "회사측에서는 '보안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안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인사부장실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은 명백히 직원을 감시하고 정신적인 강제근로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또 "직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회사측은 5월초에 객장에도 CCTV를 하나 더 설

치해 직원감시용이라는 비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원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심리적 위압감 뿐 아니라 감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 남궁선욱 씨는 "모니터가 항상 나를 쬐고 있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며, 심지어 동료직원과 농담을 나누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시당한 결과가 인사사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직원들이 심리적 위압감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이해 회사가 직원 스스로 각자를 통제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근무시간에 티셔츠와 청바지를 통일해 입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무언의 항의를 벌이고 있지만, 회사측은 직원들의 반발에 아랑곳없이 CCTV를 계속 가동시킬 방침이다.

박병문 과장은 "CCTV 설치뿐만 아니

라, 매튜 웨이크 지점장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조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점장이 모든 걸 법에 의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가 회사측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측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CCTV 설치 문제와 관련, "시설물 사용권이 경영자측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운동상 수상

제3회 한국시민운동상 수상자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선정됐다.

15일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이사장 이세중)은 "참여연대가 '작은권리찾기운동'과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평등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1회 수상자는 경실련, 제2회 수상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였다.

<애설> DJ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자유 인정하지만, '다짐' 절차 있어야"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한겨레> 창간 기념(5.15일자)으로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최초로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애매한 이중언어를 구사하며 전향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비켜갔다.

우선 김 대통령의 인터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사람들의 머리에 든 사상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양심 침해'니까 찬성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는 김 대통령이 '양심·사상의 자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대통령의 또다른 언급에서는 '전향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드러나 있다. 바로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김 대통령이 말하는 '다짐'의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단순한 구두언급이든, 각서 또는 반성문이든), 그것은 결국 '양심과 점목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사상전향제도가 실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우선 전향제도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한 뒤,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제2차 실업자대회

- 때: 오늘 오후 1시
- 곳: 서울역광장
(이후 시청앞까지 행진)
- 주최: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준)

5·18 18주년 기념 민주개혁 통일염원 국민대회

- 때: 오늘 오후 2시
- 곳: 종로공원
- 주최: 전국연합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 케랄라(Kerala) 주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연방 대법원 판사에까지 올랐던 아이아(82세) 씨는 사실 '근엄한 판사님'보다는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소개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하다. 아시아인권연장선언대회 본행사 첫날,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과 노현 교수(방송대)가 아이아 씨를 만나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과 : 선생님처럼 급진적이신 분이 대법원 판사를 지내셨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법관으로 계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아이아 : 73년부터 80년까지 대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NGO(민간단체)들의 공익대표 소송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조치로 가난한 사람들도 법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죠. 80년 퇴임한 후에도 빈농들, 여성, 노동자 등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제 자신도 민중과 같이하는 모든 사회운동에 동참하려고 하구요. 가난한 사람과 살지 않고, 가난한 삶을 알 수는 없지요. 사실 퇴직후에도 저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과 : 그건 정말이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는 건가요?

아이아 : 사람들은 모두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신성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형제, 자매, 딸,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권이 영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과 : 이제야 선생님 말씀에 힘이 넘치는 이유를 알겠군요. 그건 그렇고,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해 이빨없

는 호랑이라고 평하신 걸 들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아 :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무력할 밖이에요. 그런 권한을 줘야죠.

과 : 아이아 씨께서는 세계화, 자유화, 민영화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아이아 : 민중들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에 산업을 보통의 산업과 달리 이유 추구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기, 옷 등을 값싸게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IMF는 공공부문을 축소하라고 합니다. 그런 IMF에 대해 일어나야 합니다. 무릎

꿨고 기느니 한동안 굶을지라도 저항해야죠. 그러려면 모든 국민이 초진축을 한동안 감내해야 할 거예요.

과 :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있었던 인도의 해산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이아 : 전, 모든 핵에너지에 반대합니다.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원을 낭비하면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무기 경쟁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핵무기가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한다고 떠드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환상입니다.

과 : 마지막으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이아 : 저는 사회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법관으로 있을 때나, 변호사로 있을 때 언제나 인도 헌법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인도 헌법이 매우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1면에서 <아시아인권연장선언대회 토론 요약>

제2주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아시아 금융위기와 도전받는 인권

경제성장의 신화는 깨졌다든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초경쟁시대, 초국가시대, 다국적기업의 승리로 점철된 현실은 민중 다수의 삶을 절대적 빈곤 이하로 내몰았다.

최근 아시아 금융 위기의 특징은 노동자 권리의 침해, 특히 여성노동자와 아동에 대한 억압에서 보여진다. 가장 잔인한 현실은 외국인노동자의 추방과 그들의 난민화 현상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된 위기 인식에서 출발한 해결 모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좋은 정부, 바람직한 기업 경영을 위한 시민의 참여,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토론자들의 주장에 공동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에 직면하여 "투명성, 책임성, 좋은 정부,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어디서 발견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권력교체로 민주정부를 세워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정부와 민중이 필요로 하는 좋은 정부는 다를 수 있지 않은가? 우리, 곧 민간단체가 말하는 '인권이나 정치'가 민중이 느끼고 있는 '인권이나 정치'와 같다고 보지 않는다. 그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는 민중의 시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시아 인권연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즉,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 이슈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19일(화)
제 11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인간성의 연대를 위한 아시아 인권헌장 선언대회가 17일 아시아인권헌장을 선포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번에 채택된 아시아 인권헌장은 "아시아인으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차별 즉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토착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여, 급진적 평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헌장에서는 생존, 평화, 민주주의, 문화정체성, 발전과 사회적 정의, 소수집단, 여성, 아동, 장애인, 노동자, 학생, 재소자와 정치범의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헌장은 또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행사 마지막날인 17일, 인도의 아이아(전 대법관) 씨는 "이 헌장은 단지 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민중들의 행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저항이 실종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조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바실 페르난도씨는 아시아 인권헌장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독료 납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로번호 7618848

"이것은 국가 간 헌장이 아니라 민중헌장(People's Charter)이며, 이번 선언으로 아시아 인권헌장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 각 국에서는 민중들의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헌장이 담고 있는 내용들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적 장치를 통한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모든 의회에 우선 보낼 것이며, 모든 이들이 읽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언어로 출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아시아의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주제들에 대한 결의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참석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안된 것들이었다.

인니 사태 등 결의안 채택 현재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태를 비롯하여, 잔혹한 만행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동티모르 하살, 인도의 핵실험, 사법적 장치를 통한 인권의 보장, 여성 인권 보장 등 10여 개 주제들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우리와 가깝게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결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안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아시아 각국 정부에게 보내지며, NGO(민간단체) 조직들과도 공동연대 차원에서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16일 오전, 타관보세(남아시아 인권포럼 위원장) 씨, 한국의 박흥규 교수(영남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지역 인권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지역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그러한 장치가 민중 개인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민중의 힘(People's Power)'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어 열린 여성인권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세계화와 군국주의 하에서 실업, 빈곤, 강간, 성폭력, 난민화 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여성과 아동"이라면서, "여성인권을 인권의 중요한 범주로 사고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광주민중항쟁 18들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행사 참석자 전원은 군부독재에 목숨을 바쳐 항거했던 사람들이 잠들어있는 5·18 묘역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단장된 5·18 묘역은 망월동 묘역이 가져다주는 비정함을 전해주지 못했는데, 외국인 참석자들도 구 묘역을 돌면서, 5·18 민중항쟁 희생자 뿐 아니라 80·90년대 열사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넋을 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동티모르에서 참석한 마리아 페데라 씨는 광주 하살의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었다는 것에 매우 의아해하는 한편, 묘역을 둘러보면서 "동티모르에서는 인도네시아 군부에 의해 학살된 이들을 이처럼 함께 묻어주고 참배할 수도 없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사전행사를 포함하여 14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진 이번 아시아인권헌장선언대회는 아시아 민중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최초의 인권헌장을 선포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이 구체적 인권상황을 알리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공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국내단체, 인니 대사관 앞 시위 수하르토 하야, 인권탄압 중단 촉구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중들의 시위와 군경의 발포, 학살과 아비규환으로 얼룩진 인도네시아 사태와 관련, 국내 사회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때마침 광주항쟁 18들을 맞는 18일, 참여연대, 국제연대 행동네트워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25개 단체 회원 70여 명은 낮 12시 인도네시아 대사관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인도네시아 민주화와 폭력진압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모든 인권옹호 단체 및 민주세력과 더불어 수하르토 정권의 살인적이고 폭력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도네시아인들의 수하르토 정권에 맞선 투쟁에 전면적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면서, △평화시위 보장과 폭력탄압 중단 △수하르토의 즉각 퇴진 △유엔의 적극적 대처 △동티모르 독립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에 대해 "수하르토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원조와 협력을 중단할 것"과 "한국기업이 수하르토 측벌과의 모든 거래와 합작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에서 취업중인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도 참석해 고국의 민주화와 수하르토의 하야를 촉구했으며, 인도네시아 식민지인 동티모르의 마리아 페드로(동티모르 국제 지원 사무국 연락관) 씨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집회에 이어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에 성명서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19일 (화)
원소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 20일 (수)
현준희(출판물예의한명예훼손) 오후 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엄기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김병권(국보법) 오전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최희숙(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 21일 (목)
이승구(국보법)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박미애/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영광(국보법)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 22일 (금)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2부, 속행
김종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403호, 합의4부, 속행
조건수(집시법, 한총련)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전

주/간/인/권/호/름

(98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 11일 (월)
여성단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근로자과건법 시행령안 반대시위/의왕시 발표, 주한미군이 부대 기름유출로 백운산 골짜기 일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두 달째 사고현장의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횡포 부러/핀란드 헬싱키의 <사노마트> 신문 보도, 유럽의회가 '정치통제술에 대한 평가'라는 미공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국제앰네스티, 그린피스 등 민간단체까지 첩보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인도 74년 이후 24년만에 3차례 지하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

◆ 12일 (화)
경기도교육청, 53억여 원을 들여 남양주시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기로 했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3년째 표류중이라고 밝혀/서울지법 북부지원(이동신 판사), 노동절 시위사태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과격시위를 한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가 신청한 국민승리21 박용진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전국 57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09명의 연명으로 성명을 내어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제정비 촉구

◆ 13일 (수)
국제금융기구,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개혁 가속화와 대기업 족벌체제 해체 촉구

◆ 14일 (목)
보건복지부·감사원, 에바다복지회가 채용한 에바다농아원 원장과 총무 등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인천시교육청, 손지받은 인천시 부평구 초등학교 교야무개·김야무개 씨 등 여교사 2명 해임

◆ 15일 (금)
중앙선관위, 노동부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주노총과 전교조등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법의 노동조합'은 지방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94년 4~8월 사이 국내 제약회사의 수두백신 임상실험이 7보리원과 1보리원에서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 9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 회사의 유형성출혈열 예방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을 보육원아들에게 실시했다고 밝혀/서대문경찰서, 조산원을 운영하면서 미혼모가 낳은 영아들을 수백만 원씩 받고 낳긴 혐의로 1보리산원 원장 이옥자 씨 구속영장 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 무보직대기발령을 받은 임호 씨 등 편집국 소속기자 8명을 전원 원직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세계일보사에 명령

◆ 16일 (토)
민주노총, 한국노총 종로공원 등에서 노동자 대회 가져

◆ 17일 (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 96년 8월 한총련 연세대 시위 진압도중 숨진 이종희 의경의 유족이 실종희 씨등 한총련 학생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소송에서 연대해 1억5천4백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인권
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박천웅(목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4월 30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이 끝난 뒤,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사면을 해주겠다'는 반쪽 사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국을 원하면서도 벌금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출국 가로막는 벌금족쇄

두 곳 회사에서 2백7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한 아불 씨는 지난 2월부터 실직상태에서 월급을 기다려 왔다. 그는 4월 15일이면 틀림없이 월급을 주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비행기 표를 구했다. 그리고 4월 24일 12시 비행기 좌석까지 예약했지만,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아불 씨는 분노로 마음을 채우면서도, 병환으로 위급한 어머니 생각에 결국 출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2백70만원의 월급 받을 것마저 포기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벌금 1백만 원을 내야 갈 수 있다는 말은 다시 한번 아불 씨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월급을 기다리다 출국을 못했지만, 결국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벌금만 물게 생긴 아불은 "이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구 책임이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출국을 못하게 된 그는 "다 죽어가는 어머니라도 볼 수 있도록 회사가 벌금이라도 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제 아불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다.

비행기 표라도 팔아야

밀린 월급 50만 원을 받아 겨우 비행기표를 구입한 바들 씨, 부도난 회사에서 밀린 월급도 못 받고 한 민간단

체로부터 비행기표 값을 지원받은 조니 씨는 친구들과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10분발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2시30분 경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항공사측으로부터 비행기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접했고, 하는 수없이 5월 15일자 비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렀을 때, 출입국관리소는 벌금 1백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결국 사면기간 내에 공항까지 갔던 그들은 출국도 하지 못한 채 벌금만 물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벌금조차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출입국관리소측의 통보는 다시 직업을 찾아 일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돌아가면 선물은 고사하고 '거지 왔다'는 소리만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본전도 못건진 한국생활

모하마드 장기르 씨는 한국 돈으로 6백만 원을 들여 96년 10월 19일 입국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번 돈은 고작 3백만 원. 지금 당장 돌아가도 3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실직상태에 있던 그는 본전이라도 찾아보려고 일자리를 기다렸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한국의 IMF는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에서 내몰고 있었다.

그 역시 한 민간단체로부터 비행기표 값을 도움 받아 지난 4월22일 출국하려 했으나 좌석을 구할 수 없어 4월 30일 사면 기간 내에 떠날 수가 없었다. 김포공항에서 상담도 해봤지만 4월30일 이전에 떠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는 수없이 5월 20일자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신청을 한 그는 1백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소리에 기겁하고 말았다. 모하마드 장기르 씨는 "차라리 한국에서 노예로 있을 테니 빚좀 갚아 주세요"라며 호소했다.

"차라리 한국에서
노예로 있을 테니
빚만 갚아주세요"

가지였다. 조니 씨는 "이제 벌금은커녕 비행기표라도 팔아서 먹고살아야 할 지경"이라며 허탈해 했다.

임금 84만원에 벌금 80만원

지난 6 달 동안 실업상태에 있던 벨탈 호세인 씨는 4월 26일 밀린 월급 84만3천 원을 받았지만, 비행기가 모두 예약되어 있던 관계로 출국을 못했다. 결국 5월 15일 오후 6시10분 비행기를 예약한 그가 출국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로 갔을 때 관리소측은 80만원의 벌금을 요구했다. 밀린 임금 84만원 받고 80만원의 벌금을 내면 결국 남는 돈은 4만원.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밀린 월급을 겨우 받아낸 호세인 씨에게 벌금을 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비행기표값 빌린 것, 실직 상태에서 생활비 빌린 돈까지 갚고 나면 남는 건 한푼도 없고, 공항에서 고향에 갈 차비도 부족하다. 호세인 씨는 "빈털털이 신세로 고향에

역효과 낚는 벌금제도

현재의 벌금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순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현 벌금제도는 외국인노동자로 하여금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고 있다. 받아야할 월급보다 1달에 10만원 결인 벌금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임금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IMF 이후 자진출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벌금은커녕 비행기 값도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진 출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낚고 있다. 벌금정책의 주요목적이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데 있다면 자진출국과 벌금제도 간의 모순부터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0일(수)
제 11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미결구금자에 대한 접견권 보장 등, 사법제도상의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친족을 제외하곤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결수는 재판에 미철영향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면회를 더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기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범죄모의가 가능하겠느냐"며 "기결수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미결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교도소에서는 미전향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접견제한 조치조차도 합리적 이유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씨, 홍근수 목사, 김규철(김낙중 서방대책위 운영위원장) 씨 등은 수감중인 손병선(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구속) 씨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홍 목사와 김규철 씨의 면회만 허락받고 윤성식 씨의 면회는 불허당했다.

이에 대해 최혜동 전주교도소장은 "손 씨에 대해서는 가족과 성직자들만 면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성식 씨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직자가 아닌 김규철 씨

에게 면회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전부터 면회를 해왔기 때문에 허용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 또한 최 소장은 "손 씨의 면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기원 변호사는 "재소자에 대한 접견제한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과 교도행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만, 현재 교도소측이 '멋대로'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소자 접견을 제한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

정하고, 그밖에는 접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행행법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고,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도소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간염환자약품차입도 불허
한편, 손병선 씨를 면회한 홍근수 목사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측은 간염(C형)을 앓고 있는 손 씨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약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도소측은 손 씨에게 처방약 치술도 반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 대학생 목매 자살

가정에서 외면받고 최후의 선택

이 땅에서 동성애자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지난 17일 새벽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대표 양지용, 대동인)의 회원인 오세인(22세) 씨가 대동인 사무실 계단에서 창문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 씨는 죽기 전 "난 모든 사람의 기억 지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모두들 잘 있어"라고 쓴 찢막한 유서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그는 평소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한다. 대동인 회원들은 오 씨에 대해 "사무실에 자주 나와 열심히 활동하고 취미로 사진도 찍는 등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어느 동성애자나 마찬가지로 가정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인 홍보국장 정민수 씨는 "오 씨는 이전에 가족 중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 형, 누나에게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 사실이 엄격한 아버지에게 알려져 3월경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동인에 따르면 오 씨는 4월달에도 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동인은 "오 씨와 가까이 살면서 그에게 큰 힘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럽다"며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천대받았던 그가 이 방법 밖에 택할 수 없는 데 애도하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대동인은 또 "이번 일을 단순한 동성애자의 죽음이 아니라 단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고 싸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취> 아시아 인권현장(1)

서문

평화가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아시아 민중들의 소망과 열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 민중은 이 현장을 채택한다.

현장 배경 설명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인간의 권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국가 부문과 국제 세계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민중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있는 요소들을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 민중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극단적인 민족주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인종 차이, 여러 종교적 근본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규와 폭력에 의해 고통받았다. 정부는 스스로 엄청난 권력을 누려 왔으며, 그들은 권위주의를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경멸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각은 커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애정있는 사회의 초석을 제공한다.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는 우리 모두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일반 원칙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등 기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국제 기구를 지지한다.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인간 관계의 방

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문화적 전통이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필요와 열망은 분열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것 즉, 상호의존적인 것이다.

인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정책의 기초이다. 우리는 광범위한 권리 침해에 당하고 있는 특정 집단들의 상태를 조사하여 아시아적 상황에 맞도록 인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빈곤은 아시아 전역에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조차도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평등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 옹호의 책무

인권을 침해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불평등에 있다. 세계 질서의 과감한 변화와 민주화는 인권의 전 지구적 향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권 신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런데 지구화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정책 및 활동을 통제하는 힘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으로 이동해가면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기업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권 체제(the regime of rights)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

경제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우리는 GNP의 성장에 따라 삶의 질이 퇴락하지 않도록 투기적 기업들의 탐욕과 수탈에 대항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 자원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는 책임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권리들

개별적 인권 조항들은 그것들의 토대가 되는 전체적 개념들에 근거해서 추구되어야 한다.

생존권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이다. 나머지 권리와 자유는 생존권으로부터 나온다.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생계권, 주거권, 교육권, 환경권을 의미한다.

평화권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도 안된다.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

아시아에서 국가는 부패와 민주억압의 원천이 되었다. 국가의 민주화와 인도주의화는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아시아 인권현장> 목차

- 서문
- 현장의 배경 설명
- 일반 원칙
- 인권옹호의 책무
-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
- 권리들
- 생존권
- 평화권
-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
-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 개발과 사회 정의에 대한 권리
- 사회적 약자의 권리
- 여성
- 아동
- 장애인
- 노동자
- 학생
- 수인과 정치범
- 인권의 실행
-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
- 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
-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 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 기구

<발취> 아시아 인권현장(2)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한 인간의 의미있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차원에 토대를 둔다. 아시아적 전통은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몰고 오는 압력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따라서 아시아의 국민과 정부는 자신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어온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아시아인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에 위배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없애나가야 한다. 한편 독실한 종교인이 많은 아시아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

개발과 사회정의에 대한 권리

모든 개인과 집단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밖에도 인간의 예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을 개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역사적 원인이거나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특정한 집단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분야와 인할 권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취업기회에 대한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고용안정, 동등한 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권, 건강보호와 안전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생식기능에 대한 보호와

임신 여성의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특별 보호책이 필요하다. 또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은 필수적이다.

아동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

장애인들은 보호와 배려를 통해 자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는 법률 조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 조항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학생

사회변화를 향한 두려움 없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폭력과 억압을 받아왔다.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빈번히 목살 당하고 있다.

수인과 정치범

임의동행, 구금, 투옥, 학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징벌은 아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정적으로 제한해 왔고, 이러한 제한에 의해 사상의 자유,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의 실행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과 거주민들의 인권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긴급히 취해야 한다.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 확대와 국가, 시민사회, 기업체들의 개혁 △ 국가가 인권신장과 실행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사회의 모든 집단들의 책임성 △사회적, 민족적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관용과 화합의 장려 △사신들의 업무를 비롯한 여타의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주적 관행의 장려 △여업적인 사회적 관습과 신례들의 즉각적인 개혁 △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필요성 △노동자, 소비자, 대중의 권리 침해방지를 위한 기업체의 수탈적 관행의 엄격한 단속

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 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경찰, 교도관, 무장군인들은 인권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사법부의 독립성, 종교,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의 공정한 반영 △변호업무의 독립성, 더욱 자유로운 법정 접근의 허용,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을 대신해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인정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의 설립,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구 △정부와 국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시민단체들에 의한 '시민재판'

인권옹호를 위한 지역기구

인권 보호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기에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일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국가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 지구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간 인권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1일(목)

제 11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형)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 같은 해 4월 연수까지 마쳤으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임용제의 통보를 받았다. 당시 차 씨의 남편 장정호 씨는 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구금 중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96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줄 알면서도 ‘결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시로 간첩인 남편과 면회를 통해 교감이 이뤄질 것이며 △애국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기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차 씨를 ‘부적격자’로 판정했다고 밝혀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를 시행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한편, 이날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차 씨는 남편이 구속된 이후 생후 10개월밖에 안된 딸을 탁아소에 맡겨가며 대학을 다녔고, 3년간의 기나긴 어려움 끝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 고시에 합격했다. 당시 차 씨는 “수업

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와 씻기고 기저귀를 빨고 우유병을 삶아가며, 틈틈이 짬 내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로 모든 꿈을 포기할 처지로 몰렸던 차 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게 됐다.

시민 정보공개청구 운동 출범

19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사업단’(02-723-5302) 발족식을 가진 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용해 정부의 예산 낭비와 밀실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참여의 권리를 추구하는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수경(주부) 씨 등 시민들이 △김 대통령 취임 후의 청와대 경비축소 현황 △국회의 5공 비리 조사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가족들 22일째 서울역 광장서 한 맺힌 울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번에는 꼭...”

서울역 캠페인 22일째. 오늘 오후도 어김없이 서울역 광장에선 사람들이 둘러서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젊은이들의 사진이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안타까움, 두려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누군가 내뱉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요?” 그 뒤로, 한 맺힌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린다. “민주주의의 진전 뒤에는 우리 아들, 딸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살다 죽은 젊은이들입니다. 이번엔 꼭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 시켜줘야 합니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며, 국가차원의 배상과 각종 기념사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후란다. 이에 대해 김중태 열사의 어머니는 “경제량 진상 규명해주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고 반문하시며, “아무런 실질적 응답이 없으니,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라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그러나 실제 어머니, 아버지들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있음을 우린 안다. 죽어간 아들, 딸을 위해 10년 넘게 노년을 바치고, 지금은 70대에 들어선 이들이 대부분이다. “오늘이 22일제인데, 이 캠페인 하면서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계속 진상규명 투쟁 과정에서 대부분 경찰들한테 많이 맞아서서 평소에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라며 유가족의 젊은 실무자 손종필 씨가 안타까움을 전한다.

어머니들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도 22일 동안 받은 서명이 벌써 2만여 명. 내일도 여전히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나와, 서울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외칠 거다. “무심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도원동 철거민 용산구청 앞 단식농성 경찰, 농성장 침탈 대책위원장 구속

도원동 철거민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도원동 주민 3명은 용산구청 앞에서 철거민 투쟁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 김범성(도원동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씨 등 주민 3명은 사발식을 거행한 뒤 경찰의 편파수사 중지 및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들 세 사람 중 김 위원장은 도원동 골리앗 투쟁과 관련하여 수배 중인 상황이었고 오후 3시 35분경 경

찰은 공권력을 농성장에 투입하여 김 씨를 연행했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은 “김 씨가 연행과정에서 ‘단식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흔들림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철연은 “골리앗이 무너진 이후 계속되는 공안세력들의 탄압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번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제 더 이상 뺏길 것도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도원동 관련 구속자는 총 10여 명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가수용단지 건설과 영구임대주택 보장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철연은 22일 낮 1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찰의 편파수사 중지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행사와 동정

- 토론회-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인권기구의 방향
 - 때: 21일(목) 오후 2시 ·곳: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 주최: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763-0203)
 - 발제: 곽노현 교수(방통대), 이명남 목사(KNCC 정의와 인권위원장)
 - 토론: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등
- 워크숍 ‘철거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 때: 5월 22일(금)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 주최: 서울대학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 777-0643).
- 서울 여성전화회 회장 이·취임식
 - 때: 5월 22일(금) 오후 4시 ·곳: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강당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98년도 1차 학술회의'
 - 때: 5월 22일(금) 오후 4시 ·곳: 종로성당(종로공영 옆)
 - 기조연설: 강만길 교수(고려대) / 발제: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 한마당
 - 때: 5월 23일(토) 오후 1시 ·곳: 마로니에 공영 야외무대
 - 주최: 한국어성단체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교회여성연합회 등
- 공연- '98 다시 만나는 전태일'
 - 때: 5월 23일(토) 오후 5시 ·곳: 고려대 4·18기념관, 민주광장
 - 1부: 문화공연(꽃다지, 금강, 최도은, 소리물결 외) / 2부: 나눔의 자리
 - 주최: 전태일기념사업회(3672-4138)
- 미디어교실- 방송과 신문
 - 때: 5월 21일-6월 25일(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곳: 언론위원회 회의실
 - 주최: KNCC 언론위원회(742-8981)
- 전교조 창립 9주년 기념식
 - 때: 5월 28일(목) 오후 6시 ·곳: 중구구민회관
 - 문의: 전교조 본부(675-6181)
-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과제
 - 때: 5월 29일(금) 오후 2시 ·곳: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발제: 김대환 교수(인하대), 최병모 변호사,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행사 뒤 기념 리셉션(20층)- 인권논문상 시상식/ 고 황인철 변호사 평전 헌정식/ 민변 10주년 백서 증정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2일(금)

제 11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새 정부의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문제와 관련,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처음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총무 김동완 목사)가 주최한 '98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검사(법무부 인권과)와 박노현 교수(방송대),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조용환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민인권기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주최측은 여당인 국민회의에 대해서 참여를 요청했으나, 여당은 불참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노현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처리 △인권관련 소송에 대한 참가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 인권에 대한 종합적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도소, 복지시설 등 특별권력기관에 대한 불시 방문 점검권 △증인소환권 △자료제출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의 민간 추천 및 신분 보장, 재정 독립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와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권성동 검사는 "법무부 인권과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반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외국문서 등을 번역하고 있지만, 구체적 법률 마련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올해 안에 인권위 설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8-9월경엔 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측 입장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면서도 당초 구상보다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가져다 주었다.

권 검사는 "현재 실무진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예산청과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을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 관련 법제와 관행에 대한 권고와 지원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활동'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 검사는 "인권위원회는 기존의 정부기능을 보충하는 기구일 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인권위원회의 명령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완 목사는 "정부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리고 있는 듯하다"며, "민간단체에서 인권위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설립에 있어 몇몇 국가의 사례를 모아 그럴듯한 법조문을 만든다 해도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정부기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진우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과거청산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권위원의 인선과 구성 과정에서 인권운동단체와 인권피해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단지 정부와 민간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여러 쟁점에 대해 정부와 민간 사이에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시간 부족과 참석자들의 이해수준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 공방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제3회 인권영화제 특별후원회원께 <쇼아>를 드립니다.

제3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올해도 인권영화제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기존의 후원회원제도와 함께 올해는 특별후원회원제도를 추가했습니다. 특별후원회원에게는 제2회 인권영화제 대표작 <쇼아>(유태인 화살과 관련된 9시간 30분의 대장편 다큐멘터리)를 드립니다.

1. 특별후원회원 가입 방법 : 10만원 이상의 회비 납부
2. 특별후원회원 특전
 - ▷ 9시간 30분의 대장편다큐멘터리 <쇼아> (Tape 4개) 증정
 - ▷ <쇼아> 자료집 증정
 - ▷ 후원회원 소시지 우송, 상영장 우선입장, 영화제 해설책자 및 기념품 증정)
3. 문의: 김정아 (☎ 02-741-2407)

용기 있는 학부모들의 승리

학교운영위 바른 정착 이끌어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었다.

지난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변칙적 구성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도성초등학교(서울 강남구)는 요즘 학부모위원을 민주적으로 다시 선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학교는 3월말 5개 임의단체, 즉 학부모회, 예절실 명예교사회, 도서실 명예교사회, 지역사회학교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의 회장을 학부모위원으로 임명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학교측의 조치는 "학부모위원을 학부모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5개 임의단체들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소외될 우려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문제의식을 느낀 몇몇 학부모들은 4월 25일 학교에 민원을 접수시켰지만, 아무 반응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급 관청인 강남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를 차례 차례 찾았고, 끝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그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학교는 한 일간신문 기자가 학교에 진위를 확인하는 전화를 한 후에야 태도를 달리했고, 이제 학부모위원을 다시 뽑는 총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이번 일에 함께 했던 학부모 김명신 씨는 "나는 어렵게나마 절차를 되찾은

것을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장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이들의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

21일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 민가협)는 탑골공원 앞에서 제230차 목요집회를 갖고 사상전향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부터 20일간 사상전향제 폐지를 위해 옥중단식투쟁을 했던 강용주 씨가 단식을 시작하며 보낸 편지가 소개되었다.

편지에서 강용주 씨는 "전향제도는 중세 마녀사냥, 매카시즘 하의 충성선서처럼 인간내면 세계를 짓밟는 일"이

라며 "국가는 내면세계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용주 씨는 또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파괴하는 야만에 대해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전향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고문과 폭력에 무너져 내리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 버린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폭력과 감제에 굴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주 씨는 "세상은 비전향장기수가 무슨 거창한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전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신념은 '폭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할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강용주 씨의 어머니는 "이번에 용주가 20일 간 단식할 때는 나도 밥을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단식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30년, 40년간 감옥에 가두는 전향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또 "스물 셋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가 이제 서른 여섯이 된 용주가 더 이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단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워크숍>

'절거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 때: 오늘 오후 2시
-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 주최: 서울대학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 (777-064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3일(토)
제 11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최근 도원동 사태를 겪으며 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 있는 철거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공격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워크숍> ‘철거폭력, 그리고 저준, 이대로는 안된다’에서 주거단체와 인권단체, 천주교계 관계자들은 철거 폭력배들의 인권유린 행위 및 특히 ‘철거폭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저준(98년 ‘다원개발’로 명칭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신동우 주거연합 조직국장은 “최근 4년간 강제철거와 폭력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에서만 최소 48개 지역에 이르며, 그동안의 철거지역의 부상자만 1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저준이 관련된 곳은 94년 칼산 5지구, 관악구 봉천 7-1지구, 96년 동대문구 이문 3지구 등 20여 곳 이상이였으며, 얼마전 도원동의 철거폭력 역시 저준(다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고상만 천주교인권위 간사는 “97년 9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이거나 향후 2년내까지의 철거가 예정된 34곳 가운데 저준은 17개 지역의 용역을 맡았으며, 거기서 얻는 이익은 무려 5백7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철거폭력은 주로 △지역에 상주하는 폭력배들의 협박과 행패 △방화 △여성들에 대한 상습적 성추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폭력사태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공권력이 폭력사태를 수습방관하는 점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삼양동 일대에 3개월 동안 90여 차례의 화재사건이 발

생하는 등 폭력배들이 상주하면서 방화사건이 계속됐지만, 단 한차례도 방화범이 검거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철거폭력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들만 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최근 4년간 80여 명의 주민이 구속되고 3백여 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용역회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철거폭력에 대한 대

응 방법으로 우선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입법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수백 개의 용역회사 가운데 단 하나의 회사만이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행 도시재개발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상만 간사는 “특히 저준에 대한 집중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폭력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시민·인권·종교·주민단체 등이 모여 ‘(가칭)저준용역 철거폭력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기우 신부는 이날 워크숍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주거대책이 막연한 세입자들의 저항을 단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주거권을 인권으로 확인하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부 약물수사 의혹제기

진관 스님, 고문피해 폭로

안기부가 피의자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3·13 사면으로 석방된 진관 스님은 “96년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음식을 먹고 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머리가 빙빙 도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당시 질문에 무슨 답변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관 스님은 또 “구치소로 옮겨간 뒤에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기부의 약물수사 의혹은 사노맹 사건으로 구금중인 백태웅 씨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백 씨는 92년 안기부 수사 당시 “밥을 먹고 나면 잠시 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미비증세가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현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진관 스님은 안기부 수사당시 처음 3일간 잠을 안 재우고 구타와 기합을 가하는 등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특히 “스님으로서 입에 대지 않는 닭고기와 술을 억지로 먹일 때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다 털어냈지만 판사는 전혀 상관치 않았다”고 밝혔다.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가 22일 종로성당에서 열렸다. 지난해 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학술회의였지만, 1백명 가량의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는 등 이날도 유가족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김만길 교수(고려대),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장,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발표자로 나온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과거청산’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김봉우 소장은 “우리는 해방후 일제청산, 4·19때의 이승만 정권 청산, 5공 청산 등 세 차례의 과거청산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지적하며, 법제도적 청산과 인적 청산, 왜곡된 이념의 청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청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신속하고 감도 높은 청산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물리적 응징의 문제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충목 위원장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

‘박해받은 작가상’ 서준식 씨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수여하는 ‘헬만·함멧 상’을 받게 되었다.

이 상은 휴먼라이츠워치가 매년 정치적 박해를 받은 전세계의 작가들 가운데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상금은 미국의 작가 릴리안 헬만(Lillian Hellman)과 다시엘 함멧(Dashiell Hammett) 기금에서 지급한다.

서준식 대표는 국제펜클럽의 추천을 받아 이 상을 받게 되었으며, 휴먼라이츠워치는 “박해에 맞선 당신의 용기에 작지만 이렇거나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서준식 대표는 휴먼라이츠워치에 보내는 편지에서, “지난해 한국의 공안당국이 나를 구속했던 진정한 이유는 약법에 대해 비폭력 불복종을 호소했던 몇 편의 칼럼 때문”이었다면서, “인권을 위하여 계속 용기있게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성없는 경찰

불심검문 항의에 폭행 대응

불심검문에 항의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22일 오전 11시경 한신대 이 아무개(기독교교육학과 98학번) 씨와 김 아무개(일본어과 3학년) 씨는 경찰의 과도한 불심검문에 항의하던 도중, 방패로 얼굴을 구타당해 귀와 눈 주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날 경찰은 한신대 내에서 한총련 의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불심검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정지시켜 승차한 학생들의 신분을 조사했으며, 신분증이 없는 학생들은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시간에 지각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남구현 교수(사회복지학과) 등 교수들이 경찰에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 셔틀버스 운전기사들도 경찰에 항의하며 버스를 그냥 통과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바로잡습니다.

22일자 1면 ‘국가인권위’ 기사에서 김동원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입니다.

멀기만 한 독립의 봄

동티모르 인권보장 촉구

수하르토는 권력에서 물러났지만 인도네시아 군사점령 하에서 치욕의 20여년을 살아온 동티모르의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21일 수하르토 사임이 발표되자마자, 호주에 위치한 ‘동티모르 국제지원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동티모르의 인권보장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수하르토의 후임으로 등장한 하비비 전 부통령 또한 수하르토의 심복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인권이 존중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모든 동티모르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동티모르에 주둔해 있는 모든 군대를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는데, 동티모르에 그 많은 군대를 주둔시켜 돈을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군대를 즉각 철수”시킬 것을 강조했다.

75년 이래로 인도네시아의 군사점령 하에 있는 동티모르는 독립의 꿈을 빼앗긴 채 오늘에 이르렀다. 전쟁과 굶주림, 군인들의 학살로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주민이 죽었으며, 인도네시아 점령군의 처참한 인권침해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한편 국내에서도 ‘동티모르 연대 모임’이란 플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으나, 지금은 그 목소리들이 거의 찾아온 상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6일(화)
제 11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협,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 해야"

군복무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25일 국방부를 방문,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4월24일부터 매일(일요일 제외) 서울역광장에서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해 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은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강제입영되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문의 죽음을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가협 등이 밝힌 군 의문사 희생자들은 정성희(82년), 이윤성(83년), 김두환(83년), 한영현(83년), 최은순(83년), 한희철(83년), 허원근(84년), 최우혁(84년), 노철승(87년), 이승삼(87년), 박필호(87년), 김용권(87년), 이동(87년), 박상구(87년), 정연관(87년), 박종근(88년), 우인수(88년), 박성은(90년), 송종호(91년) 씨등 19명이며, 군인신분이 아니었던 임기윤(80년), 김영환(91년) 씨 등도 군기관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다수는 80년대 초 '녹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군대로 강제입영돼 총기에 의한 자살이나 사고사로 처리된 사람들이며, 특히 허원근 씨는 9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살이 아니다"는 판정을 받아 국방부의 재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국방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국방부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의 죽

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진상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을 상대로 국방부의 잔혹성을 광범위하게 알려나가고 동시에 병역거부운동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단 촉구

민주노총, "5·27 총파업" 확인

민주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27일 총파업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재벌들은 '재벌무책 임룬'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정쟁과 정계개편 저질 선거관으로 날 선 줄 모른다"며 "재벌과 정치권의 본원적 개혁없이 IMF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단협 계약 금지 및 일방적 단협 해지 금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해당사업주 구속 처벌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등 대정부 5대 요구안을 22일 정부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오는 30일엔 빈민·실업자와 지식인·성직자 등 각 계층층과의 연대 속에 전면적인 투쟁

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전날인 6월 3일 전국동시다발집회를 시작으로 6월 10일 제2차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5대 요구안을 수용하는 길만이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재벌 등 사회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만일 정부가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정당한 파업마저 탄압한다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항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경찰, 통신 이용자 정보 요구

지난 20일 컴퓨터 통신업체인 '참세상'(하이텔)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서울시경)으로부터 이용자정보 발급에 관한 협조공문이 전달되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시경은 참세상에 ID가 tsLEFT, vsMARX, traki, 빛살무늬, 열월반동, 어리둥절한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세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1항 및 2항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와 참세상 이용약관 제17조 3항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협조요청을 거절했다.

참세상은 또한 "시경에서 보내온 공문이 '명령'이 아니라 '협조'공문이며 전기통신법 제54조 3항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요구받을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경은 "협조공문만으로도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군축, 우리 손으로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향한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23일 <여성평화한마당>이란 행사가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량살업사태와 기근으로 남북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방위비'를 삭감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 △군 내부의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혁 △국방비삭감을 통한 실업대책 기금 확대와 사회복지예산 증액 △무기수입 및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한 예산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제검도 △국방비 편성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기본합의서에 약속한 군축 협상의 즉각적인 개시 등을 주요한 요구로 내걸고, 한국 정부와 국방부, 미국, 더 나아가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98년, 올해의 국방예산은 6천여 원 가량이 줄었지만 14조 3백39억 원이나 된다.

.....주요 공판 안내

- ▶ 26일 (화)
 - 이철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박진호 (국보법)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 김진성 (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 ▶ 27일 (수)
 - 신승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선고
- ▶ 28일 (목)
 - 김민정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박미에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 29일 (금)
 - 이천재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속행
 - 김영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 함운경 (국보법 불고지) 오전 10시, 서울지법 423호, 합의7부, 선고

주/간/인/권/호/름

(98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18일 (월)
5·18 광주민중항쟁 18돌 광주 망월동 5·18 묘지 추모식에 5만여 명 참여, 처음으로 전국 생계/경기도 교육청, 5월 현재 결시 학생은 초등 4천7백97명, 중학교 6백79명, 고교 6백26명 등 6천1백20명으로 집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원 노숙자 1백88명 대상 조사, 노숙자의 71% 최근 6개월 사이 실직해/남부지원 행사합의 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 심리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북풍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한 2차 공판, 권 씨 '대북 접촉한 정치인 공개 않겠다'고 밝혀

◆19일 (화)
정부, 오는 7월부터 기업도산에 따른 체불 임금 일정한 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0일 (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해고동보 김영호 <세계일보> 전 편집국장 원직복직 판정

◆21일 (목)
전교조 등 12개 교육·시민단체 동승동 흥사단 강담에서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창립대회/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 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검열 거부 결의문을 작성·남독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기자회견 부회장 노향기 씨 등 4명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 선고/서울경찰청, 노동절 시위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과 조직국 차장 황명진 씨등 2명 출두 통보/안기부, 25일부터 행정부처 모든 장관실을 상대로 전화도청 여부 일제 점검 시작/AP연합), 미 오리건주 서스턴 고교 구내식당에서 15살 소년이 소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중경상/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직 사임 공식 발표

◆22일 (금)
통계청 발표, 실업자수 사상최고치인 1백43만4천명/안동대학 총학생회, 안동교도소 수감 이동욱 총학생회장 면회를 5월 동안 세 번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혀/2기 노사정위원회, 노·사 각 단체와 정당들에 제2기 위원 선정해줄 것 공식요청, 민주노총의 참여와 관계없이 6월1일경 2기 노사정 출범 예정

◆23일 (토)
회사쪽의 대량해고 및 전직 등에 항의 44일째 파업중인 세계일보사 노조 25일부터 경영진이 단체교섭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중앙노동위,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쪽의 임금 및 보충교섭 거부를 이유로 낸 쟁의조정 신청 반려

◆24일 (일)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 회원 3천5백 명 중요공원에서 '정부투자기관 졸속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7일(수)

제 11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에 대해 즉각 강경대응 방침으로 응수하면서,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포함제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대통령 지시에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등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미특수강 해고자 1백 50여 명은 지난 21일 창원에서 상경,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낮에는 포스코 건물과 국민회의 및 자민련 당사 등을 방분해 집회를 갖고 있으며, 밤에는 천막도 없이 광장 바닥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고용승계특별위원회의 김현준 의장은 "해고자들이 개인당 30만 원씩 모아 농성비용을 마련했으며, 복직될 때까지 농성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기금: 국민은행 822-21-0363-930, 예금주 윤도준)

포함제철은 지난해 2월 삼미특수강 2개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2천3백42명 중 1천7백70명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했는데, 그 과정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백45명을 부당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는 "삼미특수강

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 자산매매가 아닌 기업간 인수·합병의 일종인 영업양도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창원지방노동사무소도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지시하며 "지시를 어길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삼미특수강 문제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존중해 포함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철 측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절차를 밟겠다"며 해고자 복지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지난해에도 장장 2백30여 일간 상경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44명이 집단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준 의장은 "장기간의 농성투쟁으로 인해 이혼, 별거, 부인의 기혈 등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가정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결단 촉구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6일, 50여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공동대표단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제파탄의 근본구조인 재벌구조를 혁파하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만을 노동계에 되풀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합의이행의지를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재벌의 소유민주화와 경영민주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 실시, 변칙적 재벌세습체

제 원천봉쇄, 재벌총수와 그 일가족의 부당 축재 재산 사회적 환수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유지정책과 실업예방정책 실행, 대다수 실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장책 강구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축재자 재산 몰수, 고용·실업기금으로 전환 △불로소득자에게 고용세 부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제형상 실시 △IMF와의 제형상 실시 △농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반정책 실행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방침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면서 과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면서 총파업의 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컴퓨터 기증 받습니다
사무실 컴퓨터가 노후해 교정이 필요합니다. 386급 이상 컴퓨터로 '한글' 기능만 멀쩡하면 충분합니다.

"5·18 정신의 인권적 계승" 광주국제인권센터 설립 논의

5·18 정신을 인권적 문제로 계승하기 위해 광주 국제인권센터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에서 「인권지기」 주관으로 열린 '5·18 정신의 인권적 계승과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인권센터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과노현 방송대 교수는 "80년 5·18 당시 광주 시내에서 단 한 번의 약탈 행위나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생명존중과 평화 사랑의 시민정신을 보여준 증거"라며 "광주에 국제민중인권센터를 세워서 민중들이 열렬한 세상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

주시민연대대모임 운영위원 이재의 씨는 국제인권센터는 구체적으로 △인권교육 △인권침해조사 보고서 발간 △국제인권회의의 △인권관련 헌법조항 삼입과 개정 등의 활동을 통해 "광주를 거대한 인권교육의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회장 정수만 씨는 광주광역시외의 인권도시화 추진 계획에 대해 "만약 과거의 인권 문제에 대한 나열로 박물관 개념의 인권센터라고 한다면 이는 현실 결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만약 계획부터 건립 그리고 운영까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면 이는 또 하나의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더욱 인권센터 설립과 운영과정 중 민

간차원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원동 사태 지속

주민들 단식농성

26일 오전 9시 45분경 도원동 주민들이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보장을 위해 8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구청 정문 농성장에 1백여 명의 구청직원들이 몰려와 농성장의 물건을 모두 빼앗아가고 이들을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은 "당시 농성장에 단식중인 2명을 포함해 4명의 도원동 주민이 있었고 구청직원들이 농성장에 햇빛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았던 파라솔과 가재 도구, 이불 등을 모두 가져갔다"고 밝혔다.

전철연은 또 "주민들이 구청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구청직원들이 이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시간 정도의 몸싸움이 있는 뒤 11시경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직원들에 의해 용산경찰서로 강제연행되었다. 경찰은 이들 농성자들에게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전철연은 "하지만 오후 7시 30분경 단식 8일째에 접어들어 몸이 많이 약해진 2명은 혼란처리돼 풀려났다"고 말하고 "용산구청 앞에서 다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원동 철거문제의 관련해 주민을 포함해 총 11명이 구속됐으나 아직 용산구청과 시공회사인 삼성건설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원동 골리앗 투쟁 때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던 직준용역(현 다원건설)에서는 단 한 명의 구속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삼성본사 앞에서는 도원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전철연 주축로 삼성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되어 시민들에 대한 서명운동과 거리 선전전이 벌어졌다.

새로 나온 책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편역/ 224쪽/ 1998/ 7천원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스스로 겪었던 '독특한 경험'을 묶은 책이 나왔다.

이 책에는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덧붙여 유색인종이고 동성애자이며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그래서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한 맺힌 사연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소수자로서 침묵을 강요당해 자기들의 말을 할 수 없었다. 누구도 이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시설내 성폭행, 의료적 남용에 의한 폭행, 문화·전통의 차이로 성기·수족의 제거의식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사례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정책담당자, 복지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획일적인 처방과 정책이 여성과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더욱 전문가들이 갖고 전문성의 선입관이 얼마나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를 더 왜곡시키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 책은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2중 3중 차별'을 다양하게 접근하려 했고, 피해자가 겪는 '질곡'만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희망'도 보여주고 있다.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소수자는 끝없이 침묵과 굴종을 강요당하며 자신에게 다친 부당한 고통을 순응하도록 훈련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들이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거절의 건강성'과 '굴종의 불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8일(목)

제 11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세계일보 사태가 노조측이 최후통첩인 단식농성을 시작함에 따라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일보 노조에서는 조대기 위원장을 비롯해 조민성(노조협상팀장, 편집국), 오천택(관리국), 강백수(윤전부), 박노현(윤전부) 씨가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27일 류순열(편집국), 류제오(화상) 씨가 가세해 총 7명의 조합원이 단식농성중이다.

노조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노조를 근로자측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 빠른 시일 내 단체교섭 개시 △노동사상 태에 빠진 윤금중 과장에 대한 인도적 보상 △노사 양측이 회사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면쇄신 위원회 신설 △노사 양측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과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인사상 불이익 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노조를 부인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세계일보 경영진에 대한 비폭력·평화투쟁의 최후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사원들의 목숨을 건 단식에도 불구하고 이상회 사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언론인협회(IPJ)에 참석하기 위해 외유에 나서는 등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원들은 현재 건물 앞을 지키고 있는 용역경비원들에게 막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건물 앞 공터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전국 52개 주요 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

부'(공동대표 천영세 문정현 등 21명)는 26일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단을 금명간 구성, 1차로 세계일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4월 28일 새벽에 용역강패를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총지휘했던 강구찬 관리국장은 지난 19일 용산경찰서 조사에서 지휘 사실을 시인했지만 당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가해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지금까지 4·28 사건에 대해 사측에서 아무런 입장표명(사과, 제발방지 등)이 없었다고 밝히고 과로로 뇌사에 빠져있는 윤금중 과장에 대해서 사측에서 산체처리보형 외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사태의 발단은 97년 4월 23일 과장환 통일교 부회장이 현 세계일보 사장인 이상회 씨를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 사장은 편집국장이 주재하는 편집국 회의에 참석해 직접 회의를 주관하고 자신의 행동에 반기를 든 편집국장과 많은 기자들을 해고시켰다. 지금까지 약 2백여 명의 사원들이 일괄적 사표수리와 구두 해고 형식으로 대량 감원되었다. 세계일보의 투쟁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3월 26일 인세팀 윤금중 과장이 과로로 쓰러져 뇌사에 빠지면서 부터다. 이후 노조는 천막농성과 파업을 시작했고 사측은 이에 대응해 용역강패를 동원해 새벽을 틈타 농성 중이던 천막을 습격해 모든 집기를 파손하고 조합원을 폭행했으며 수시로 정당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강도높은 노조 탄압을 자행해 왔다.

"불가피한 선택"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은 '제벌해체와 IMF 재협상, 고용안정' 등 5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27일 예정대로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에 금속연맹 소속 9만여 조합원 등 1백32개 노조 1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격정하는 시선에 대해, "이번 총파업은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중징어인 저항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제벌과 국제투기자본을 위해 계속 국민을 희생시킬지 아니면 강력한 제벌개혁과 당당한 경제외교로 국민과 경제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 조합원 1천5백여 명은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의 조현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정부와 재벌에 의해 '고려장'을 당할 처지에 있다"며 "언론사들은 우리의 한과 울분을 있는 그대로 찍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엠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국제엠네스티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유린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구속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비폭력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더불어 "강력한 인권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현장스케치> 해 넘긴 복직투쟁, 한상권 교수 "복직보다 소중한 건 원칙"

덕성여대 교문을 들어서면 하얀 천막과 그 아래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따가운 햇볕 아래서 서명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지영아, 그늘에서 있어야"고 자상하게 말을 건네는 그는 지난 97년 2월 부당하게 제임용에서 탈락된 이후, 지금까지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한상권 교수다.

이 한 사람을 위해 지금까지 3,200여 명의 교수와 사회단체 사람들이 작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지금은 민교협 사무실에서 또다시 농성이 진행 중이다. 한 교수의 복직문제 때문에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도 구속됐고, 세 명의 동료 교수들이 전 재단이사장에 의해 고소 당해 재판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이는 이 문제가 단지 한 사람이 복직여부 문제를 넘어서, 전체 사립학교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 개혁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민교협 사무실에서 농성중인 이세영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많은 사립학교들에서 비리가 횡행하는,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는 대학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며 방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오랜 투쟁 과정에서 많이 지친 덕성여대의 구성원들이 대학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4일 이강혁 총장의 '공제발안' 이후, 27일부터 덕성여대 민주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한상권 교수는 "복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을 경시하면서 복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총장의 공제발안은 복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며, "원칙을 훼손시키면서 복직되는 것은 오랫동안 투쟁을 해온 학생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어떠한 속임수도 없는 투명성, 어떠한 아합이나 담합도 하지 않는 비타협,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불복종의 정신에

따라, 부당한 제임용탈락 조치를 철저히 시키고 '덕성여대관례'를 만들겠다"고 학생들 앞에 약속했다는 한 교수는 현재 자신의 강의 강의를 듣고 있는 국사학과 3·4학년 학생들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졸업시키겠다고 한다.

사랑방, 참교육상 수상 전교조 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식)

은 27일 제7회 참교육상 수상자로 김찬국 상지대 총장, 김영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교원) 씨, 인권운동사랑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제단의 전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지대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학운영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등이 인정됐으며, 김영만 교원은 촛대지킴이 및 육성회비 납부거부운동 등 학부모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참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전파를 통해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한 점등이 평가됐다.

전교조는 오늘 오후 6시 중구구민회관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과 함께 참교육상 시상식을 갖는다.

행사와 동정

-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과제
 - 때: 5월 29일(금) 오후 2시 - 곳: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발제: 김대환 인하대 교수, 최병모 변호사,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행사 뒤 기념 리셉션 (20층) - 인권논문상 시상식/ 고 황인철 변호사 평전 헌정식/ 민변 10주년 배서 증정식
- 참여사회아카데미 98 여름학기 개강
 - 입학식: 5월 29일(금) 저녁 7시 - 개강: 6월 1일
 - 곳: 참여연대 2층 강당 - 문의: 723-5304
- 전국해고/실업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 때: 5월 29일(금) 오후 3시 - 곳: 서울역광장 - 주최: 민주노총
- 성폭력상담소 개소 7주년 기념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숍
 - 때: 5월 29일(금) 오전9시 -30일(토) 오후 2시30분
 - 곳: 한국교회배주년기념관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 교육현실 고발 선전전
 - '행동으로 고발한다. 교육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 때: 5월 31일(일) 오후 2시-5시 - 곳: 명륜동-해동동(대화로 일대)
 - 참가: 서울 수도권지역 대학생
- '무죄다 말할 수 있는 용기'-인권변호사 황인철 평전 출판기념회
 - 때: 6월 1일(월) 오후 6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주최: 문화과지성사, 민변, 천주교인권위
-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참여하는 '가족캠프'
 - 때: 6월 6일(토)-7일(일) - 곳: 행동과학연구원 부설 회농 연수원
 - 대상: 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참가신청: 5월 30일까지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 때: 6월 6일(토) - 참가비: 2만원 - 신청마감: 6월 4일
 - 문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64-864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29일(금)

제 11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경찰서에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동대문서를 방문했다가 '업무방해 및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연행·구금됐으며, 이후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 5만원에 형면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윤 씨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이날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사건 당시 윤 씨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행된 한국후포구 노동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동대문서를 방문했으며, 방문중까지 발급받아 경찰서 내로 들어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윤 씨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면서 양측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광경을 목격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윤 씨는 바로 연행·구금되었다. 윤 씨는 "연행된 다음날이 공휴일이었던 관계로 24시간을 더 구금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방문증을 받고 연행자의 명단을 확인하려 간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은 경찰로서 당연한 업무이며, 명단을 확인해주지도 않고 현관 밖으로 쫓아내는 경찰에게 윤 씨가 항의한 것을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윤 씨가 소란을 피우고 불안감을 조성했다"

고 하지만, 그건 항의과정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실랑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일반인들을 무시해오던 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 판결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

(관노청, 회장 윤순제)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에서 볼 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원들이 소지한 문건들은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윤승 판사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관노청 회원들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순제 피고인(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과 윤수근(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피고인에겐 실형이 선고됐고, 김경진 피고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진 채, 학내 문제에 관련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이 '실적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국보법 혐의를 씌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 쪽에서도 여전히 국보법 적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이번 사건을 계속 취재해 온 한 언론사 기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이두희 검사는 "피의자가 국보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국보법 혐의가 빠져지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이미 증거불충분과 피의자의 부인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드러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끝내

물고 늘어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지난 4월 26일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전국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 서명을 받고자 하니 학교 앞 휴게실로 나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나간 뒤,

그 여인과 대화 중 갑자기 나타난 남 대문경찰서 소속의 성명불상 경찰관 3명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미리 대기된 승용차에 실려 강제 연행됐다. 그후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신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 복지투쟁과 관련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27, 28일 양일간 벌어진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이 끝났다.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정부와 재계, 언론이 '국가를 말아먹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속에도, 28일 종묘공원에 나선 학생·시민·노동자 가운데는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편집자주>

▶ 이제 남은 것은 죽음 같은 절망뿐 - 이석창(56·무직)

"지금 정부는 IMF다, 경제위기다 해서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더 이상 졸라매 허리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목까지 졸라매 버릴 끝에 몰린 처지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는 의지로 버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사는 것이 괴로워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예요. 이게 어디 사람이 살 세상입니까?"

▶ 부의 균등한 재분배가 필요 - 최은영(22·대학생)

"다들 알다시피 이 곳에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모든 부가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배앗아 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 일할 권리의 수호는 나라의 의무 - 이숙자(58·가정주부)

"이러한 총파업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느니, 더욱 실업을 증가시킨다느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내몰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는 겁니까? 지금의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더욱 큰 어려움의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국민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방도는 마련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터 - 김태진(47·민노총 공익노령)

"노동자들을 구제하기보다는 탄압만을 외치고 있는 정부를 볼 때 우리의 살길은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더욱 큼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우리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강경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는 이미 구속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위 사업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탄압에 대비해 2기, 3기 집행부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진지한 상생인식이 되어 있으며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의지로 이번 사태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인제대생 11명 연행

지난 27일 새벽 4-5시경 인제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군복무중인 학생 등 모두 11명이 경찰과 기무사에 의해 각각 연행되었다.

경찰은 이날 인제대 학생회관에 진입해 김석호(법학 92) 씨와 장현술(경제 92) 씨를 강제연행하고, 비슷한 시각 홍정희(가정관리 95) 박지호(경영 93) 조희영(경제 95) 김승현(물리 90) 조미영(보건 94) 최호철(전산 91) 이태중(법학 94) 씨들을 숙소에서 각각 연행했다. 또한 군복무 중이던 공종배(미생물 93) 씨와 김인호(경제 93) 씨 는 기무사로 연행되었다.

♣ 이 달의 인권영화

<22일간의 고백>

감독 김태일/ 다큐멘터리/ 비디오/ 50분

<22일간의 고백>은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다. 하나는 93년 9월 8일 배인 오라는 가상의 인물이 터트린 김삼석·김은주 납매간첩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95년 10월 24일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에 의해 발생한 김태년·박충렬 간첩 사건이다. 또 하나의 잣대를 놓고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프락치의 양심선언으로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미결(?)의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건 모두가 피해자들에게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앙금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 비디오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긴장된 음악으로 처음을 여는 이 영화의 화면은 곧이어 모든 등장인물들을 차례차례 보여준다. 피해자들의 체포경위, 불고지죄를 지은 사람들, 김동식 무장간첩의 체포과정,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김삼석·김은주 납매.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모든 사건의 경위를 알아 갈 때쯤이 되면 한 시사 칼럼니스트의 입이 클로즈업 되면서 우리의 감정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과 함께 일종의 교훈을 깨닫는다. 아군과 적군은 누구인가...?

역시 이 영화에서 압권은 배인오가 안기부 직원들을 비디오로 촬영한 부분이다. 전형적인 핸드 헬드(HAND-HELD) 카메라로 촬영된 이 부분은 우리를 약간의 흥분상태로 몰아 세운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쁜 영화'보다 나쁘지 않은데...!' 사건의 계획 하에서 촬영된 이 부분은 <22일간의 고백>이 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다. 여기서 배인오 씨는 김태일 감독보다도 더 안기부의 실체를 해부한다. 누구보다도 근접 촬영했으며 철저한 계획에 의한, 그리고 용기(!)에 의한 영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를 만나 제작후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지난 96년 11월에 북한으로 망명했다.

한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를 대입시켜보면 정말 끔찍하다. 우리도 박충렬 씨의 말처럼 '친'안기부가 될까? 정말 안기부가 좋아지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까? 김태년 씨와 박충렬 씨의 증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진술하고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안기부 직원들은 박충렬 씨 증언대로 '축제'의 분위기로 돌변을 하겠지...?.

영화의 거의 끝나갈 무렵, 김삼석·김은주 납매가 남산의 한 터널을 빠져 나온다. 그 어두컴컴한 곳을 나오며 '개혁의 대상이 아닌 체제의 대상인 안기부'를 얘기한다. 이 터널의 끝은 밝음일 텐데... 나 또한 그 밝음을 보지 못 한 채 화면에서 눈을 떼고 만다.

박승관(민주헌법운동시민연합 영화분과 '영상세대')

정당방위 구속자 석방운동

7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은 지난 25일부터 가정폭력피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생명의 위협 속에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가 구속된 이들을 석방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운동에서는 38년간 구타를 당해오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김 아무개(62·1심에서 3년 선고) 씨 등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서울여성의전화는 오늘 낮 12시 명동

에서 거리 서명운동과 아내구타사건 전시전을 갖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며, 인천여성의전화가 오는 6월부터 세 차례 행사를 갖는 등 각지에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문의:02-269-2962)

못버리는 옛버릇

불법검문 다시 활개

한동안 '천절검문'을 선보이는 듯하던 경찰이 다시 강제불법검문을 일삼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린 종로공원 주변과 종로일대에서는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불법검문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3중4중으로 검문을 당하던 시민들이 불편과 불법행위에 항의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특히 불법검문에 항의하던 대학생 두 명이 강제연행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2학년인 최 아무개, 민 아무개 씨는 28일 오후 4시 30분경 종로3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불법검문에 응하지 않자 이동파출소(일명 '닭장차')와 인근 파출소로 강제 연행당했다. 최 씨는 "전경들이 소속과 이름, 검문 목적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길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문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그런 것은 모른다며' 강제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최 씨와 민 씨에 따르면, 강제연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동파출소 안에서 두 사람의 가방과 수첩 등 소지품을 강제로 빼앗아 뒤졌으며, 파출소로 끌고간 뒤, 변호사와의 통화를 요구하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민 씨는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30여 분간 이동파출소와 파출소, 경찰차량 등으로 끌고 다니다 대학로에 내려주었다.

한편, 이날 경찰이 종로3-4가 차도 뿐 아니라 인근의 2차선 도로 가운데 한 차선 쪽을 완전히 점거함에 따라 종로일대에선 심각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5월 30일(토)

제 1136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국민의 정부'아래서도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오전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이소선 여사, 강정구 교수, 김중배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 이적단체 철회와 출범식 평화적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경찰이 한총련 출범식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를 전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사회각계 인사들의 공식적인 항의로, 백기완 씨 등 원로 인사, 종교계의 홍근수 목사, 문규현 신부, 학계의 김진균 교수 등을 비롯해 각계 인사 1백65명이 이번 기자회견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가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종전의 잘못된 매도를 중단하지 않고 또 헌법상 보장된 그들의 자율적이며 평화적인 활동과 출범식마저도 불법시하고 원천봉쇄와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정구 교수는 "요즘 대학주변은 김영삼 정권 때보다 더 삼엄하게 불법적 불법검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실업자들과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학생운동을 엄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 논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총련은 예정과 달리 29일 오후 서울대에서 기습적으로 출범식을 치렀다.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정부가 또다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무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짓누르려 하고 있다.

28일 검찰은 과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며, "과업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당시 독소조항으로 폐기한 '제3자 개입금지'를 교묘하게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견된 사태다.

당시 새롭게 삽입된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노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전제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등의 당사자 측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신고는 지원을 받기 3일 전에 해야하고 지원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받는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민승리21은 29일 논평을 통해 "권영길 대표는 민주노총의 지도위원이기 때문에, '3자개입' 혐의를 씌울 수조차 없다"며 "검찰은 언론에 혐의 사실을 공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 "김대중 정부는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제봉틀' 발언에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입을 봉하려는 시도"라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정부 마음에 드는 내용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며 비판했다.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 기념, 인권 심포지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생존권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권운동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IMF 관리체제 아래 진행되는 자유시장화 정책은 '인권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긍정적 요인을 압도하며, 민주생존권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대통령이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의 도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이날 '진보적 인권운동'을 거듭 강조하며, "현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민중에 밀착하는 인권운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하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학살'의 문제에 인권운동이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진적·실질적 민주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민중연대로서의 인권운동"을 강조했다.

<주요 발제 내용> 다음주 소개

<인권하루소식> 98년 5월분 총목차(1116-113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16	5/1	1	불법검문 불법중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함일무장투쟁사 등 이적표현물 혐의/〈만화사랑방〉 의문사·열사 진상규명
		2	4·30 청년학생투쟁대회 열려- 위기의 대학, 민중연대로 돌고/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3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대표)
1117	5/2	1	분노의 폭발, 제108주년 세계노동절/범민련 김영제 씨 연행, 안기부 이송 예정
		2	〈노동절 특집-실업자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미국내, 한국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1118	5/5	1	실명위협 외면 수사강행-경찰, 폭력적 연행 및 수사관행 여전/이철용 씨,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2	사상·표현의 자유 촉구, 통신인들 "국보법 철폐" 주장/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이례적 조치/주간인권호름(4월 27일-5월 3일)
		3	〈인권시평〉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119	5/7	1	비정규직 노동자 봉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만화사랑방〉 참담한 가정의 달
		2	"외자유치, 만병통치 아니다", 민주노총 2기 노사정위 불참/KBS 개혁프로 불방 규탄, "시민단체 연대행동" 촉구
1120	5/8	1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집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사라진 '친필검문',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국제사회주의자,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2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③ 문민시(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평화와 인권〉 편집장)
1121	5/9	1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국제사회주의자 수사, 부당관행 되풀이/〈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 문화공간으로
		2	실직노숙자 인권보장 촉구,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에바다투쟁, 5백28일 경과- 대통령 입장 표명 촉구/〈광고〉 '22일간의 고백' 시사화
1122	5/12	1	지옥같은 노동현장- 한국타이어 노동자 "여기는 교도소"
		2	〈1면에서 계속〉 한국타이어- 유일한 휴식공간이 '화장실'/주간인권호름(5월 4일- 5월 10일)
1123	5/13	1	정치연대·전해투 유인물 등 불은 낙인/북비권 행사에 폐쇄적, '관노청' 중형 구형/〈자료〉 검찰이 지목한 '불순유인물'
		2	"동성에, 비정상인가"-동성애자인권연합 등 토론회/KNCC, 학생탄압 우려·자의적 구속 규탄/국제사회주의자 검거, 프락치 덕/사회복지학계 공동성명,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1124	5/14	1	'사랑의 때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논란/공안당국, 노동자 추적- 5·1절 시위자 사진 체증/〈만화사랑방〉 변화없는 '국민의 정부'
		2	고통분담 명분, 산재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1125	5/15	1	'우연한 만남' 트집- 기획사 실장, 경찰에 시달려/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국민승리 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2	"인권의 눈으로 본 광주"-한국사회학회, 5·18 국제학술심포지엄/〈요안 갈롱 기초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1126	5/16	1	아시아민중 인권의지 집약, 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개막/〈선언대회 첫날 토론 주요내용〉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인권 현실- 제1주제: 아시아 인권현실의 재확인
		2	CCTV 감시 아래 근무,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해설〉 김 대통령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 자유 인정하나, '다짐' 질차 있어야'/참여연대, 시민운동상 수상
		3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토론 요약〉 제2주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인권하루소식> 98년 5월분 총목차(1116-113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27	5/19	1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2	국내단체 인니대사관 앞 시위, 수하르토 하야·인권탄압 중단 촉구/주간인권호름(5월 11일-17일)
		3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박천용 의노협 회장)
1128	5/20	1	교도소 멋대로 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동성에 대학생 목매 자살, 가정에서 외면받고 최후 선택
		2·3	〈발췌〉 아시아인권현장
1129	5/21	1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유가족들 22일째 한맺힌 울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면에는 꼭..."/시민 정보공개청구 운동 출범
		2	도원동 철거민 용산구청 앞 단식농성- 경찰, 농성장 침탈 대책위원장 구속/독일민중제, 김 대통령에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
1130	5/22	1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인권위 기능엔 이견/〈광고〉 쇼아 드립니다.
		2	용기있는 학부모들의 승리, 학교운영위 바른 정착 이끌어/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만화사랑방〉 실종된 5·18정신
1131	5/23	1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안기부 악물수사 의혹제기, 진관 스님 고문피해 폭로
		2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박해받은 작가상' 서준식 씨, 휴먼라이츠워치 선정/민성없는 경찰, 불법검문 항의에 폭행 대응/멀기만 한 독립의 봄, 동티모르 인권보장 촉구
1132	5/26	1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족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해야"/대통령 특단 촉구, 민주노총 '5·27 총파업' 확인/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경찰, 이용자 정보 요구
		2	한반도 평화·군축을 우리 손으로-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주간인권호름(5월 18일- 5월 24일)
1133	5/27	1	제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감 해고자 서울역 노숙/범국민운동본부, 제벌개혁 결단 촉구
		2	"5·18 정신의 인권적 계승", 광주 국제인권센터 설립 논의/〈새로 나온 책〉 『배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역)/도원동 사태 지속, 주민들 단식농성
1134	5/28	1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회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불가피한 선택〉, 민주노총 총파업/ 국제엠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2	〈현장스캐치〉 해 넘긴 복직투쟁, 한상권 교수 "복지보다 소중한 건 원칙"/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선정 '참교육상' 수상
1135	5/29	1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행·6명 집행유예/〈만화사랑방〉 노동자 일방 매도하는 언론
		2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인제대생 11명 무더기 연행/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3	〈이달의 인권영화〉 '22일간의 고백'/정당방위 구속자 석방운동, 7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못버리는 옛버릇, 불법검문 다시 활개
1136	5/30	1	각계인사, "한총련 이적 때도 중단" 및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 촉구/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키로/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기념 인권 심포지엄
		2·3	인권하루소식 5월분 총목차(1116호-113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2일(화)

제 11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국본, 공동대표 김금수 등)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1차 국민대회가 경찰의 불법·폭력행위로 얼룩졌다.

이날 경찰은 서울역광장과 지하철 입구 계단 등 집회장 주변을 전투경찰로 에워싸고 집회장으로 향하거나 서울역 광장을 지나치는 시민들에 대해 강압적으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검문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학생들을 강제연행하고, 연행자들을 장시간 구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적법하게 검문할 것을 요구하는 불심검문 감시단원마저 강제연행했다가 풀어주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집회에 참가한 김도형 변호사가 "왜 불법적으로 검문을 하나며 강력히 항의하자, 전경 지휘관은 '나도 왜 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불법검문에 항의하던 노동자와 학생 가운데 방패에 찍히고 곤봉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람이 속출했다. 특히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불법검문을 막기 위해 항의하던 삼미특수강 노동자는 이빨이 부러지고 방패에 머리가 찢기는 부상을 당했다.

이같은 경찰의 집회장 봉쇄에 대해 집회 참석자들은 강한 몸싸움을 벌여 집회장으로 통하는 길을 뚫기도 했지만, 집회 내내 경찰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한양대 사회과학부 장 아무게 씨는 검문에 응해 신분증을 보여주고도 경

찰에 강제연행돼 12시간을 불법구금당한 경우다. 장 씨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서울역에 왔다가 검문을 요구하길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학생증을 요구해 다시 학생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가방까지 뒤졌으며, 그 속에서 불심검문캠페인카드가 나온 것을 보고는 경찰차에 가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한총련 중앙간부지? 학생회 간부지?'라고 지껄이며 중앙경찰서로 끌고 갔고, 각서를 써야 보내준다면 강압적으로 각서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집회장에선 인권운동사랑방 등 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 등이 '불법검문 감시단'을 구성해 경찰에 대한 항의행동을 펼쳤으나, 경찰은 감시단에 대해서도 폭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팀장 이영태(인권운동사랑방) 씨는 오후 3시경 불법검문과 강제연행을 하고 있는 경찰에 항의하던 중 무작정

연행돼 이동과출소(경찰버스차량)에 1시간 가량 강제구금 당하기도 했다.

한편, 29일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 서울대 주변에서도 불법검문과 강제연행에 따른 피해자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물리학과 김 아무게 씨는 "학교 정문 앞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학생증이 없다고 하자, 다짜고짜 양쪽 팔을 붙들린 채 '닭장차' (이동과출소)로 끌려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경찰에게 '불법구금'이라고 항의했지만, 관악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서에 끌려온 학생들은 어느새 피의자로 분류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임의퇴거는 물론 전화연락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후 김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경찰서로 다시 이송됐다가 새벽녘에야 풀려났다.

30일 집회를 주최한 국본측은 7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역에서의 불법검문에 대해 집회방해 명목으로 고소고발을 계획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나 이번 '시민의 편'과 '합법'을 강조하던 '국민의 정부'가 이날 보여준 모습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 도발일 뿐이었다.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국가보안법 역사 50년, 지나간 역사만큼 술한 고통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53년부터 98년까지 판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문의: 741-5363, 김수경)

- ① 대법원 판결문(53-89년 총 131건/A4 크기, 369쪽) 2만7천 원
- ② 대법원 판결문(90-98년 현재 총 94건/A4 크기, 377쪽) 2만8천 원
- ③ 대법원 판결문(9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A4크기, 193쪽) 1만5천 원
- ④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A4크기, 135쪽) 1만1천 원
- ⑤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A4크기, 106쪽) 9천 원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파업 탄압·불법검문 대응

5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용·실업대책과 제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국본, 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5월 30일 7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발족, 총파업 참여 노동자들의 탄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정부가 이번 파업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라는 미명하에 체포·구속을 단행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일이 생긴다면, 이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감경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발족 첫 사업으로 30일 서울역 집회에서의 불법검문에 대한 고소·고발을 계획 중이다.

유가족 '희망보였다'

6월부터 2차 캠페인 전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시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한 달 여간 진행됐던 유가족들의 대국민 1차 캠페인이 마무리됐다.

5월 29일 1차 캠페인을 마무리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대회」의 김학철 기획국장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상당수의 시민들이 서명 외에도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어 피로에 지친 유가족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유가족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며 한달 넘게 진행된 고된 투쟁의 성과에 대해 만족의 빛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서울에서만 3만여 명이 넘는 시민서명을 받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둔 유가족들은 6월부터 매주 금요일 캠페인을 재개하며, 조직적으로 각계각층의 서명을 촉구하는 제2단계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공판 안내

- ▶ 2일(화)
 - 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 고영복(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 3일(수)
 -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선고
- ▶ 5일(금)
 - 조원길/안미숙(국보법)/차준국(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주/간/인/권/호/름

(98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25일(월) 한국금융연구원, 실업률 8.9%, 실업자 최고 1백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국산업안전공단, 31년 동안 크롬도금작업을 해오다 비강암에 걸린 심아무개(57) 씨의 발병원인을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

◆26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철도청이 14일 실시한 여성 열차승무원 면접시험이 '외모' 위주로 선발하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겼으며 정도환 철도청장을 서울지법에 고발/정부, 성용승·박성희 씨 등 시국관련 사안으로 그간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의 귀국 허용 추진키로

◆27일(수) 민주노총 오후 1시부터 28일까지 시한부 총파업/한상권 교수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는 덕성여대의 보직교수 김종화 교수 등 3명, 한 교수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 데 불만표시로 재단이사회에 보직사퇴서 제출/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전쟁기념사업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시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AFP AP 연합〉 보도, ILO측 전세계 어린이의 약 1/4이 시간제나 상근제 형태로 노동하고 있으며 이중 2/3은 위험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밝혀, 또 아시아 어린이 1백만여 명이 성적 거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자료공개

◆28일(목) 인도네시아 대학생 400여명, 22일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이다 해산 당한 뒤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하비비 대통령의 사임촉구 시위

◆29일(금) 민변, 인권논문 시상식/한국여성단체연합, 체점 오류로 재심사가 열리는 미스코리아대회의 방송 중지 등 요구하며 항의시위/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각계원로와 사회단체 회원 등 165명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폐와 출범식의 평화적 보장' 촉구/기아자동차 노조원 송인도 씨가 분신/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각 사업장 노조간부 143명 전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수사 지시

◆30일(토) 노동·시민단체 회원들, 서울역 광장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제벌개혁 등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남북어린이에게 등무 등 북한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분유와 의약품 등 5억5천 만원어치의 구호물품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

◆31일(일) 국방부, 전시 국가동원법 제정키로/경찰, 한총련 출범식이 열린 29일부터 31일까지 5백19명을 연행해 이중 4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AFP 연합〉, 중국 반환 뒤 처음으로 홍콩에서 천안문 사태 9돌 기념시위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인권 시평

5월 29일 오후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모여서 제6기 한총련 출범식을 가졌다. 뒤늦게 학생들의 집회를 알아차린 경찰이 병력을 증강시키고, 서울대 항공에 경찰헬기가 뜨고 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팽팽했지만, 학생들은 서둘러 출범식을 마치고, 경찰도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하지는 않아서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학생들의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허를 찔렀다고 한다. 분풀이라도 하려고 해서 그랬을까. 출범식 다음날 벌어진 서울역 집회와 명동 집회 등에서는 학생 5백여 명을 연행했다고 한다. 그래도 심하게 다치거나 상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작년 한양대, 재작년 연세대에서 벌어진 공방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다.

잘못된 판결이긴 하나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는데도 굳이 '한총련'이란 이름을 고집하고 있고, 대중성을 결여한 관성적인 운동을 되풀이하는 한총련에게도 할말이 적지 않지만 한총련에 대한 공격적인 비판이야 주류 언론이 언제나 반복하는 일이니 오늘은 한총련의 맞상대쯤 되는 경찰을 비롯한 공안세력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싶다.

대통령의 '한총련'관

내가 만나 본 대통령은 학생운동에 대해 매우 균형잡힌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한총련이 반보좌 대중들에 앞서 가다가 대중이 따라오지 않으면 잠시 기다리는 여유와 지혜를 지니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학생운동가들이 순수하다는 것과 조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한 그동안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학생운동이 많은 공헌을 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96년 연대사태를 두고서도 공안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만 했을 뿐이었다. 내가

이한 대통령은 학생운동이 지닌 몇몇 오류에 대해 걱정할 뿐, 적어도 학생운동과 운동가들을 때려잡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2년 넘게 학생운동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86년 건국대에 학투련 사건으로 대규모 검거사태가 있고, 언론과 정부와 법원이 학생운동에 시뻐진 듯철을 헤넬 때도 학생운동은 심히 우려할만한 지경에 처했지만, 뼈를 깎는 각성과 진지한 변화모색을 통해 그 다음해에는 6월항쟁이라는 빛나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 학생운동에는 자정의 능력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영남대에서 예정되었던 대의원대회를 연기

하는 한 대통령은 학생운동이 지닌 몇몇 오류에 대해 걱정할 뿐, 적어도 학생운동과 운동가들을 때려잡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2년 넘게 학생운동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86년 건국대에 학투련 사건으로 대규모 검거사태가 있고, 언론과 정부와 법원이 학생운동에 시뻐진 듯철을 헤넬 때도 학생운동은 심히 우려할만한 지경에 처했지만, 뼈를 깎는 각성과 진지한 변화모색을 통해 그 다음해에는 6월항쟁이라는 빛나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 학생운동에는 자정의 능력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영남대에서 예정되었던 대의원대회를 연기

한총련 죽이기는 대통령의 뜻인가
공안의 독자적 판단인가
만만한 상대를 골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가

한 것이나, 출범식을 싱거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치른 것은 학생운동이 변화발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예전에는 한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군부와 학생운동밖에 없는 것으로 비쳐질 때도 있었다. 누르는 군부의 힘이 강할수록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힘도 상대적으로 강해 보였다. 그렇지만 지금 실정은 어떤가. 수십 개 총학생회가 한총련 개혁을 요구하며 이미 탈퇴하였고, 포스트모던한 대학분위기와 학생운동은 잘 어울리지도 않는다. 고시공부를 위해서나 재미나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천명이건 2천명이건 간단하게 모이지만,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도 학교마다 1백명이 모여 집회를 갖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학생운동이 그동안 힘겹게 떠맡았던 민주주의를 위한 짐은 다양화되고 조직화된 여러 갈래의 운동으로 이미 전이되었다.

왜 유독 한총련인가?

그런데도 왜 공안세력은 별 영향력도 없는 한총련에게만 유독 시퍼런 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가. 노동절 집회에 작정하고 200개쯤 되는 쇠파이프를 들고 거리로 나와도 그것 가지고는 정부전복은 고사하고, 고용안정이나 제벌개혁도 이룰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까지 물리력으로 어떻게 될 정도로 허약하지 않은데,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정부가 학생들 수백 명이 모여 '김영삼 처벌', 'IMF 제협상' 따위의 구호를 외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공안들은 학생들을 못잡아서 안달인가.

민주노총이 집회·시위·농성을 위해 명동성당을 찾아오면 어김없이 무장한 경찰병력이 성당 주변을 겹겹이 에워싼다. 그런데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나 노조원들이 성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병력을 풀어놓지는 않는다. 경찰들에게 물어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한총련 학생들이 명동에 들어와 하려고 하는 '노학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병력을 운용한다. 정말 진지하게 다시 묻겠는데, 한총련은 그토록 위험한가.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안되고, 스스로 집회를 여는 것도 안되고, 컴퓨터 통신을 사용하는 것도 안되고, 거리 곳곳에서 숨어 내야할 정도로 참으로 그토록 학생들은 위험한가.

요즘 들어 개혁의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대통령 혼자 개혁적이지 않다는 요지부동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들린다. 공안들의 '한총련 끝까지 죽이기'를 보면 대통령은 '바람 쫓' 하는데 일선 경찰은 고집스럽게 '바람 쫓'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는 한총련 죽이기가 대통령의 뜻인지, 공안들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알고 싶다. 혹시 공안들이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건대 가장 만만한 적수를 찾아서 그토록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3일(수)

제 11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겸 '97년도 보호관찰심사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감시프로그램 등을 빠르면 2003년경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보호관찰 담당자는 "96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 성인범에까지 전면 확대되고 최근 경제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판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호관찰의 운영에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준의 인력 내에서도 효과적인 지도와 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이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자의 전 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용 설치를 이동과 행동을 제한하고자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전자감시장치의 제법방지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가석방 선고 등을 받은 자, 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 범죄내용이 경미하거나 개선의 가능성이 현저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정기적 또는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동태와 신상의 변화에 대해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호관찰관은 제법방지를 위해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대상자의 행동과 주변환경을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보호관찰 처분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에게는 늘 보호관찰소의 감시와 통제가 따라붙는 것이다.

전자감시 대상자 확대 열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감시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이들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감생활을 마친 사범들에게 대해서까지 보호관찰이라는 추가적인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단일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기가중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뿐만 아니라 거주와 이동의 제한이 필요한 정신지체장애나 유락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까지 전자감시장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장치의 제법방지와 국가예산

의 절감 효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병용한 가택수감 형태의 형벌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 전자감시장치는 도입과 함께 미국 내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침해나 영장없는 가택수색, 구속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시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여부를 놓고 가열된 바 있는 사생활권 침해와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통해 다시 한번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12명 대공분실 연행

공안비림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제사회주의자그룹 17명이 대거 구속되고 인재대생 11명이 일시에 구속된 데 이어, 1일 안양민주청년회(안민청) 회원이었던 김종박 씨 등 12명이 일제히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1일 연행된 안민청 회원들은 지난해 말 이후 모두 모임에서 탈퇴해 이 단체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연행자 명단: 김종박, 윤여창·윤정희(부부), 김대기·홍선에(부부), 안은미, 정경희, 최원희, 강해령, 김선희, 강명옥, 강현수

구독료 납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로번호 7618848

'유인물 배포' 이유 해고

한화 계열 (주)오토론, 부당노동행위 판처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근절'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구로공단에 위치한 한화그룹의 계열사 (주)오토론(대표이사 김용구)에서는 지금 15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징계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해고 및 징계 사유는 다른 아나라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 4월 18일경 그때까지 체불되었던 150%의 상여금에 대한 지급약속을 받아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보냈으며, 그 후 정문 앞에서 진정서 제출을 보고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의 명예실추·회사규율 위반·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8명 징직, 4명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특히 3명은 '경력 및 학력 허위 기재' 등의 이유를 추가해 해고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95년 오토론이 한화그룹에 인수될 당시, 한화측에서 53개 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개악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회사는 97년 노조에 항후 3년간 임단협 위임 등을 요구했고 그해 11월과 올 3월 총 50여 명의 사원을 부사이동, 전환배치를 통한 권고사직, 희망퇴직 형식으로 해고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신규인력 등으로 채웠다.

유금옥 씨는 "장기근속자를 해고하고 신규사원을 채용한 것은 임금을 적게 주고 오토론 사원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그외에도 근무시간변경을 통한 월차수당의 폐지, 연차수당 부분적 강제저지, 생리수당 부분적 폐지 등으로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 씨에 따르면, 오토론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든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5년차 노동자가 월 실수령액 53만원 정도를 받고, 10년을 일해도 60만원을 넘지 않는데, 사측은 작년 12월부터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체불하기 시작해 현재 체불 상여금이 2백%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 아래 노동자들이 기릴 곳은 노동조합 뿐이지만, 오토론의 노동조합(위원장 신성균)은 현장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거의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노조는 지난 4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보내고 회사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조합원 3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더라도 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조합의 단결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유금옥 씨는 "신성균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회사측의 입장만

앞세웠다"며 "노조는 그동안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체없다' '기다려보자'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고와 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은 연일 출근을 시도했지만 관리직들의 제지로 번번이 실패했으며, 그 과정에서 5월 22일 장명남 씨가 관리직원들에 떠밀리면서 시멘트 바다에 머리를 부딪혀 119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또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조합원들이 관리직원들에게 카메라를 빼앗기는 일도 발생했으며, 여성노동자들이 남자 직원들의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유금옥 씨는 또 "사측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우리들에 대해 '공산당이다', '외부의 사주를 받고있다' 등의 말들을 퍼뜨리며 조합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

지난달 27일 분신한 기아자동차 노동자 송인도(37·차체1부 접수반) 씨는 생활고와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분신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무단결근처리에 항의하고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온몸에 신나를 뿌린 채 사무실에서 분신, 온몸에 3도 35%의 화상을 입은 채 현재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송인도 씨의 담당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은 있지만 화상환자의 돌발적인 상태변화를 볼 때 아직 안정된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단일 합병증 발병시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씨의 분신장소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참고 견디며 다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날이 오길 기다리며 견뎌왔는데, 저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체불임금 지급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의식이 있었던 송 씨를 병원으로 옮기며 찍은 비디오에는 "너무 힘들었어. 도저히 말로는 표현이 안돼. (공장) 문만 들어서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갑갑했어. 만만한 게 없었는 우리들이야. 진짜 힘들다. 나 지난 달에 34만원 댔다. 무단결근했다고 다 빼버리고 돈 34만원 주더라. 이대로 어떻게 사냐"며 김계 그을은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97년 부도이후 1만 명이 감축되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총 1천5백76억6천2백만 원, 1인당 9백만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 조합원이 떨어져 임금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생활고에 시달려왔으나 회사측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거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신청, 파업참여 조합원의 무단결근처리 등의 강경대응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측은 중앙쟁의대책위를 설치해 송 씨의 병실을 지키는 한편,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유종열 법정관리인에 대해 1일부터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부위원장 김동철 씨는 "회사측이 송 씨의 사건을 제외한 노조측 요구에 대해선 6월말에 만기되는 단체협상의 취약점을 이용, 시간끌기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 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이제 사람들은 과거처럼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계(視界) 속에 내일이 들어오지 않는 혼돈 속에서 과거에 열정적으로 진보와 희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해매고 있다. 그들은 혹은 바다 모를 허무와 비판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혹은 영리한 기회주의자가 되어 거리낌없이 자신에 대한 지적 배신을 감행하고, 혹은 씩씩한 꿈을 버리고 왜소한 일상 속으로 후퇴한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확실히 현대 세계는 혼미상태에 있는 것이다.

인권운동이 '과학'과 특정한 '역사법칙'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 운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본주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을 소외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흔들림 없는 진보운동이어야 한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화 정책은 벌써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의 도래가 예견되고도 남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② 인권운동 상황 개관
 <여성, 장애인, 북한동포돕기, 노동 '인권교육' '대학생 인권운동과 불심검문 거부운동' '국가보안법, 과거청산운동'에 대한 발제 지면상 생략> 편집자주

▶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 혹은 탈 정치의 '인권'
 작은 권리찾기 운동은, 그 운동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권운동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성공도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은 전혀 '인권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난시청 지역 시청료 내야하나?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없다. 등등. 그 '대표적 사례' 중에는 예를 들어 노상검문 문제나 유치장에서의 불편과 터무니없이 짧은 구치소 면회 시간, 혹은 민방위훈련에의 강제동원과 같은 그야말로 '작은 권리'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무수히 존재하는 국민의 인간적 요구 중에서 특정한 것들만이 '인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특수하게 법적 표현 형태를 부여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권'이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되는 일종의 대항적 개념인 까닭이다.

결국 작은 권리찾기 운동은 90년대 이후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에 편승,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운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업매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그 밖의 문제들
 우리의 인권운동 상황은 매우 염려스럽다. 우선 우리에게 남의 인권을 위하여 '일해주고 있다'는 고답적인 자세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의 인권운동은 인권을 위하여 스스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표시'를 세워나간다는 박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인권운동가 일반이 그렇지만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그런 기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70-80년대의 인권변호사 몇몇 맹장들은 민중들과 함께 핍박을 받으면서 '인간'임을 증언했다. 혹 시대가 변하여 핍박받을 거리가 없어졌다고 할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많은 인권 변호사들은 관사에게 '찍히는' 일을 꺼리고 혹은 비웃음을 살 것을 꺼리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는다.

(3)-생략

(4) 21세기를 바라보는
 인권운동
 무엇보다도 인권운동은 현 시기 대중의 고통에 밀착해야 한다. '기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로 돌아가야 하며, 대중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을 증명하면서 현실의 구조를 넘어야 할 운동 일반의 사명을 확실히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런 운동에 적합한 사업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계획적인 인권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자적으로 양지를 찾아가는 운동형태를 과감히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주 고도의 예지를 가진 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대단히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철저히 인간해방·민중해방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권운동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다.

이 혼미와 허무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은 '진보'를 뚜렷이 자각하는 운동으로 재편성됨으로써 비틀린 '인권' 개념에 매달리는 '자본'을 위한 인권운동과 투쟁하는 한편, 진보적 인권운동의 새로운 거대 담론을 만들어 내면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 실현과 인간해방을 위해 복무하는 운동으로 살아 남아야 한다.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① 우리의 인권상황 개관
 현 시기 우리의 인권상황은 한마디로 매우 암담하다. 50년만의 정권교체, 즉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권의 수호자'(사실은 '인권의 희생자'이다) 김대중 씨가 이끄는 새 정권이 출범했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국민인권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인권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히 그의 동맹자(자민련)의 보수성향 내지 반동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약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의 인권상황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인권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다소의 긍정적 요인을 멀리 압도하는 경제위기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4일(목)
 제 11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

집회·시위장소에서의 불법검문 등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5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용·실업대책과 제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길, 김금수, 김중배 등 19명)는 3일 김세욱 경찰청장과 김광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전두경철대 중대장 등을 △집시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행한 것 역시 명백히 부당한 신체의 구속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그밖에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의 중단을 요구하다 전경들에게 집단구타당한 사태와 관련, 해당 경찰관들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천 명의 전경들이 차도를 점거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의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에 대학생들의 참가를 봉쇄하기 위해, 불법검문을 자행하고 강제연행, 폭행사태 등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들은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서 "경찰이 서울역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출입을 불허한 것은, '누구든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당초 집회신고서 대학생들을 집회참가에정인원에 포함시켰다"며, "당연히 참가 자격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집회참가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결과 대학생으로 판명된 경우 강제로 연

에 대해 의식이 또렷하고 약간의 대화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또 "석호의 의식을 잃기 전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 들 아보다 머리를 무언가에 얻어맞고 쓰러진 후 등에 화기를 느꼈다. 쓰러지기 직전 철거용역원이 쓰는 하얀 하이바(안전모)를 썼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백 씨의 가족들이 '심신안정' 등을 이유로 면회객을 사절하고 있어 백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백 씨의 주변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찰이 다녀갔으나 녹음기를 숨겨 들어가는 등 불쾌한 언동을 자행, 가족들이 환자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박순덕 씨 사망시에도 겪었지만 경찰은 환자의 불분명한 진술을 녹음해 편의를 따라 편집,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백 씨는 사건 당일 새벽 공사현장 내 골리앗에 비상식량 등의 물품을 전해 주러 들어갔다 화염방사기에 의해 3도 40%의 중화상을 당해 지금까지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백 씨의 가족들은 백석호 씨의 상태 화상경위 실마리 찾을 듯
 지난 3월 30일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 운중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백석호(28) 씨가 의식을 회복,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4월1일, 3일자 등 참조).
 백 씨의 가족들은 백석호 씨의 상태

6월 5일자 하루소식 습니다

행사와 동정

- '세계화의 덫' 저자 헤럴드 슈만, 서울강연회
 ·때: 6월 5일 (금)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2층 (723-4255)
- 백태웅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문화제 "하얀햇살"
 ·때: 6월 5일 (금) 오후 6시 ·곳: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 6월 민주항쟁 11주년 기념의 밤
 ·때: 6월 10일 오후 7시 ·곳: 성공회 대성당
 ·참가비: 1만원 ·문의: 환경운동연합 (735-70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1차년도 임원 개편
 ·회장: 최영도 변호사 ·부회장: 박연철, 송두환, 최병모 변호사
 ·사무총장: 윤종현 변호사 ·사무차장: 임영화, 이인호, 조광희 변호사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대응논의와 대중들의 저항 내에서 '인권'이라는 담론은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1) 지배적 상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의 흐름은 '전세계적 외채상환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있고, 그 조절기제는 'IMF/세계은행의 거시경제적 개혁정책'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개발과 외채상환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개도국의 외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유엔도 IMF의 구조조정정책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IMF가 유엔의 인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 지배적 상황: 반이성과 빈곤의 세계화

선진국과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의 세계화는 갈등과 분쟁의 지구적 확산, 전지구적 불평등의 심화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화와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기도 한다. "지역의 해체를 대가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통합", 즉 "깊은 불신의 골에 갇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지배적 상황: 생존권적 저항과 연대의 세계화

최근 대다수의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국제연대망을 형성하면서, IMF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이론적·실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제3세계네트워크', '지구의 친구들', '대안의 개발정책 그룹' 등은 국제경제질서의 부도덕성, 반인권성, 반인륜성을 드러내기 위해 국제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생존권적 저항도 전개되고 있다. 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린던 코펜하겐에서는 브레턴우즈체제의 종식과 투기자본의 통제를 요구하는 세계 민간단체들의 공동집회가 개최됐다. 캐나다와 유럽 노동조합이 주도한 "세계화와 기업의 지배"라는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의 지배를 초래하는 다자간투자협정, WTO, 투기자본, IMF/세계은행을 사회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삼기로 결의했다. 멕시코의 사바피스따 농민군의 저항, 인도네시아의 최근 민주항쟁도 IMF체제에 대한 생존권적 저항의 사례들이다.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인권론의 의의

개발주의(경제주의)는 인간을 경제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이에 반해 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간이 자신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경제체제와 사회환경을 결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 또한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5)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세계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는 체무국의 주권이 선진체권국과 국제금융기관에 의해 제한되고, 일국 내에서는 노동자와 중산층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권력의 구조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기업의 지배"는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리는 강력한 주제로 성장하고 있다.

(6) 국제경제기구의 국제법상의 책임성

IMF와 세계은행은 자신들이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보장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때 국제적 법인격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법해설에 따르면, 국제적 법인격인 IMF도 국제법상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

IMF의 차관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국제 인권법상의 근거는 바로 '발전의 권리'다. 86년 유엔총회에서 선언된 발전의 권리는 구조조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격을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7) 발전의 권리의 핵심인 참여의 권리

소수 경제전문가들과 고위 정치인들 간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발전의 권리다. 발전의 권리의 관점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이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IMF의 구조조정에 맞서 발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인권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8) 구조조정의 여파와 대표적인 인권침해 영역

인민의 주권과 참여의 권리를 부정하는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로는 실업의 증대, 임금하락, 빈곤의 심화, 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심화, 식량안보의 위협, 광범위한 환경파괴, 보건의료체제의 약화와 질병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9) 인권운동의 과제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과 기업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급진적 공세와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는 보수적 방어는 인권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딜레마다. 이러한 딜레마는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 시장을 넘어서는 전망과 관련된 급진적 인권규범의 형성, 기본자원에 대한 시장불가침 영역 설정,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인권운동의 급진화를 이룸으로써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6일(토)

제 11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15년간의 폐쇄독방 수용, 개발고문 등의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었던 '대도'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재판이 한 달여 만인 5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세형 씨는 "15년 간 엄정독거를 당한 것은 흑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교도소장들의 안일무사주의 때문"이라며 "이는 '감옥 권력'에 의한 가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또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관들에 의해 타살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입막음'을 요구하는 교도관들의 회유를 거부한 대가로 15년 동안 엄정독거를 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엄정독거'란 요주의 인물을 감시와 통제할 목적으로 독방에 수용하는 것으로 행형법 시행령은 재소자를 최대 2년6개월 이상 독방에 가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관들의 회유를 거부한 뒤 57일간 수감과 포승에 묶인 상태로 3층 특수방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는 85년 9월 발생한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당시 교도관들이 감방문을 열어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으며, 그때 박영두 씨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8사동으로 옮겨가 그곳 재소자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 씨는 "3일간 무장교도관과 대치하다 스스로 시위를 해산했지만, 교도관들은 동등이로 우리를 때려잡은 뒤, 난동과 탈주를 피한 것으로 허위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증거없는 주장" 이의제기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과 조 씨의 체

포·수사과정에 관련된 변호인 신문이 이어지자, "본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증거없는 주장을 여과없이 선전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조 씨의 제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진술과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초점인 제법 가능성 여부와 관련, 조 씨는 "내 진실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징역살이 과정은 누구보다도 교정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며, 청송교도소의 교도관들 가운데는 탄원서를 써주겠다는 직원들도 많지만, 모두 '윗사람'들 때문에 좌절됐다. 15년간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안다면 제법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나는 '대도'니 '의적'이니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말하고 다닌 적도 없다"며 "나를 있는 그대로의 인물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재판은 7월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되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해 신문이 진행된다.

☞ 무료초청 시사회

<태평천국의 문>

인권영화제 후원회원에게 먼저 공개합니다.

(태평천국의 문)은 89년 중국 천안문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며,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여러 차례 국내에서 상영이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 때: 6월 10일(수) 늦은 7시
- 곳: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 초청대상: 인권영화제 1·2·3회 후원회원(함께 오시는 3명도 가능)
- 주최: 제3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 주관: 광남시네마
- 문의: 인권영화제 사무국(김정아: 741-2407)
- 참가방법: 후원회원께 이미 발송한 초대권을 가져오시거나, 못 받으신 분은 상영시간 30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상영장에서 제3회 후원회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국제 인권 소식> 아프리카

외채에 눌린 생존권

서방 경제부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최근 옥스팜(Oxfam)이라는 한 개발단체에 의해 유엔에 가장 엄격한 차관정책 국가로 고발됐다.

그 까닭은 이러한 채권국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채무이행을 강요함으로써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채무국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단체인 옥스팜은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글을 통해 "심각한 채무국으로서의 경제빈곤들의 자생력을 그 세 국가가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탄자니아는 외채담감을 위해 지출하는 액수가 기초교육에 투자하는 액수보다 많으며, 이티오피아의 경우, 십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매년 설사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공공보건에 쓰는 액수보다 외국의 부채담감에 들어가는 돈이 3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옥스팜은 "이 세 국가가 반자동 정책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발 단체들은 독일에 의해 부과된 정책들이 채무국으로 하여금 교육과 보건에 대한 비용을 삭감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이탈리아의 외채와 관련된 정책들은 유엔의 아동권리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게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정부의 행동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옥스팜은 "높은 외채부담 국가들의 전체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탐감할 수 있는 외채는 7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지난해 아시아 금융 위기 초기단계에 아시아 국가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독일, 일본은 그들의 원조 정책이 G7 중 가장 관대한 정책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지만, 이에 대해 옥스팜은 부분적으

로 독일과 일본의 국제원조기금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우간다,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와 같은 높은 외채국가들의 자립 자생능을 가로막는 외채 원조의 분배 자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적표현물 혐의 무죄

'미래통신' 구속자 석방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남용이 또 한 번 사법부의 제동에 걸렸다.

5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수형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취득·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래정보

센터 백성기(35), 강공우(30), 김치영(29), 정문일(30)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 등은 컴퓨터 통신상의 부정기 간행물인 '미래통신'을 통해 각종 정치 동향, 이론동향, 시론 등을 제공해 왔으며, 공안당국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해 12월 28일 이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이는 한편,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론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를 구현한다'고 주장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고인들이 사용한 '투쟁' '해방' '전위정당' 등의 표현이 과격하다 할지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단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운동권과 학술계 동향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장스케치> 재미동포들의 명동, 모란공원 방문 "IMF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나요?"

험렁한 청바지, 짧게 자른 머리, 커다란 배낭. 얼핏보면 명동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들 같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유창한 영어와 약간의 서툰 한국어로 진행된다. 지난 30일 고국을 찾아온 이들은 미국 버클리대에 재학중인 재미동포들이다. 책에서만 배우던 한국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 2주일 일정으로 찾아온 이들은 5일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명동성당과 민주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마차 모란공원을 방문했다.

명동성당을 방문한 이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의 외관에 깊이 감명을 받은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러한 화려함만이 아니었다. 벌써 몇 달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IMF란 수렁 속에 빠져있는 고국의 아픔을 절감했다. 감미정(3학년) 씨는 "천막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기본적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오늘 결혼식장에 오는 차들은 하나같이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들뿐이네요. 한국의 IMF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는 건가요"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모란공원을 방문한 이들은 차례로 민주열사들의 묘를 참배했다. '열사'니, '분신'이니 하는 생소한 단어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분신 열사의 묘를 참배하는 동안 내내 두려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예전엔 열사들의 시신이 강제로 탈취 당해 화장을 당하기도 했다는 설명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정부인가?"라며 한탄했다.

박한진(4학년·공대) 씨는 "이번 한국 방문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배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9일(화)

제 11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길가던 대학생, 황당한 구금

불심검문 응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

황당한 이야기 하나.

연세대 기계공학과 선후배인 조영삼(남·3학년) 씨와 나정인(여·1학년) 씨. 두 사람은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까닭모를 구금을 당해야 했다. 이유가 있다면 단지 그들이 '대학생'이라는 사실.

두 사람의 불면은 서울역에서부터 시작됐다. 남대문시장에 옷을 사러 가던 그들은 이날 서울역 주변을 지나던 모든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국민대회가 열렸고,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일제 검문검색을 벌였던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그들에게 전경 한 명이 다가와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자, 별로 거리낄 게 없던 그들은 순순히 학생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학생증만 보여주면 보내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순진했다.

학생증 제시하자 임의동행 요구 학생증을 보여주자 나니 이번엔 '잠깐 조사를 할 게 있다'며 임의동행을 요구한다. 두 사람은 순순히 따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이름까지 불러주었다. 잠시 후 "더우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깐만' 차에서 기다리라"는 말에 두 사람은 전경버스에 올라탔다. 차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누군가가 "언제 끝나요"라고 물으면, 전경과 사복형사의 대답은 항상 "금방 끝나니까 잠시만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차안에는 주말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려던 사람, 천천히 49제를 맞아 지방에 내려

가는 사람, 1주일 전 군에서 제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던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바쁜 사람들이었다.

정해진 속셈

하지만 경찰의 속셈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잠시 뒤 경찰은 "잠깐만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하자"며 술술 본색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일순 반발했다. "아주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곧 흥분을 가라앉혔다.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에게 한 전경은 "다음부터는 학생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라"며 친절할 충고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20-30분이 더 경과한 뒤 버스는 동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때서야 비로소 버스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호출기 비밀번호까지 들춰내

동대문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시 노랑진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경찰의 태도는 이제 범죄자를 다루는 듯했다.

의자도 아닌 땀 바다에 앉을 것을 지시받은 채, '조사'는 시작됐다.

형사는 조 씨에게 '연행' 전날인 29일부터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고는 밤 11시경 집으로 확인전화까지 걸었다. 또 허락도 없이 소지품을 뒤진 것은 물론, 집으로의 연락도, 임의퇴거(임의 동행 후에도 임의퇴거는 가능하다) 요청도 모두 묵살했다.

나정인 씨가 당한 수모는 더 치욕스럽다. 형사는 그에게 학회 구성원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호출기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해 메시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나 씨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숙직실에 나뒀던 가방에서 물건이 사라진 것이었다.

"대학생인 걸 탓해라"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은 조 씨가 경찰에게 따져 묻자 그 경찰은 "내가 너희 잡아왔나? 나는 너희가 잡혀왔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뿐이다"며 "이 땅에 태어나고 너희가 대학생이라는 것을 탓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12시간이 지난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조 씨 일행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그것도 '훈방'이라는 처분을 받고... 나정인 씨는 "이 나라의 대학생은 자유롭게 아무 곳이나 다닐 자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 무료초청 시사회

<태평천국의 문>

중국 천안문사태의 기록!! 국내 개봉 수 차례 불발!!

인권영화제 후원회원에게 먼저 공개합니다.

- 때: 6월 10일(수) 늦은 7시
- 곳: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 주최: 제3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 주관: 광남시네마
- 초청대상: 인권영화제 1·2·3회 후원회원 (함께 오시는 3명도 가능)
- 초대권을 가져오시거나, 없는 분은 상영시간 30분전에 오시면 됩니다.
- 상영장에서 제3회 후원회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문의: 741-2407)

해산하는 대열, 등뒤에서 덮쳐

경기도경, 평화집회 대학생 폭행

최근 경찰의 폭력행사가 위협수위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 6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들이 대학생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경 경기도, 경희대생 등 대학생 1백여 명은 5일 구속된 김철민 경인총련 의장(경기도 총학생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기도경 공안분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이후 약 10여 분간 구호를 외친 뒤 자진 해산에 나섰다. 그러나, 학생들이 뒤돌아 서는 순간 전경들이 이를 덮쳤고 이 아무개(경희대 1년) 씨 등 7명을 붙잡아 진압봉 등으로 집단구타했다.

폭행을 당한 이 씨는 "곤봉으로 오른쪽 얼굴을 맞아 눈가와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땅에 쓰러진 뒤 곤봉으로 무수히 구타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피를 흘리면서 연행이 되자 형사 한 명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고 코뼈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다산법률합동사무소의 김철준 변호사는 이날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소리회 후원모집

매춘문제를 고민하는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한소리회'가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86년부터 활동해온 한소리회는 매춘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지원, 매매춘의 근절, 매매춘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별후원은 1백만 원 이상, 단체후원은 10만원 이상, 일반후원은 1~5만원 이상이다. 후원회원이 되면 한소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다.

문의 : 02-3147-1505

.....주요 공판 안내

- ▶ 9일 (화)
 - 김영광 (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홍원식 외2 (계엄포고령위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선고
 - 경영해 외4 (안기부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합의30부, 선고
- ▶ 10일 (수)
 - 박미애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이수영 (국보법 간첩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결
 - 조은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결

☞ 12일자 공판 내일자에

주/간/인/권/호/름

(98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 1일 (월)

수원시, 경기도내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특장버스 운영 /〈한겨레〉 북녘동포돕기 캠페인팀과 문규현 신부 제3회 늦봄 통일상 수상/메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 원씩 3천4백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출/기아자동차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청, 제6기 한총련 대의원 1천1백여 명 중 의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백75명을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사법처리 방침/서울시교육청, 학생을 상습체벌하고 각종 선물을 받은 시내 7초등학교 교사가(61·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 2일 (화)

정부,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 연내 서명 예정/정부, 7월부터 만 65살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 665만8천여 명에게 매달 1만5천 원~5만 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백68명이 국가와 김도연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 3일 (수)

재임기간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혐의로 진실·화해위원회 증언대에 선 피터 보타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신의 혐의 전면 부인

◆ 4일 (목)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 발표, 5월말 현재 임금 총액기준 협약임금 상승률은 -2.9%

◆ 5일 (금)

민주노총, 1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철회 결정/경기경찰청, 제5기 경인총련 의장 김철민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서울대총학생회, '백태웅 씨 석방을 위한 문화제' 개최

◆ 6일 (토)

유엔 안보리,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장 경쟁을 막을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7일 (일)

김대중 대통령, 국제인권연맹이 주는 올해의 인권상을 받는 자리에서 "인권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등 약속/노동부, 5월말까지 전국 2천9백60개 업체에서 모두 6천2백35억 원의 체불 임금 발생/보건복지부, '도시노숙자 종합지원대책'안 마련/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 남북어부 김성하·이진택 씨가 고문에 못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는 이근안(60) 전 경감을 상대로 낸 제정신청사건 재판을 12일 오전 11시 열기로 결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10일(수)

제 11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부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최근 버스까지 CCTV(폐쇄회로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운전기사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변역에 위치한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의 좌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감시용 카메라는 이른바 기사들의 '뺑뺑'행위나 불친절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이 카메라에는 음성녹음 장치까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운수회사측은 "기사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고, 기사들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승객도 촬영 가능

그러나 CCTV가 설치된 뒤 기사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 운전기사 이아무개 씨는 "회사측에서 부정행위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내용이나 담배 피우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는다. 운전을 하면서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고위험마저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운전기사 박아무개 씨는 음성녹음장치까지 설치한 것에 대해 "기사들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승객들의 행동과 대화내용까지도 고소란히 감시카메라에 포착되면

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녹화테이프의 관독을 담당하는 감시실계장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만 CCTV가 작동하고 렌즈를 고정시켜 놓아 운전기사를 중심으로 좌우 130° 정도만 촬영된다"면서, "승객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음성녹음과 관련해서도 "최근 나오는 CCTV 장비가 대부분 음성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이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운전사와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만 가려서 듣는다. 또 테이프 교체시 감시실에서 녹화된 내용이 모두 지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악용될 염려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반응은 다르다. 승객 최아무개 씨는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 몰랐던데, "이는 분명 승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회사측을 비판했다.

또한 수단 가지에 이르는 CCTV 기준 가운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은 아직까지 30% 미만에 불과하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경우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침해 방지 기준 없어

더 큰 문제는 현재 CCTV의 촬영범위나 녹화테이프의 보관 등에 관해 아무런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카메라 렌즈의 종류를 바꾸거나 CCTV 대수를 하나만 더 늘려

도 버스 전체를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승객들의 사생활까지 침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예로 청주 중앙교통의 경우, "버스 안에 설치된 CCTV가 버스 뒷좌석까지 촬영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대화내용 전체가 녹음되고 있다"고 노조위원장 김학복 씨는 밝혔다. 더구나 녹화된 테이프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스 내 CCTV 설치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의 황성규 연구위원은 "지난 96년 이후 산하 사업장에서 CCTV 설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CCTV로 인해 기사들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사들의 음성적 관행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단위사업장에서 수단을 받는 대가로 CCTV 설치에 합의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제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CCTV의 확산과 함께 감시카메라의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감시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독료! 하루소식의 힘!

밀린 구독료는...

정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로

용산구청 앞의 어린이 노숙자 "구청 아저씨들 제일 무서워요"

김현욱. 나이 8세, 초등학교 1학년. 옛 거주지는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지금은 용산구청 앞에서 노숙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살던 보금자리를 잃은 현욱이가 노숙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40여 일이 지났다. 지난 4월 23일 골리앗에서 쫓겨난 도원동의 세입자들이 주거대책을 요구하며 용산구청 앞에 자리를 마련한 이후부터였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노숙생활이지만 다행히도 현욱이는 어린이다운 생기와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고 있다. 다만 또래의 아이들보다 세상의 무서움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린 것이 남다른 것일까? 특히 현욱이는 '구청 직원 아저씨들'을 무서워한다.

노숙이 시작된 이래 용산구청 앞에서는 슬하계 주민들과 구청직원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속에서 구청 직원들에게 떠밀리는 동네 어른들을 목격한 현욱이는 자연스럽게 '구청 직원'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왔다.

한때는 동네 어른들이 집회에 나가고 현욱이가 노숙장을 지키는 동안 구청 직원들이 노숙장을 철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20여 일째 단식투쟁중인 이용호(40) 아저씨가 같이 있었지만 두려움 속에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현욱이는 스스로 노숙장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강하다. 9일 용산구청 앞에서 또 한차례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현욱이는 '구청직원'들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못했다. 좋아하는 놀이인 '종이접기'를 하면서도 튼튼이 구청쪽을 바라보고, 또 슬리퍼를 양손에 쥐고는 "구청 아저씨들이 오면 이걸로 때려주겠다"고 품을 잡기도 한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동네 어른들이 행진에 나서자, 구청직원들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껏 힘자랑을 하던 현욱이도 주민들의 대자보들을 사냥해 때어내는 구청직원들을 보자, 겁먹은 고양이처럼 눈이 동그래지고 만다.

지금 현욱이의 가장 큰 소원은 "철거

싸움 빨리 끝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여성 차별, 소외' 시정 촉구

실업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던 여성들이 정부의 여성실업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하 한여노협)는 9일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식 및 여성실업자 구직등록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 참가한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최상미 부장은 "정부가 가장 늦게 취입하고 가장 빨리 해고되는 여성에 대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 먼저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세진컴퓨터랜드 해고노동자 이정화 씨는 "해고자 5백명 가운데 여성이 80%에 이른다. 남성들과 똑같이 일하고 헌신해 왔는데, 잘릴 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0순위가 되었다"며 여성노동자들에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를 꼬집었다. 한국노총 여성국장 정연순 씨도 "남성노동자 1인이 해고되면 부양가족까지 쳐서 2.5인이 실업자로 등록되지만, 여성노동자가 해고되면 단 1명만이 실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여성을 먼저 해고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여노협은 '여성실업자 구직등록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포했다. 한여노협은 이 운동이 여성실업자들의 적극적인 구직등록을 통해 여성실업자 규모와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여성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여성실업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포식을 끝낸 한여노협 소속 회원 1백여 명은 여성실업대책 수립, 성차별적 해고 중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씨에게 전달했다. 건의서를 전달받은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여성실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9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와 주거연합이 '저소득노동자의 실업대책촉구' 집회를 종묘공원에서 가졌다.

저소득노동자 2백5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고용정책을 통한 일자리 마련 △공공근로사업, 생계비 용자 등 현재의 실업대책 전면 재검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생계비 무상지급 △민간중심의 실업대책 활동 적극 지원 △부의 재분배 위한 사회구조개혁 △IMF 제협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정책 시행 △도시민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건설확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 △토지공개념의 백지화 정책 철회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조 공판 안내

- ▶ 12일 (금)
 - 박재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진
 -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진
 - 이근안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함운경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3호, 합의7부, 선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a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11일(목)
제 11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6백여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대출 및 의료비·교육비 보조 등 정부에서 내놓는 주요 실업대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대책이 퇴직금도 나오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상용근로 실직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우 노인들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고용계약이 끝나거나 일거리가 없으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6백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지난 2월 현대자동차에서는 회사측의 재계약거부로 약 4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일거리가 없어 굶고 있거나 일당의 대량사각 및 노동착취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용·임시 노동자들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원의 15-20%에 불과했으며 지난 3월 대구노동자 1백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백56명이 최근 석 달 간 전혀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지역별로 노조를 결성해 집단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결성된 대구의 일용직노조의 경우 고용주들이 40%의 임금삭감을 담합하자 철근·미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8백여명이 대구 건설노조를 설립해 20%의 임금 삭감과 조합원 우선채용의 타협을 끌어냈다. 또 전봇대 설치작업 등에 종사하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 1백20명도 지난 2월 대구 전기원 노조를 결성, 업계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제동을 걸었다.

이밖에도 울산지역의 유일산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해고위협에 반발, 집단 파업을 통해 사장의 의도를 좌절시켰으며, 미포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임 역시 고용안정과 임금삭감에 대응키 위해 노조결성을 준비중이다.

이제 비정규노동자의 노조결성의 기운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 등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최근 당국의 위법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5년간 복역한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대상자인 김용규(76·서울 중랑구) 씨는 지난 5월 9일 전남 보성에 있는 선산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 열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김 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은 중랑경찰서 담당 형사인 이종학 씨였으며, 당시 이 형사는 열쇠업자와 이웃 주민, 경비반장의 입회 아래 보조열쇠를 뜯어내고 김 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종학 형사는 "선생님이 몸이 불편한 줄 알고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씨는 "집을 비운 틈을 타 도청기를 설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중랑경찰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담당경찰관의 교체, 그리고 파손된 보조열쇠(36만원 상당)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이 보안관찰대상자의 집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사실도 밝혀졌다.

보안관찰대상자 최선웅(56) 씨는 지난 5월 17일 관악경찰서 소속 형사 4명으로부터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후 담당경찰에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담당형사로부터 "미안하게 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택시노동자 한광로씨 분신 회사측 직장폐쇄에 항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동자 한 명이 또다시 분신했다.

10일 오전 6시 제주도 국제택시 소속 노동자 한광로(33) 씨는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은뎀에 석유를 뿌린 채 분신, 전신 3도 70%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한 씨는 47일째 이어져 온 직장폐쇄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오던 끝에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택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노동조합이 택시전액월급제의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로 맞서왔다. 택시안전월급제를 둘러싸고 택시노동자가 분신한 것은 97년 10월 광주 송광교동의 최도근 씨 이래 벌써 4명에 달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광로 씨의 분신은 사업주의 월급제 시행 거부와 직장폐쇄, 관할당국의 무책임한 사태방치로 빚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사납금 인상과 근무시간 통제 등 부담노동행위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택시제도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 제일 미흡"

교수 1백여 명 설문조사

김대중 정부의 개혁추진과 관련, '재벌개혁'문제가 제일 미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김 대통령 취임 1백일을 맞아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백2명의 응답자 가운데 56명이 김대중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일로 '재벌개혁' 문제를 일순위로 꼽았다.

또, 국민기본권 신장에 대해 6.2%의 응답자(중복선정)만이 잘했다는 평가

를 내렸고, 고용·실업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은 단 2명(1.1%)에 그쳤다. 반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개혁 중 제일 잘한 일로는 '국제신뢰회복'(38.4%)과 '통일·안보·국방정책'(22.1%)이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교수들은 재벌개혁과 고용·실업대책을 중심과제로 설정하면서도, '개혁정책의 미흡과 잘못된 방향설정' '보수세력의 저항' 등을 이유로 현 정부가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적 민주개혁 촉구

6.10 11주년 기념대회

6.10 민주항쟁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민대회가 10일 종로공원에서 열렸다. 3백여 명의 시민과 학생, 사회단체회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50년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개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 비판의 화살이 모아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창복 상임의장은 "87년을 휩쓸었던 민주화와 통일의 요구는 2백만이 넘는 실업자가 거리를 배회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면적인 민주개혁과 경제주권의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이 열린 종로공원 주변에서도 전경들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계속되었는데, 배은심 유가협 회장(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은 "전경의 최루탄에 자식을 잃었는데, 전경의 포위 속에서 오늘 6.10항쟁 기념식을 치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전경들이 제1의 개혁과제"라며 전경들의 집회방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아직도 끝

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출소장기수 금제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미전향 출소 장기수인 금제성(74) 씨가 말기 간암과 췌장암 판정을 받고 지난 2일부터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다. 주변 사람들은 고려의 금 씨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현재까지 병명을 알리지 않고 있다.

금 씨는 57년 남파간첩으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75년부터 89년까지 보안감호처분으로 다시 수감되는 등 총 27년간 구금생활을 겪었다.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금 씨는 지난 92년에 35명의 출소 장기수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날을 손꼽아 왔지만, 이제 그 희망도 곧 쓰러질 운명이다.

병실: 보라매병원 암병동 5동 3층 13호

행사와 동정

□ 부당한 IMF협약 제협상 촉구, IMF 서울 연락사무소 공개서한 전달 집회
·때: 6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곳: 과천 재정경제원 청사 앞
·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921-0587)

□ 제11차 6·13투쟁정신계승 및 민주쟁쟁권 쟁취를 위한 백만노점 전진대회
·때: 6월 12일(금) 오후 12시
·곳: 장충단 공원
·주최: 전국노점상연합(725-5025)

□ 새로운 천년을 향한 평화대행진 -실직자에게 희망을! 동포에게 나눔을!
·때: 6월 21일(일) 오후 2시30분
·곳: 장충단공원→남산팔각정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742-898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12일(금)

제 11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처리를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니라, 인쇄업무까지 맡도록 되어 있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전국의 료보험노동조합(의보노조)은 "편의나 능률만을 우선해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보노조는 "현재 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우편제도가 해당 징수기관의 고지·징수 데이터를 하청업체인 체성회의 인쇄시스템에 연결해 고지서를 출력해내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소득, 재산, 주소, 개인병력 등) 유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보노조측은 "단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까지 모두 체성회에서 처리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체성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정통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우체국 내부에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이 끝나면 자료를 돌려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느냐"며, "실사 그들이 개인정보를 빼내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99년까지 의료·고용·연금·산재보험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볼 때, 민간단체가 전자우편제도를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은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고, 그렇게 유출된 많은 정보들이 폭력이나 인권 탄압에 이용된 바 있다.

'현상금 3백만원'

민가협, 이근안 수배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 232회 목요일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처벌'을 촉구했다.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은 "고문으로 수많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근안"이라며 "그는 지난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

하면서 각종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에서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수배령이 내린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은 김·경의 직무유기이다. 이를 비호하는 배후세력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장은 "이근안에게 현상금 3백만원을 걸었다"며 "꼭 검거되어 수많은 양심수를 만들어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3년 이근안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함주명 씨의 가족은 이근안의 고문사례를 폭로했다. 누나 함주옥 씨는 "이근안이 45일 동안 주먹이를 철성판이라는 고문도구에 놓고 손과 발을 툭툭 묶은 상태에서 얼굴에 수건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동시에 전기고문까지 가했으며, 가슴을 몽둥이로 수 차례 가격해 제대로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엔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구속자 가족이 나와 "지금까지 주로 안민청에서 한 활동은 시민학교를 설립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학과 성인문맹자를 교육하는 일이었다"며 "지역 노동자와 학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적단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적단체는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국가보안법 역사 50년, 기나긴 역사만큼 숭한 고문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53년부터 98년까지 판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문의: 741-5363)

- 대법원판결문(53-89년 총 131건/A4 크기, 369쪽) 2만7천 원
-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재 총 94건/A4 크기, 377쪽) 2만8천 원
-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A4크기, 193쪽) 1만5천 원
-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A4크기, 135쪽) 1만1천 원
-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A4크기, 106쪽) 9천 원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상하며 '인권 대통령'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내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들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2월 25일 이후 구속자는 민가협 집계에 의한 1백49명을 포함, 6월 5일 이후 구속된 김철민(경기도 총학생회장) 씨와 전국학생연대 소속 회원 8명 등 최소 1백58명에 이른다.

이를 적용된 법규별로 살펴보면, 구속자 1백58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87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 국제사회주의자그룹(5/9), 북부노동자회(5/13), 인제대 자주대오(5/29),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6/3), 전국학생연대(6/9) 등 이른바 '조직사건' 구속자들과 한총련 대학생이 대다수며,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이상관(대동출판사 사장) 씨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유필수 씨, PC 통신에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하영준 씨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두가 국가보안법 제7조(교무·찬양, 이적단체 구성 또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밑에 걸렸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또한 올해 한총련 출범식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보법이 병과된 구속자를 제외하고 단순 집시법(폭력 포함)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원동 강제철거 사태와 관련, 철거민 구속자가 12명을 차지했으며, 대학생 구속자가 90명에 달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아래 학생운동에 대한 탄

압이 여전히 극심했음을 드러내준다.

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대전성모병원

악질적인 노조탄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대전 성모병원에서 또다시 여성 해고노동자가 구사대에게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성모병원 해고노동자 한신희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경, 출근 투쟁을 위해 혼자서 병원으로 들어가려던 중 주차장 내에서 안내경비직을 맡고 있는 구사대 김복중 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배를 구둑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해 노동법 총과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노조사무장과 함께 해고당한 이래,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출근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씨를 폭행한 사람으로 지목

된 김복중 씨는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한 씨를 주차장내 사무실에서 끌어내기만 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내가 딸같은 사람을 패겠냐"며 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위원장 이대연)은 "김 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폭행사실은 부인하지 않고서 단지 사과요청을 거절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부터 갑자기 목격자가 없다는 걸 믿고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폭행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김 씨는 구사대 수십 명과 함께 노조사무실을 찾아와 갖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 사실을 감추려 들었다"며 김 씨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해고자라고 해서 더구나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일은 카톨릭 사업장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씨를 상대로 폭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성모병원측은 지난해 노동법 총과업을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해고와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 외에도 노조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아왔다. 이와 관련, 병원측은 지난 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악질 노조탄압사업장으로 분류된 바 있다.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적극적으로 활용(?)해 버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13일(토)
제 11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 안기부 항의방문

과거 안기부(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12일 내국동 안기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족) 소속 회원들은 이날 낮 12시 안기부를 방문해, "지난 4월 24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가해자인 안기부로부터 어떠한 반성의 목소리도, 진상규명의 의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의방문을 통해 "안기부는 과거 정권들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의 산 증거"라며,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살해하고, 간첩사건과 조직사건을 조작해 양심수를 양산해 왔던 안기부가 진정으로 개혁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안기부가 관련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박정희 정권이래 정보기관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희생자에는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동백림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서울대 교수 최종길 씨 △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재야지도자 장준하 씨 △89년 안기부 직원 도연주 씨 등에 의해 거문도까지 유인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 △91년 노조활동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의문의 부상을 당해 안양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병원마당에서 사체로 발견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제징집 피해자 찾습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는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제징집 당했던 이들을 찾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의문사 당했고, 많은 이들이 녹화사업과 고문 피해자가 되었던 강제징집, 이제는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문의) 02-742-3180
담당) 김학철 기획국장

의방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지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 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수 판사는 "김동식의 진술이 오라기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함 씨에게 자신의 신분(간첩)을 밝혔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고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자 흥분분함을 표시한 함운경 씨는 "아직도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김동식의 허황된 진술만 갖고 자의적으로 혐의를 적용한 공안기관이 개탄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5년 김동식 사건과 관련,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박총렬, 김태년 씨가 이미 간첩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불고지 혐의로 구속됐던 함운경 씨 역시 이날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당시 '당국의 수사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억지'라고 주장하던 재야·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함 씨와 같은 불고지 혐의로 기소돼 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던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도 현재 재심청구를 검토 중이다.

기혼여성 구직자 증가

해고·남편 실직 등 이증고

정리해고 바람 속에 일터에서 해고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기혼여성들 가운데, 자신의 해고와 남편의 실직이 겹치면서 이증고를 겪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혼여성들의 구직신청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1월부터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유옥순)는 "IMF 이후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3백70여명이 구직상담을 해 왔으며, 그 숫자는 매달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5월 들어 구직상담을 해온 1백7명 가운데 기혼여성은 72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72명의 구직사유는 본인의 실직(41명)이 가장 많았고 남편의 임금삭감(19명)과 실직(12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들로 나타났다.

구직에 나선 기혼여성들은 "회사의 휴·폐업 및 부도로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직했기 때문에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남편이 실직하고 갑자기 가출해 버려 이제는 내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걱정이 태산같다." "남편과 사별해 고등학교에 다니는 2명의 아이들과 가계를 꾸려야 하는데 최근 일자리가 전혀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는 등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구직자 가운데 40-49세에 이르는 기혼여성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재취업은 물론 해고당해도 실업급여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집단상담을 받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찾아가 구직등록을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안양지역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 80여 명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구속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민청이 주민사업을 헌신적으로 전개해온 건전한 지역청년단체였다"며 안민청에 대한 무리한 이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경찰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압박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공안정국의 조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청은 지난 7년간 △한글교실을 통한 문맹자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 △교통문제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위원회 활동 등을 벌여왔으나, 경찰은 이미 오래 전 유명무실해진 구 안민청의 규약 중 '목적' 부분과 조직 노선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상 4천명 집회

12일 낮 1시 장충단공원에는 노점상 4천여 명이 집결해 실업대책과 도시민민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는 제11차 '백만노점 전진대회'를 가졌다.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정부가 폭력단속과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평화적인 문제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가 지난 3일 발표한 '노점, 야간포장마차, 차량이용 노점행위 등에 대한 강력단속방침'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노련은 "실지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해보자고 시작하는 것이 노점상인데 최소한 복지정책이나 생계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서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합법적 노점활동 보장과 대책없는 정리해고 중지를 요구했다.

<국제인권소식> 멕시코

정부군, 사빠띠스타 침공

멕시코 군과 경찰이 지난 10일 멕시코 남동부의 치아빠스주 자치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세계각국 민중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지구적민중행동'(PGA)은 "10일 오전 수백명의 군인과 경찰 등이 사빠띠스타 농민군의 지지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치아빠스의 자치공동체를 침공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군경은 이들 거주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고 주민들을 학살했으며, 집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멕시코 군대는 다른 지역으로도 침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 사빠띠스타와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PGA는 "연방정부가 침공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빠띠스타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또 다른 공격의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며, 특히 치아빠스 침공일이 71년 대학생들을 학살한 6월 10일에 맞춰 이뤄진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PGA는 멕시코 사태와 관련,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해야만 이 범죄적인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멕시코 대사관 점거투쟁이나 항의서한 발송, 시위를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모든 멕시코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해방, 정의'라는 기치 아래 M16소총과 목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빠띠스타는 94년 1월 정부군을 상대로 봉기를 일으킨 이래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저항하는 전세계 민중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16일(화)

제 11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지난해 '복제양 돌리'의 탄생과 더불어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이라는 주제가 인간사회의 비상한 관심거리로 등장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추구되어야 하는 것인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에 일반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을 까?"와 같은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를 계기로 서서히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5일 워크숍을 통해, '합의회의' 개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합의회의'란 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에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한 방법으로, "무작위로 선별된 보통사람들이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전문가의 답을 청취한 뒤, 내부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영희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일상적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지만, 과학기술 '진문가'를 제외한 '보통사람들'은 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회의란 전문가의 독점성과 일방적 계몽에 의한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거부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전(前)단계의 토론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같은 '합의회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활발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의 경우 △농업과 산업에서의 유전공학의 적용(1987) △인간 유전자에 대한 과학지식의 이용(1989) △대기오염(1990) △동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 실험(1992) △전자주민카드(1993) △유전자치료(1995) 등이 합의회의의 주요 주제로 논의된 바 있다.

이영희 교수는 "합의회의는 일방적 계몽의 성격을 띠는 공청회와 달리 시민들이 조직의 주체가 되어 전문가들을 초청해 질의를 벌이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과 전문가, 정치인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합의회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합의회의'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전문지 분야에 대해 얼마나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정책대안이 얼마나 강제력을 갖겠는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날 워크숍엔 올해 3월 일본에서 '유전자치료에 관한 합의회의'를 치렀던 와카마츠키 유키오 교수(동경전기대

학교)가 참석, 일본의 경험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유키오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위한 일반인 포럼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그러한 대중 참여 자체가 과연 가능한가"가 커다란 문제라면서도, "이러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질적인 합의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상의 교수(서울대 의대)는 "생명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안전성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의 경우, 암 등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유전정보의 오남용과 유전자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위험요소로 꼽히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인간 게놈에 대한 어떠한 연구나 응용도 특히 생물학, 유전학, 의학의 분야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 기본적 자유, 인간의 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정신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17일(수)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 5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령 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 18일(목) 강민영(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민정(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령
- ▶ 19일(금) 신광수 외1(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령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외국인노동자들은 지금 이 땅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다.

지난 4월 30일로 외국인노동자의 자진출국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들은 벌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현재 남아있는 10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산재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중 상당수가 자진출국을 하려 했지만 기한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거나 밀린 월급을 받으려다 기한을 놓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회장 박천웅 목사)는 15일 12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벌금제도 철폐와 자율귀환보장촉구 대회'를 가졌다.

박천웅 목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벌금제도 때문에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며 "받아야 할 월급보다 한 달에 10만원 벌금인 벌금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임금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천웅 목사는 "이중수탈의 원인인 벌금제도를 철폐하여 자진출국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하려던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이 대기 중이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잡혀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윤주 외노협 사무국장은 "서울시경과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어 '이 집회에 외국인노동자가 참여하면 전원 연행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이들에 대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내쫓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연행된 10명중 몇 명은 단지 서울역을 통과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정부의 마구잡이 연행을 비난했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들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에바다농아원생 후원회원 모집

'에바다농아원 비리재단 퇴진과 학교정상화'를 위해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헤어리집'이 장애인 인권보장의 희망을 함께 지켜나갈 후원자 1백만 명을 모집한다.

에바다 사태가 시작된 지난 96년 11월 27일 이래, 헤어리집은 15일 현재 총 5백66일간의 기나긴 투쟁을 함께 해 온 30여 명의 청각장애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보급자리로 자리해 왔다.

후원회원은 희망회원(월 1천원), 인권회원(월 3천원), 지킴이회원(월 5천원), 승리회원(월 1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19-288-0078, 015-8344-3074

주/간/인/권/호/름

(98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 8일(월)

이종찬 안기부장, "변호인 집결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찬양고무죄 적용도 최소화할 것" 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 씨, 사상전향제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87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당시 경장) 씨등 3명이 규정을 어기고 경찰청 산하 단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 9일(화)

교육부,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중/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특별정문회에서 남아공 백인 정부가 '흑인 사냥용'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기간 중 1백여 명 이상의 중국계 여성과 소녀들이 조직적 폭력과 집단 강간을 당해/영국(BBC) 보도, 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티모르에 대해 특별지위를 부여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혀

◆ 10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항의해 신문제작 거부운동을 벌인 7명의 기자들과 기자회견 전직 간부들이 각각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선고/이상현(경희대 1년) 씨, 평화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학생들을 폭력진압한 경기지방경찰청장등 수원지검에 고발/정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키로/터성여대, 한상권 전 교수 복직 결정

◆ 11일(목)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환 부장판사), 서울 서서지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14분 전에서 9분전으로 조정

◆ 12일(금)

전국의 현직교사 2천4명, 전교조 활동 등을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 3백52명의 복직요구 탄원서를 청와대와 교육부, 국민회의, 노사정위원회 등 4곳에 제출/서울지법 형사합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 불고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함운경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13일(토)

김대중 대통령,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이 끝난 뒤 "8·15때 양심수 석방문제 다루겠다"고 밝혀

◆ 14일(일)

한국통신노조,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열고 한국통신 민영화 등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구조조정방침 철회 촉구

인권 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4일 새벽 열린 프랑스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보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이 멕시코를 눌러주기를 바랐다. 2대1 정도의 스코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점수 차로 이겨주길 바랐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분명 한국보다 멕시코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2대1 정도로 이길 것이라고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진정 한국이 이번만은 멕시코를 이겨주길 바랐다.

그러나, 한편으론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세계가 월드컵 축구에 열광해 있는 동안 인류의 중요한 문제들이 뉴스에서 사라지고, 특히 독재국가의 정부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10일 남부 치아파스 3개 공동체의 사빠피스파 민족해방군(EZLN)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여 8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고문했다. 이런 폭압적 작전에 대해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멕시코 정부를 비난했다.

멕시코의 사빠피스파는 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에 맞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 후 멕시코 정부의 몇 차례의 진압 작전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그들은 치아파스 정글을 무대로 자신들의 토지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념과 행동들을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알리나가고 있어 21세기형 혁명의 한 모델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개발을 거부하고, 자신과 그들의 역사, 문화가 관광객들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데 적극 반대한다. 그들은 정글로 세계 수천 명의 활동가들을 결집시켰고, 멕시코 내 민주적 활동가들을 소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멕시코 대표팀이 한국을 3대1로 격파하자 멕시코의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멕시코를 연호하며 한 바탕 '광란의 축제'의 축제를 벌였다고

한다. 멕시코 대표팀의 승리는 결국 정부의 사빠피스파 탄압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월드컵에 가려지는 인권유린

월드컵이 진행되는 32일간 하루 평균 10여 명 이상이 시정할 것이고, 총 3백70여 명이 월드컵에 정신을 팔 것이라는 예측은 최소한 이 기간동안 인류의 지대한 관심사들은 월드컵의 열풍에 가려지고도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적국적으로 각 나라의 정부와 거대기업들은 자신들에 비판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월드컵을 활용하지 않겠는가. 둥근 축구공 하나에 인류가

누가 스타로 부각되든, 호나우도가 몇 골을 넣든 세계 민중들은 월드컵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긴 거대기업들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넛을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16강에 제도전하는 한국의 경우 멕시코와 첫 대결을 벌인 14일 새벽 시청률이 79%로 스포츠사상 최고였다고 하니, 가히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그 새벽 불을 밝히고, 잠들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고 그런 놀라운 시청률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일본 엔화의 폭락에 의한 제2 환란의 위기에 대한 경고도 먹히지 않는다. 월드컵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 더욱 월드컵에 연연하는지 모르지만, 월드컵 16강이 지금의 우리 문재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제 난 진심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서 탈락하길 바란다.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16강 신화를 이뤘다고 얼마나 미쳐 돌아갈 것이며, 그 호들갑 속에서 오늘도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선 많은 이들의 갈등이 더 오랫동안 외면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학생과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으로 1백60명 이상 연행했다. 이는 새 정부 초기에서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공안세력은 휴지기도 없이 경제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틈타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고히 뿌리내리려는 탄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집회 때마다 접하는 불법 검문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도원동 철거민들의 농성도, 한달 넘게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삼미 특수강 노동자들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도, IMF 자살자들의 문제도 더 이상 축구공 하나에 가려져서는 안된다.

한국 16강 탈락을 기원한다.

수천만, 수억 달러를 몸값으로 받으며 뛰는 슈퍼스타들의 발재간과 인류를 지배하는 거대기업들의 돈잔치인 월드컵은 인류의 희망을 만들 수 없다. 월드컵에서 누가 스타로 부각되든, 호나우도가 몇 골을 넣든지 브라질을 누르고 누가 피파컵을 거머쥐든 세계 민중들은 월드컵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긴 거대기업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오히려 월드컵을 통해 그들의 입지만이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멕시코의 사빠피스파와 나이지리아의 오고니족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만 더욱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투쟁과 호소가 비극에 빠진 인류의 몇 안 될 지도 모르는 희망일 텐데도 말이다.

난 오늘 한국이 16강에서 탈락하고, 멕시코와 나이지리아 같은 인권유린 국가가 철저히 패배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17일(수)

제 11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단 주춤하는 듯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에 의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99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해 카드구입비 3백억 원 등 3백22억4천1백만 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에 신청했으며,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포항공대에 의뢰해 놓았다. 이 두 곳의 연구결과는 오는 6월 말경 제출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타당하다는 연구결론이 나올 경우,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길 장관이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물밑작업도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김 장관의 태도는 취임전과 비교해 180도 바뀐 것으로, 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부과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려는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3개 증명을 IC

칩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IMF 시대에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지난 9일 김정길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으며,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와 주민등록법의 재개정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바 있다.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 예정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지난 2월 정부가 99년 중에 국립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병원 내 결핵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결핵환자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으며, 오늘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 배상훈 위원장은 "현 입원환자(260여명)의 70% 이상이 전남 인근 도시민들인데, 현재 한 달에 1만 원정도인 입원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40%나 된다"며, "만약 병원이 민영화되면 다른 시설 병원의 입원비에 비해 볼 때 한달에 약 40-50만원의 입원비를 지불해야하고, 이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배 위원장은 또 "결핵환자는 격리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 결핵병동이나 결핵병실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간병원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핵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97년 보건복지부서를 통해 "98년부터 국립결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한 IMF 시대를 맞아 부랑자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결핵환자의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 정부가 예방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방침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7일부터 환자들이 서울상경투쟁을 기획하자 목포 결핵병원측에서는 "상경투쟁에 가담하는 환자들은 모두 강제퇴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비상대책위측은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결핵으로 4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결핵은 전염병으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질환에 속하는 병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43만명(1백명당 1명꼴)의 결핵환자가 있고 유병률이 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인근의 태국, 중국 등과 일부 동남아 저개발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다.

영양제 맞던 대학생 급사

인천 성모자애병원 의료과실사 논란

의료과실사인가, 급사인가. 인천 성모자애병원에서 영양제 링거주사를 맞던 20대 환자가 사망해 유족들과 병원간에 의료과실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체기가 있어 속이 거북하다며 병원을 찾은 박석희(금요공대 4학년) 씨가 포도당 링거주사를 맞던 중 쇼크상태에 빠져 두 시간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던 박 씨가 이처럼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사망원인을 둘러싸고 유족들과 병원간에는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석희가 주사바늘을 꽂은 지 채 2분도 안돼 '엄마'하며, 함께 있던 어머니를 부르다가 몸이 축 늘어지고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다. 주사를 맞기 전까지는 멀쩡한 상태였고 엑스선(X-RAY) 촬영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것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무엇이나"며 병원측에 분노를 표시했다.

또한 유족들은 "석희를 진료한 인턴(1년차)이 혈액채취도 제대로 하지 못해 5차례나 실패해 끝내 간호사가 대신 해줄 정도로 서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병원진료과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같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병원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다리로 걸어다닐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라면 어찌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왔겠느냐. 또 아픈 사람의 동맥은 건강한 사람보다 잡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경우 의사도 혈액채취에 실수할 수가 있다"며 유족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자신도 너무 시달려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는 그는 "유가족들이 환자 사망 당일 워무과에 와서 집기를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병원측은 부검결과가 나온 후 그 결과에 따라 법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책임자의 사죄를 요구하며 병원

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유족들은 병원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30여명의 사람들에게 밀려 병원입구에서 대치중이다.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2년 가까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온 팽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보건복지부의 '에바다복지회 운영 정상화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노동의 금지와 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이래, 에바다 사태는 오늘로 5백67일째를 맞았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은 에바다 사태와 관련, 지난 2월 5일부터 20일간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행되고, 지난 5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약속한 이래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

지심의관실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요구한 주요 조치를 반영해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선·인척을 배제한 이사진 개편 △일정 기간내 이사진 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전원 관선이사 선임 △농아원 원장등 자격 기준 미달자 해임 △보호작업장내 설치된 무인가 신학원 폐쇄 △농성시 폭력행위를 자행해 온 원생 아닌 자의 원내 숙식 금지 △법인 이사진 개편 때까지 보호작업장 일시 폐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바다사태 공동대책위'측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이사를 조정하는 선에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계획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일 뿐"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현 이사진의 전원 교체와 시설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에바다 사태는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에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법적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줄곧 재단측과의 연루설이 제기되어 온 김선기 팽택시장이 6.4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상태에서 팽택시가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을 책임있는 자세로 실행에 옮길 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동티모르 인권유린 여진

수하르토 물러나도 무력진압 계속돼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집회'가 인도네시아의 군부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수하르토 하야 이후 동티모르 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군인들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에 참가했던 동티모르 국제지원센터 마리아 씨는 "수하르토의 아들이 조직한 사군사조직에 의해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인과 이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와 살인, 강간,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군사조직의 구성원과 그들의 활동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수하르토가 물러난 이후에도 동티모르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18일(목)

제 11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결핵환자, 명동성당 농성돌입

여섯 명의 결핵환자들이 작은 봉고차에 간단한 물품만을 챙긴 채 목포를 떠나 17일 서울로 올라왔다.

정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본격적인 항의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과로가 결핵에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5시간 정도를 소요해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상훈) 소속의 이 환자들은 도착 즉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차례로 집회를 가졌고 이후 명동성당에 농성장을 마련했다.

결핵에 걸린 지 8년이 됐고 8개월째 목포결핵병원에 입원중인 임완(27)씨. 그는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결핵이 재발하면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다”며 “8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제적인 수입원이 아무 것도 없어 지금은 라면 하나도 마음 편히 사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얼마 전부터 부인이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 어려움을 조금 덜었지만, 현재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임 씨에 따르면, 입원환자들 대부분이 단순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나 특별한 기술없이 목포인근에서 배를 타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는 결핵이 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해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걸리는 병이기 때문이다.

임 씨는 “따라서 환자들은 자기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당장 생계유지

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돈이 아닌, 한 달에 1만원하는 입원비도 못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임 씨는 또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이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면 퇴원해 다시 일용직 건설현장이나 배를 타는 일 등,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게 된다”며 “대부분이 피로가 누적되어,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병원에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자기자신도 “아들 분유값이라도 벌기 위해 퇴원하려 했었다”며 입원환자들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박 아무개 씨는 입원 전까지 배를 타던 사람이었다. 배를 타게 되면 보통 한두 달을 바다 위에서 보내기 때문

에, 그는 보건소에서 몇 달치 약을 타다 먹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도한 육체적 피로로 결국 결핵이 재발돼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박 씨가 입원한 뒤 생계가 막막해지자, 부인이 떠나버렸고 부모님마저 연락을 거의 끊고 지내는 등 가족관계마저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17일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인 우리로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철회하려면 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서울대, 독립영화 상영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금 자그마한 영화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시대의 경계에 서서, 탐색’이라는 제목 아래 17-18 양일간 진행하는 독립영화 상영 행사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작품은 모두 네 작품. 박노해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 [세 발 까마귀]와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기록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안기부의 인권유린 실상을 보여주는 [22일간의 고백]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1년여의 투쟁을 담은 [우리들의 사계] 등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최근 열렸던 인도포럼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작자들이 ‘사전심의’를 거부하면서 출품을 철회했기 때문이었다.

행사를 준비한 김현주(총학생회 문화국)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7일 [세 발 까마귀]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이어, 18일에는 오후 3시부터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22일간의 고백]과 [우리들의 사계]가 잇따라 상영된다. 영화상영과 더불어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됐다.

(주) 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모나미(주) 회사 정문 앞에서는 40일이 넘는 철야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농성의 주인공들은 지난 4월 10일 해고당한 고재천 씨의 3명이다.

고 씨들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 노조의 민주적 강화를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요구하던 중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회사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불법유인물 배포, 사내질서 교란, 이력서 허위 기재 등이었다.

이들은 “IMF 이후 오히려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IMF를 빌미로 법인 이전이나 부서 조정, 외주 처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현 노조임원진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독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임시총회를 요구한 당시의 사정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들이 총회개최를 요구하며 배포한 유인물을 주로 문제 삼아,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불과 10일 전에 전격적으로 해고조치를 취했다. 노조와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 그리고 유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이 주요한 해고 사유였다. 사측은 “이들이 배포한 불법유인물로 인해 작업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했고 종업원들이 선동에 휩쓸릴 소지가 있었다. 더구나 회사와 노조가 야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회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씨들은 “유인물의 제작과 배포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비판했다. 또한 “회사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5분 전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면서 현 노조임원진의 유지를 위해 회유와 협박을 실시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고 씨들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배포된 유인물 내용이 노사간의 신뢰를 저해했고 △노동조합 명목이 아닌 개별적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 씨들은 “지노위의 결정은 해고자들이 제시한 증거물과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실직자 돕기 캠페인

민노총이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배만인 서명운동’과 ‘실업급여 신청서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IMF 이후 실직한 건설 노동자들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실직자들을 위한 것이다.

특히 건설지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자 통계에서조차 누락되어 있어 실업대책이나 생존권 보장 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캠페인을 주최한 민주노총의 이성도 조직강화위원장은 “서명운동과 실업급여신청에 대한 호응도는 높은 편이며 작성한 신청서는 집단적으로 관청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지 노동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중이며, 이번 캠페인은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앞으로 매주 한차례의 집회와 범국민운동차원의 거리 대행진운동 등 다각도의 캠페인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성폭력 상담

컴퓨터통신이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익명성을 무기로 한 통신공간내의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온라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통신공간 내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유니텔과 천리안, 나무누리(26일 개설예정)에 ‘온라인성폭력 상담실’을 개설했다. 상담실은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가해자와 통신회사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각각의 통신망으로 들어가 Go stoprape로 접속하면 된다.

행사와 동정

- 시민사회단체 시국토론회
 - 때: 6월 18일(목) 오후 3시-6시 ·곳: 참여연대 강당(723-4250)
-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 방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때: 6월 18일(목) 오후 6시30분 ·곳: 참여연대 강당
- 「언론을 바로세우는 사람들」 출판기념 언론개혁 대토론회
 - 때: 6월 20일(토) 오후 2-6시 ·곳: 성공회대성당 강당
 - 주최: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문의: 011-230-0614 송진복)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실 개소식 및 현관식
 - 때: 6월 20일(토) 오후 2시 ·곳: 공공연맹 사무실(742-0010)
- 한국청년연맹 발기인대회
 - 때: 6월 21일(일) 오후 2시 ·곳: 성공관 유림회관
- 평화대행진 ‘실직자에게 희망을! 동포에게 나눔을!’
 - 때: 6월 21일(일) 오후 2시30분-5시 ·곳: 장충단 공원-남산 팔각정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19일(금)
제 11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IMF 시대를 빌미로 병원마다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병원의 경영상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일부 사업장에서는 폭력 구사대가 동원될 만큼 그 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대전성모병원에서는 40여 명의 구사대가 노조사무실에 난입, 노조간부 5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청구성심병원 역시 용역강제를 고용해 노조원들의 집단폭행했다(관련기사 2면).

그밖에도 전국의 각 병원 사업장마다 경영진과 노조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3, 제4의 구사대 폭력도 우려되고 있다.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은 "많은 병원들이 운영상 수익이 충분함에도 사회분위기에 억지 편승해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나 근로조건 저하, 노조탄압 등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사업장의 경우 악질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노련이 밝힌 부당노동행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훈병원: <경영상태> 보훈복지공단의 예산지원. 저렴한 의료수가로 내원환자 증가 추세 <불법행위> 영양과 조합원 52명 일방적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근로복지 축소

△방직기병원: <경영상태> 입원환자 270명, 외래환자 550명. 소아과의 14개과 운영. 한방의료 설립, 최신 고가 장비 구비. 경영상태 양호 <불법행위> 임금지연 및 상여금 일부 체불, 임금 10% 삭감, 전 노조집행부 23명 정리해고 후 13명 신규채용, 강제사표종용,

복지해고자 11명 임금체불
△한양대학교 의료원: <경영상태> 양호한 것으로 판단 <불법행위> 단협위반, 연월차 휴가 강제사용, 일방적 임금 10% 삭감, 수당미지급, 노조활동 방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배치전환, 임금 및 단체교섭 불응

△영천 성베드로병원: <경영상태> 95년 103억, 96년 110억, 97년 120억 매출, 국회의원선거·제원예술학교공사·불량장건설로 재정악화, 98년 1월 회의신청 기각, 2월 폐업 신고 <불법행위> 245명 임금체불, 201명 상여금 체불, 221명 퇴직금 체불, 3년치 연차 수당과 2년치 연말정산금 체불, 197명 해고고수당 체불, 국민연금·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월형 체납, 일괄

사직서 강요 및 일방적 폐업신고, 노조탄압 위해 단전·단수시킴, 96년 국회의원 선거시 직원들 거주지 강제이전 및 선거운동 강요

△청구 성심병원: <경영상태> 부원장이 직접 양호 발언 <불법행위> 상여금체불, 일방적 100여명 정리해고, 조합원탈퇴강요, 사내연인 5명 권고사직 및 3명 부당해고, 노조탄압 및 활동 방해, 집단폭행사주, 노조 동의없이 조합원 주말교육 실시

이밖에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서울기독교병원, 이화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천 세종병원, 포항 성모병원, 서울 강남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부당행위가 보고되었다. 병원노련은 이러한 부당행위와 관련, 지난 2월부터 명동성당에서 한양대병원, 청구 성심병원, 대전 성모병원 등 8개 약대 병원의 사업주에 대한 전원 구속처벌과 부당노동근절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구사대 동원한 가톨릭 사업장 대전성모병원, 노조간부 집단 구타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악질적인 노조탄압으로 알려져 있는 가톨릭대학대전성모병원이 또다시 구사대를 동원, 노조간부에 대한 집단 폭행을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경, 대전성모병원 노조사무실에 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단체교섭국장 이대연(전 대전성모병원 노조 위원장) 씨와 신임 노조지부장 최은희 씨 등 5명이 구사대 40명에 의해 복도로 끌려나와 집단적인 폭행을 당한 후, 병원 밖으로 끌려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대연 씨는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자마자 바로 구사대가 들어닥쳤다. 또 누가 때리는지 알 수 없도록 지하 노조사무실 복도 불을 꺼놓을 정도로 매우 조직적인 집단폭행이 자행되었다"며, 물리력에 의존해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병원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97년 노동법 총과업을 이유로 해고당한 이후 줄곧 구사대로부터 병원출입을 제지당하고 폭행을 당해왔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인 폭행이 자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구사대는 또한 당시 취재중에 있던 매일노동뉴스의 김문창 기자에 대해서도 폭언을 퍼붓고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기자는 자신에게 가해진 위협보다도 구사대의 매우 조직적인 물리력 행사에 더욱 놀랐으며, 병원측의 심각한 노조탄압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방영미 조직부장은 "이번 폭력사태는 지난 97년 이후 계속되어 온 노조탄압의 연장"이라며, "여성조합원이 많은 병원노조에 대해 남성관리자들을 구사대로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탄압책의 하나지만, 가톨릭사업장에서 이러한 원시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측은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 단지 위험한 인물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

과 노무담당 김동기 씨는 "이대연 씨 등이 산별노조간부라고는 해도 이미 우리 병원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출입할 자격이 없다. 또한 해고자가 드나들면 사업장의 평화가 깨질 뿐만 아니라 병원시설보호차원에서 이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현 경찰청 보안과장) 등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최성우 검사는 18일 고소인 이철용 씨를 출석시켜 조사를 벌였다. 남국현 씨 등은 지난해 6월 1일 전경들이 이철용 씨를 집단폭행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사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이철용 씨는 "지난해 6월 11일 군 수사기관에서 (탐영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도중, 6월 7일자로 작성된 성동경찰서의 사건보고서를 봤으며, 그 보고서는 '이철용 씨는 미끄러져 다치고도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억지주장을 함으로써 사회혼란을 노리는 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6월 27일경엔 기동대 간부들이 찾아와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이철용 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진 김정웅(당시 전경) 씨가 지난 5월 27일 불구속기소됐으나, 남국현 씨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이철용 씨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유지용 전경이 사망하고 이석 씨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속에 경찰 폭력이 사실대로 밝혀지는 것을 우려한 성동경찰서측이 조직적으로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고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는 밀린 임금과 산재보상처리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원하는 노동자가 상당수 있으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못해 귀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지가 알려지자 네팔노동조합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은 17일 청와대로 서한을 보내 벌금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네팔노동조합연맹은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건설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왔는데도, 한국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기는 커녕 그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아직도 그들의 땀과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찰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20일(토)

제 11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지난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6차 ILO(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가 막을 내렸다. 전세계 174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ILO는 세계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권리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의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선언은 또한 회원국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이 선언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의 상호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어서, 시장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O는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추진했다. ILO는 이미 지난 5월 25일 아동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2억5천만 명에 달하는 5-14세 사이의 아동이 광산이나 채석장, 카페트 공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장에서 노예에 가까울 정도로 착취받고 있으며, 매춘과 포르노에 동원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제안하고 1차적인 검토를 끝마쳤다. 이 조약에는 아동노동력 착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하는 방안을 비롯해 예방조치, 피해 아동의 사회복지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약은 1년간의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연례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2면으로 이어짐

유가족 고행 계속돼

기무사 항의방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고된 순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국방부를 찾아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시위를 벌였던 유가족들은 12일 안기부 방문에 이어, 19일 낮

12시에 국군기무사(옛 보안사)를 방문해,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날 유가족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기무사에 의해 강제징집됐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들의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면서 기무사령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8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 탄압기관으로 꼽혀온 기무사는 84년까지 이른바 '녹화사업'이란 이름아래 대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활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강제징집된 사람 가운데 의문사한 사람은 정성희(당시 연세대생) 씨 등 모두 8명이며, 84년 이후에도 김용권, 남현진, 노철승, 박성은, 송중호, 최우혁 씨 등이 군입대후 의문사를 당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30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1차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오는 8월말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그리고 김 대통령에게 엽서 쓰기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안기부, 대공본실, 기무사 등 과거 의문사와 관련된 기관들을 찾아가 진상규명 촉구활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불심검문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자들의 항의집회-

· 때 : 6월 24일(수) 오전 11시

· 곳 : 경찰청 정문 앞(서대문로터리 부근)

· 집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3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 이영태)

법적 대응을 함께 하실 분 찾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접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 불심검문에 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이영태)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명동성당 농성 3일째. 환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갑고 습한 바다 위의 생활을 자처하고 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에 대해 1백22일간이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결핵환자들, 이들이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난치성 결핵환자들 대다수는 직업을 갖기 힘들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사실상 민간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로부터 치료와 재활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생존을 포기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현재 국립목포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비는 물론 거의 모든 생필품을 제공하고, 행려환자의 경우 사망환자장제비까지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결핵관리는 그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결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인정할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결핵병원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배상훈(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낙후된 결핵관리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재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립 목포

결핵병원 같은 특수목적병원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결핵환자들의 주장에 더불어 많은 의료보건의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등 사회단체들은 "단순히 병원이 아닌 복지기관의 성격이 강한 현 체제에서, 민영화는 이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혜택이 매우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보건의료청년회(대표 김창보)의 이재현 조직국장은 "결핵을 줄이는 데는 사회복지제도 확립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적 이유로 방치되는 결핵환자에 대해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인권운동가 정치적 실종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옛 자이르)의 인권운동가인 에피엔 음바야 씨가 정치적 실종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바야 씨는 지난 5월 25일 공화국 안전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소재는 물론,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음바야 씨 외에도 기테테 동력장관 등 개혁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다수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97년 6월부터 콩고 재건부장관을 지내온 음바야 씨는 유네스코 인권문제 자문위원으로서, 특히 95년 한국을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15주년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음바야 씨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대 이종수 교수(신문방송학과)와 임동욱 교수는 19일 반포동 콩고대사관(구반포 아파트 20동 108호)을 방문해, 카빌라 콩고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더불어 이 교수 등은 음바야 씨 실종문제에 관한 콩고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콩고민주공화국(콩고공화국과는 별개의 국가)은 지난해까지 '자이르'라는 국명으로 불리었으나, 로랑 카빌라 현 대통령이 32년간 철권통치를 해왔던 모부투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국명을 고쳤다. 카빌라 대통령은 65년 모부투 집권 이래 줄곧 반정부 무장투쟁을 벌여온 직업 게릴라 출신이나, 집권한 뒤 야당 당수를 구금하는 등 '인권탄압'을 일삼아 '제2의 모부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왔다.

최악의 오심

영국에서는 최근 한 무기수의 억울한 옥살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화제의 주인공인 패드릭 니콜스(70) 씨는 1975년 한 여인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3년간의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최근 아일랜드의 병리학자인 존 그레이 교수에 의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니콜스 씨 사건은 영국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오심'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건 재심위원회 소속의 그레이 교수는 당시 니콜스 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진 그라디스 히스 씨의 사인은 계단에서의 낙상에 의한 안면상처와 그에 따른 급작스런 심장마비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당시 결정적 증인을 했던 목격자가 그레이 교수의 주장이 제기되자마자 종적을 감춘 것도 그레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의심되고 있다.

법원의 오심으로 인해 살인자의 누명을 쓴 니콜스 씨. 그는 영국에 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면, 저승에서 명예회복을 지켜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 <ILO> 1면에서 이어짐

한편, 이번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여한 안영수 노동부차관은 지난 10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는 현재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ILO의 4개 핵심협약 기준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기준이 추진되고 있는 조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약(제111호), 최저 고용연령에 관한 조약(제138호), 강제노동금지조약(제29호, 제105호) 등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23일(화)

제 11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 사건 구명운동 재개

페스카마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96년 여름 남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던 <페스카마호>에서는 조선족 선원들에 의해 한국인 선장을 비롯한 11명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선족 선원들은 육과 몽둥이로 짓밟는 한국인 선원들의 선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97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세삼스레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부산지역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재천 (부산주례구치소 수감, 수번 6501번) 씨에 대한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인 신부, 김정득 목사, 문제인 변호사 등은 지난 18일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 (051-802-3438) 이란 모임을 꾸린 뒤, 오는 8·15 특사를 통해 전 씨가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 씨의 구명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전재천 씨가 저지른 살인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선량하게 살아온 그가 그토록 잔혹한 살인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은 고질적인 선상폭력 때문이었다"며 "그가 극형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기수로라도 감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으로 반한(反韓) 감정이 들끓고 있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아픔을 보살피는 차원에서라도 관용을 바란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에 대한 구명운동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 차례 걸쳐 진행되어 왔다. 부산지역 각 종단 대표 32명이 97년 2월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인 8월 27일 김수환 추기경이 법무부장관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구명을 요청했으며, 올해 2월 1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전국의 7개 인권단체 등이 김대중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또 한 차례 감형을 탄원한 바 있다.

'사람들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은 오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서명결과는 정부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적 타살 중단하라"

IMF 희생자 위령제

IMF에 의해 강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살이나 분신이라는 마지막 선택

을 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IMF 희생자 위령제'가 지난 20일,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4백여 명의 해고노동자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국본, 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IMF 희생자들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국본은 "IMF 체제 이후 줄을 잇고 있는 자살은 정리해고 등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노동자들의 '최후의 절규'이자 정부와 재벌이 노동자·민중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킴으로 초래된 결과"라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반민중적 IMF 구조조정과 정부의 무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본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 "정리해고제와 근로자과거제 폐쇄, 재벌개혁, 즉각적인 실업대책 마련, IMF 재협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회적 타살의 행렬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역에서는 위령제에 앞서 제3차 실업자대회가 개최됐다. 부산, 대구에서도 동시에 열린 실업자대회는 자살을 강요하는 정부의 실업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생존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촉구했다.

"불심검문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자들의 항의집회-

· 때 : 6월 24일(수) 낮 12시

· 곳 : 경찰청 정문 건너편(서대문로터리 부근)

· 집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이영테)

법적 대응을 함께 하실 분 찾습니다!

사랑방은 최근 불법 불심검문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접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 이영테)

'비리폭로' 공무원 해임

「너는 그렇게...」 저자 이용호 씨

한 교육공무원의 해임을 두고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임된 공무원은 전북 진안 정천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용호 씨. 지난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예산의 횡령과 부당집행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 씨가 과거에 1백50만원 가량의 학교예산을 횡령한 바 있으며, 1백20만원 가량의 관사운영비를 학교예산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이 씨가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잦은 휴가나 외출 등으로 학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교육계 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부정부패의 자본인이었다」라는 책을 발간해 10여 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체현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행화되어 있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했다. 국가예산의 횡령, 전라북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인사행정 등을 고발한 이 씨는 이 책을 통해 국가예산의 20%를 공무원끼리 나눠먹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혁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가 책을 출간한 이후 교육청은 이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결국 해임통보까지 내린 것이다.

이 씨는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책이 출간된 이후 교육청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출간된 책을 몽땅 사줄 테니 땅에다 묻어버리자고 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지만, 회유에 넘어가지 않자 보복 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교육청이 문제삼은 횡령과 부당집행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소지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인들이 교육청의 외압으로 증언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논평을 통해 "이 씨의 저서가 발표된 이후 도교육청이 구조적인 개혁조치는 제시하지 않고, 이 씨에 대한 보복인사를 단행한 것은 교육계가 자정운동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 씨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23일 (화)
 - 김진성 (국보법) 오후4시, 서울지법424호, 합의6부, 속행
 - 고영복 (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서울고법303호, 합의3부, 속행
 - 박진호 (국보법) 오후2시, 서울고법303호, 합의3부, 속행
- ▶ 24일 (수)
 - 이천재 (국보법 간첩 등, 범민련),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303호, 합의1부, 선고
 - 이장희 외 1 (국보법, 한국외대 교수) 오후4시30분, 서울지법524호, 4단독, 속행

▶ 25, 26일자 공판은 내일자에

주간/인/권/호/름

(98년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 (월)
보건복지부, 노숙자 중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7만9천원에서 32만원까지의 생계비 매달 지급 방침

◆16일 (화)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학원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공군방공포사령부 1방포 여단 소속 공중배 (인제대 미생물학과 3년 휴학) 병장을 구속, 또 유한상 (5군단 소속) 상병등 현역군인 4명도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부산시교육청, 2천2천까지 부산지역 장애유아에게 특수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교육 정보자료센터를 설립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복지 종합대책 발표

◆17일 (수)
한국전력,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시 20% 여성할당제 신설/〈세계일보〉 파업 70일째/민교협, 전교조 등 14개 민간단체, 성공회 감당에서 '서원대 정상화와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공대위' 창립/국제엠네스티 97년도 연례보고서 발표, 아시아 지역이 금융위기로 인해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 /〈AFP연합〉 동티모르 학생들 무장군인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동티모르 자결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시위

◆18일 (목)
퇴출기업 명단 발표에 따라 이들 기업 및 하청·협력업체의 노동자 3~4만여 명 실질 비상/국민회의, 실업제원 확충을 위해 호화사치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10% 이상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에 10%의 부가세 부담 결정/국민회의,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7월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 평균 3.5% 인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총 지출규모는 96년 기준 20조5631억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15~35%에 불과하며, 1인당 사회보장비 45만원 수준

◆19일 (금)
노동부 '여성실업 현황' 조사결과, 올 4월말 실업률 5.4% (46만4천명)로 집계/김재업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논문 '한국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97년 6~7월 전국 20살 이상의 기혼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부부폭력 발생률 31.4%에 달했다고 발표

◆20일 (토)
〈AP연합〉 인도네시아 대통령,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영유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건으로 북역중인 동티모르 반군지도자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동티모르 주둔 일부 인도네시아군의 철수 및 동티모르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와 개발기금 제공 등 3개항의 평화안 제시

◆21일 (일)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명 장기채권 형태로 숨겨둔 비자금 8백40여억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간 단서포착돼 본격 자금 추적에 나서기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24일(수)

제 11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비판'을 거부하는 경찰. 이른바 '인권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권위적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전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신고한 경찰청 앞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린 데 이어, 24일로 예정된 기자브리핑마저 방해하고 나서는 등 경찰에 대한 비판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4월부터 불법 불심검문의 시정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나, 경찰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됨에 따라 2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이유로 20일 오전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즉, 경찰청 앞 도로(의주로)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며, 집회가 열릴 경우, '경찰의 통행을 차단하고 민원인의 교통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 정문 앞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를 불

허하다고 밝히면서도 정문 건너편의 집회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폈다. 또한, 서울시측도 이같은 경찰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찰청 앞 보도를 집회장소로 허가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청이 시위의 전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경찰청 앞 시위가 불허된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경찰청 앞 시위를 금

지해은 관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경찰청 정문 앞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24일 동대문경찰서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기자브리핑이 예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를 걸어와 "경찰과 관계된 기자회견은 경찰서 밖에서 하라"고 통보하며, "경찰서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나섰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같은 경찰측 통보를 무시하기로 하고, 24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기자브리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관행에 대한 인권단체의 정면대응으로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23일 오후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 검게 그을린 피부의 외국인노동자 17명이 피약벌 아래 모여들었다.

손에 손에 피켓을 들고 모인 이들은 서툰 한국어로 목청껏 소리를 높인다. "벌금 낼 돈 없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태국인 우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린 월급 4백만 원을 못받았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인 알리 씨도 5백15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강제출국 압박이 계속되자, 이들은 결국 월급받기를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어렵게 결심한 귀국마저도 원하던 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출국을 하기 위해선 5백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양해우 씨는 "이들의 희망은 단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뿐"이라며 "한국에 와서 뼈빠지게 일만 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물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벌금을 물리지 말고 귀국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다소나마 기대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일선 출입국관리소측 태도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23일 출국허가를 요청한 17명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측의 답변은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로 예정됐던 경찰청 앞 집회(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는 취소됐습니다.

엠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국제 엠네스티(AI)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관 클레어 맥베이 씨와 국민인권위원회 전문가인 뎀 제임스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맥베이 씨로부터 이번 방한의 목적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견해,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 등을 들어왔다.

- 이번 방한의 목적은 무엇인가?
=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AI가 한국 인권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여성의 권리, 설치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 이번 방한 일정은 어떻게 짜여졌나?
= 우리의 관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최근 인권상황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왔다. 24일에는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와 관련, 법무부 인권과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알아볼 예정이다.

-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뛰어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 경제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AI는 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김 대통령이 그동안 안기부 개혁이나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 인권을 지지하는 조치들을 많이 발표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3·13 양심수 석방 조치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김대중 정권이 그러한 개혁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보는가?

= 우리는 그 점을 믿고 있다. 단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인권문제에 관한 개혁조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

- 그러나 최근 김대중 정권이 시행한 구조조정정책이 이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는가?

= 우리도 그러한 비판에 동의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가의 탄압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더욱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비롯,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후 어떤 활동을 전개할 계획인가?
= 영국으로 돌아가 논의를 거쳐야 한

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개정과 양심수 석방, 경제위기에 따른 인권침해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 올 9월 AI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 그렇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 개정 등 우리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주요 공판 안내

- ▶ 25일(목)
 - 홍원식 외2(계엄포고령위반) 오전10시, 서울지법319호, 합의23부, 선고
 - 임형식(국보법) 오전10시, 서울고법404호, 합의5부, 선고
- ▶ 26일(금)
 - 강신호, 이소현(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302호, 합의2부, 선고
 - 조건수(집시법,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403호, 합의4부, 속행

새로 나온 책

『언론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한겨레 독자주주운동 10년사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 지음/ 살림터/ 380쪽/ 1만원

80년대 변혁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에서 펴낸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언론 실현이라는 한겨레의 창간이념을 올곧게 지켜내려는 독자주주운동의 소중한 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자주언론운동을 실천해 온 독자주주운동의 10년사, 이 운동에 헌신해 온 민중들의 언론개혁에 관한 고민과 전망들, 한겨레에서 해직된 두 기자의 한겨레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이 책은 한겨레 10년의 지면과 조직, 경영 등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대중적 검증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부제가 보여주듯, 한겨레 10년의 역사가 가능했던 진정한 원동력이 바로 창간이념을 견지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준 독자주주들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전국독자주주모임은 "창간주체인 독자주주운동의 10년을 되돌아보며 한겨레신문이 그동안 창간이념을 충실히 실천해 왔는가를 역사에 묻고자 이 책을 출판했다"며, 이를 통해 "한겨레가 언론의 주인인 민중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민족자주언론으로 거듭나는 '제2의 창간'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소외받고 억압받는 민중들의 삶을 진실되게 보도하고 민주개혁과 통일을 일구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겨레가 민중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 그리고 한겨레를 견제하고 올바르게 지켜내는 일이 바로 독자주주운동의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시사하는 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25일(목)

제 11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24일 경찰청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당국의 통고에 불복,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9일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 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이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경위 및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경찰청 앞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처분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의 사전억제금지원칙에도 크게 벗어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률 다툼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집회 제한지역이었던 경찰청 앞 등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경찰서 기자회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 등은 경찰측의 제지로 기자회견 출입을 봉쇄당했다. 경찰

당국이 취재원의 기자회견 출입을 봉쇄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이에 대해 방문단은 '취재원과 기자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측은 '경찰 문제에 대해 경찰서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동대문경찰서의 조치와 관련, '경찰이 자신들의 처부를 덮기 위해 기자회견 출입을 봉쇄한 것은 언론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다원, 불법용역 드러나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대표적 철거용역업체로 철거폭력의 주범으로 꼽혀온 다원건설(옛 저준용역)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용역경비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문의한 '다원건설의 무허가 영업 여부'와 관련, '다원건설에 대해 용역경비업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며 '다원건설이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할 경우 위법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원건설은 전국 재개발 현장의 철거용역 가운데 50% 이상을 수주하는 등 용역업체의 실력자로 군림해 왔으며, 강제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초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역 용역업체였던 다원건설은 당시 공사현장의 경비를 맡아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서울경찰청은 '다원건설의 무허가 용역경비업 행위가 있을 때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천주교인권위가 다원건설의 불법행위 사례를 제시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촛불대행진
 - 때: 6월 25일(목) 오후 6시
 - 곳: 명동성당 앞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공청회 '공기업의 올바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하여'
 - 때: 6월 25일(목) 오후 2시
 - 곳: 종로성당
 - 주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심포지엄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
 - 때: 6월 26일(금) 오후 2시-6시
 - 곳: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
 - 주최: 민변 등
- 가정폭력사건 연계망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때: 6월 26일(금) 오후 2시
 - 곳: 대구지방경찰청 강당
 - 주최: 대구 여성의 전화 등
- 시노노세끼 재판 평석회
 - 때: 6월 27일(토) 오후 3시
 - 곳: 서초동 변호사회관
 - 주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외노협 심포지엄 '아시아 인권운동의 동향과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
 - 때: 6월 30일(화) 오후 2시-6시
 - 곳: 명동 전진상교육관 강당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국내 인권정책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토론회에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동성애, 교육, 종교 관련 단체 등에서 60여 명이 참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민간단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앰네스티 멜 제임스(Mel James)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 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인권사안에 대한 보고와 권고 ▲인권침해 고발접수조사 ▲인권법·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한 모니터 활동 ▲인권교육·홍보 등이 주요 기능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의 대상에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에 있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의 논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민간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학교폭력, 의문사, 구금시설 문제 등 다양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숙 농성 잇따라

비용 바닥, 질병 고통 호소

사회약자들의 서울 상경 농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악화와 물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경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부당하고 철칙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비롯해,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 통일중공업, 한라중공업, 송원산업 노동자와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핵환자 등이며, 이들은 서울역과 명동성당, 그리고 각 사업장의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역 광장에 노숙 중인 삼미특수강 노동자 1백30여 명은 최후의 선택이라는 결의 아래 어려운 형편에서 30만 원씩을 각출해 올라왔지만,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성기금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거르는 등 고된 노숙생활을 견디고 있다.

목포결핵병원 환자들도 1백5만 원의 활동비를 모금해 상경했지만 오는 29일 추가로 상경하는 50여 명의 환자들을 위한 비용은 마련하지 못한 처지다. 또한 통일중공업, 한라중공업, 송원산업 노동자들 역시 어렵게 마련한 농성비용이 부족해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는 등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농성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비용문제보다도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 생긴 각종 질병과 두근 두근하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다. 이미 대부분의 농성자들이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딱딱한 바닥 생

활로 인한 수면부족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노숙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피로로 인해 '결핵'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마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신현훈 정의부장은 '많은 농성사업장들이 필수품인 주식과 부식, 생수,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는 노조 동지들과 일반 시민들의 작은 정성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된다'며 상경 농성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호소했다.

·농성단 연락처 : <삼미 특수강(018-510-7244)-서울역 광장, <통일중공업>-마포 불교방송국 옆, <송원산업(017-571-7108)-강남터미널 앞에 위치한 시티은행 뒤편, <목포결핵병원 환자(017-276-2109)-명동성당, <한라중공업(017-621-9027)-잠실 롯데월드 맞은편,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명동성당

양심수 군면제 요청

양군모 "이중 수감" 주장

최근 「양심수 군면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은 '양심수의 군정집은 이들에게 이중으로 정치적 억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양심수들에 대한 군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양군모는 '출소 양심수의 군정집은 이들에 대한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의미한다'며 '2년 미만의 징역을 살고 나온 양심수들의 경우 군대에 가면 도합 3-5년 간 사회적 격리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보통역권 입대상자로 분류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집행유예자는 예외없이 군대를 가야한다.

양군모는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형을 살고 나온 양심수들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고, 군면제의 해결없이 자신들의 회생을 묻어 두기에는 이후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26일(금)

제 11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최근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해온 (주)동해는 지난 4월 일본의 다국적기업 '일본 오므론 전장' (일본 제계순위 10위권)에 인수돼 현재 (주)한국 오므론 전장 (대표이사 도야마 히로키, 오므론)이란 간판을 달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고용승계와 노조승계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농성이 89일째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옛 '동해' 노동조합 이희영 위원장 등은 오므론의 노조탄압과 관련, 노동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노동부는 "외자유치기업을 특감할 경우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감을 거부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오므론은 2백%의 상여금과 임금이 체불되어 있던 동해를 인수하면서 △체불임금 1백% 삭감 △상여금 2백% 삭감 △98년 임금동결 △노조해체 △단체협상 해지 △전임자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결국 노조 대의원 9명을 제외한 조합원 52명이 쟁계에 대한 불안으로 회사측 요구에 따랐고, 대의원 9명 중 3명은 강제사직, 나머지 6명은 해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도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법 조항을 제시하며 노조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이번 인수과정이 '자산매매' 계약이란 이유를 들어 노조승계를 거부했다.

지난해 포함제철에 인수된 삼미특수강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정하 바 있다.

현재 오므론은 인수과정에서 전 동해 사장이었던 채철 씨를 1년간 공동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노조탄압 등 부당 노동행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4일 노조측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이의신청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노조를 인정치 않는 회사가 판결에 승복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회사측이 서울공장을 안성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서둘러 시행하려 하고 있어 고용승계된 노동자들마저 대량 정리해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진보민청청년연합 (의장 김봉태, 진보민청)의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이 24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연행자는 김봉태 (38) 의장을 비롯, 사무처장 김경운 (35), 정책실장 유영주 (31), 상임집행위원 정종권 (31) 씨와 이미 진보민청 활동을 그만둔 강기웅 (33), 오재영 (31) 씨 등이다.

진보민청은 92년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청년연석회의」로 출발해 96년 공식 창립했으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이 구현되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사업을 실천한다 △자본가 권력의 불평등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 투쟁한다 등 강령 9개항을 채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진보민청의 강령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행자 가족들은 "최근 청년단체 회원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진보민청 간부들까지 구속한 것은 청년단체들과 학생·노동운동과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민청이 최근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간부들이 일제히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또 다른 의도가 의심되고 있다.

진보민청은 지난 6월 2일 산하단체인 안양민주화청년운동연합 회원 12명이 연행되자, 각계 사회단체들과 함께 '양심고백운동'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양심고백운동'은 "나의 사상과 양심도 공안기관의 잣대로 본다면 이적성이 있다"는 것을 개인별로 공개 표명함으로써 공안당국의 자의적 이적규정에 정면으로 대항하자는 운동이다. 이미 진보민청 산하 회원 등 64명이 '고백' 서명에 참여했고, 중앙간부들이 구속되기 전 진보민청이 이 운동을 각계로 확산시킬 계획이었다.

진보민청은 앞서 6월 13일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앞으로 '청년단체 이적규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13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해 정부당국의 국보법 남용을 규탄하기도 했다.

<인터뷰> 국내 최초 인권출판사 대표 염규홍 씨

"비교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25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려는 출판사가 창립됐다. 7월 1일 정식 등록하는 출판사 [사람생각]의 대표 염규홍 씨를 만났다. 염규홍 씨는 91년 [강기훈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인권하루소식> 초대 편집장을 지냈다.

- 인권출판사를 만들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개념의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장 활동가, 인권변호사, 교수 등 폭넓은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 현 시대 인권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현재 미약한 인권개념의 정립을 위해선 수준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책을 출간해 검증받고 상호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출판사 이름을 [사람생각]으로 정한 뜻은?

=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의미다. 원래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내려 썼으나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 현재 기획중인 책은 있는가?

= 올해가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니까 국가보안법 관련 책들을 내보고 싶다. 또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논문이나 글들을 모아 낼 생각도 있다.

- 앞으로 계획은?

= 출판영역은 과거 인권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월간지든 소설이든 형식을 가리고 싶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이론서 중심으로 갈 생각은 없다. 여러 단체에서 내는 소식지와 자료집이 대중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고 배포망을 일원화하고 싶다. 인권서적을 찾는 독자를 조직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독자들이 인권영역의 확장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을 통해 희망하는 바는 무엇인가?

= 나는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나를 위로한답시고 "너는 소아마비지만 사지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않느냐?"는 말을 하곤 했다. 이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내가 다행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비교의 습관은 모든 사회영역에 퍼져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는 것이다. 출판사업을 통해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사회, 편견이 없는 사회가 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만화사랑방> 내일자에 실습니다

<요약> '9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북한

지난 17일 국제엠네스티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97년 한해 남북한의 주요 인권문제를 지적했다. 연례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심각한 식량부족

지난 3년간 북한 인민들은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았다. 믿을 만한 공식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몇몇 민간단체에서는 매달 수천 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으며, 2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정확한 상황 조사와 모니터링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문서들은 홍수와 이례적인 가뭄을 식량부족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농업방식의 문제와 비료 등의 원료 부족으로 생산량이 낮아졌고, 전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역이 차단됨으로 수입이 불가능해져 이러한 식량부족이 초래되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자유권조약 탈퇴 선언

8월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으로부터 탈퇴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유엔 소위원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결의문은 북한이 인권감시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 바 있다. 북한은 탈퇴결정이 자신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조약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퇴 성명으로 북한은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조약에서 탈퇴를 시도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10월, 인권이사회는 어떤 국가도 조약을 조인한 후에 탈퇴할 수 없으며, 조약에 탈퇴를 규정한 조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한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들은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것이라는 점과 자유권조약은 결코 탈퇴가 인정될 수 있는 일시적 성격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계속되는 공개처형

국제엠네스티는 "북한: 공개처형-쏟아지는 증언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 23명이 70년부터 92년 사이에 공개처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70년대 청진에서 강도죄로 처형되었고, 80년대에는 두 형제가 기차에서 싸움 흔적이라는 이유로 함흥에서 처형되었다. 88년에는 횡령죄를 범한 여성도 평양에서 처형된 바 있다. 북한당국은 92년에도 또 한 건의 처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95년 북한의 관리는 85년 이후 한두 건의 처형만 있었을 뿐이라고 국제엠네스티에게 말했다. 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당국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70년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 인권문제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국제기준에 어긋난 노동법 개정
1월 초에는 민주노총의 지도하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개정 노동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했다. 당국은 '날법' 파업을 조지한 노조 지도부 2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항의집회가 이어짐에 따라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지난 3월 재개정된 노동법은 여전히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금지하는 등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4월 북한의 한 고위관료가 남한으로 망명함에 따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안기부는 망명자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남한 내 북한 동조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정보가 악용돼 평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96년 12월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않지만, 낱치기로 통과됨으로 입법자들이 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화적인 정치활동 탄압
6백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국보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고무·찬양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사상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민청' 회원 20명(양심수)과 비공식적인 통로로 북한에 기아구제기금을 전달한 '범민련' 회원 5명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 양현주 씨도 방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숫자가 총 2백49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수백 명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폭력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폭력시위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한총련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평화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구속하는 사태까지 불러온 것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11월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양심수)가 인권영화제 개최를 비롯, 친북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다른 5명의 인권영화제 집행위원도 체포되었다 풀려났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영화제 상영작품에 대한 당국의 검열을 거부해 왔다.

남한당국은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하기 씨에게 3년6개월 형을 선고했고, 진관 스님에게도 국보법 위반죄로 똑같은 형을 선고했다. 5월 남한 정부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답신을 통해 김하기 씨에 대한 형 선고를 정당화했으며, 국보법이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6년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위험한" 의견을 올렸다는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 학생은 4월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고문, 열악한 수형생활
수십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일본에서 북한 동조자들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박창희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구속 후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77살의 양심수 강희남 씨는 친북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2년6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7. 80년대에 간첩죄로 장기형을 선고 받은 정치범 가운데 최소 20명이 여전

히 수감되어 있다. 그들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내용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 강희철 씨는 86년 무기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고문과 오랜 독방생활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상록 씨도 19년간의 감옥생활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다.

경찰폭력, 사형집행
학생들과 시민들이 구속,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과 안기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경기대 학생 조영준 씨는 체포된 후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20명으로부터 구타당했다. 한양대 학생 김해전 씨는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타당했고, 연세대 학생 김선일 씨도 체포되는 과정에서 3명의 경찰에 의해 구타당했다.

12월에는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고, 사형수도 여전히 36명에 이른다. 이들 중 조선족 선원이었던 전제천 씨는 11명의 선원을 살해한 죄로 96년 12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5명의 선원들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정부에 대해 양심수 석방과 국제기준에 일치하는 노동법과 국보법 개정을 계속 요구해 왔다. 또한 과거 정권 아래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장기수들의 문제를 제기해 줄 것, 고문과 부당대우를 종식시킬 것,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5월 '남한: 감추어진 희생자, 장기수' 라는 책을 출판했고, 10월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공약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27일(토)

제 11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재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환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7년 1월 박석삼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민성 씨는 91년 사노맹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구속돼 5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장 씨가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노맹 관련 출소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장 씨가 안기부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고,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 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고소권의 행사에 관한 것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라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월고가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로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가 "보안관찰법 제18조 제1항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같은 사노맹 관련 혐의로 5년씩 복역하고 출소한 이은경, 정명섭 씨 부부도 26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역시 "법무부의 처분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살없는 감옥'으로 불리는 보안관찰 처분에 대한 관련자들의 반발이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계기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판결문> 3면에

<국제인권소식> 영국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지난 25일 영국의 BBC 월드와이드뉴스는 한 자선단체의 보고서를 인용, 영국의 장애인들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멘캡'(mencap)이라는 장애인 자선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강진단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단지 몇 명의 장애인들만이 정기적인 암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절반은 안구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차례도 안구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보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주로 고연령층의 장애인 여성과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치료가 필요한 난독증 아동들 중 73%가 언어·발성 치료를 받았지만 그들이 19세가 되면 치료받을 수치는 27%로 하락했다. 이렇게 특수하고 지속적 건강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구의 대부분이 기본적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감축 및 기초 의료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들이 공공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보건서비스(NHS)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 블레어 정부는 대처 정부가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공공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으며 민영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들은 영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감축으로 인해 빈곤층과 실업자들은 사실상 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의 혜택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26일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변호사협의회]는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일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보상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의 전후책임과 이들의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석성기 씨(78세) 등은 일제에 의해 징집됐다가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피해를 입은 재일한국인들이다. 이에 석 씨 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아왔다. 전후 일본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출신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자, 곧바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석 씨 등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인 한일청구권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65년 체결된 이후, 일본의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보상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며 재일한국인들의 보상요구를 묵살해 왔던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협정과 관계없이 일본정부에 대한 재일한국인의 보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본과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도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 씨 등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분개한 석 씨 등은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재산권과 평등권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마침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전후 일본정부는 자국민의 전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2년의 '원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입안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과 호적상의 차별조항을 도입해 보상대상에서 철저히 제외시켰다"며, '일국주의'에 기초한 일본의 보상체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일한국인 변호사 김경득 씨도 "이번 헌법소원이 일본정부의 무담한 책임회피 논리를 반박하고 한·일 양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세월 각종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아 온 재일한국인들이 고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 헌법소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유가족 12명 경찰 연행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던 유가족들이 대거 경찰에 연행됐다.

26일 낮 1시경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경찰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연행됐다. 연행자는 배은심 유가족 회장(이한열 씨 어머니)과 허영춘 부회장(허원근 씨 아버지), 추모단체연대회의 김학철 기획국장 등이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것은 명백히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며 연행자들을 마포·은평·서부경찰서 등으로 분산·유치했다.

한편, 유가족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이 이날 저녁 경찰청을 다시 찾았으며, 경찰의 제지를 받는 속에 밤늦게까지 항의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최근 안기부와 국방부, 기무사 등에도 항의방문을 시도한 바 있으나, 경찰에 연행되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 원고: 장민성
· 피고: 법무부장관
·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중략) 원고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2)자형 집에 거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3)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 강제유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 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 생략)
다. 위 사유들에 관련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1) 먼저 원고가 복역 중 15차례 단식 또는 결식으로써 불만을 표시한 일이 있다거나,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거나,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다거나, 또는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고소권의 행사에 관한 것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2) 원고가 출소 후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을 위한 경찰조사시에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출소 후 소종민, 강제유와 만난 점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과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서 안부도 묻고 식사도 같이 할 겸해서 강제유과는 한 차례, 소종민과는 몇 차례 만났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유은 그 후 결혼하여 평화방송 대본구성 등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종민은 원고의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1년 후배이고 사단법인 민족문화학자회의의 사무간사로 일하고 있어서 별 뜻 없이 만나 문단 소식을 듣거나 밥 먹고 술 한 잔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위 강제유이나 소종민이 범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원고가 그들과 어울려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이 아닌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 있는 어떤 활동이나 집회 참여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의 거주 및 생활환경을 보면, 미혼으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누나인 장경혜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더구나 원고는 1996. 6. 1. 부터는 청산입시학원에 강사로 취직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와 같이 거주하는 자형 임승철이 과거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원고가 출소한 후에 다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그 처벌죄명은 보안관찰해당범죄와 무관하며, 원고나 임승철이 각자 직장관계 일 등으로 매우 바빠서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마주칠 기회도 거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위 임승철과의 접촉을 통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에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받은 만한 대

외적인 활동을 함께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6) 원고의 청산입시학원의 동료 강사 중 두 명이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청산입시학원은 1995. 2. 22. 설립된 정원이 4,305명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강사수도 1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자들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위하여 학원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우연히 같은 직장에 국가보안법 전력이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와 위 강사들과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특별히 긴밀한 사이라거나 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된 활동을 함께 한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7) 한편, 원고가 원고보다 핵심적인 다른 사노맹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안관찰처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이나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과거 범죄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정도의 사정은 일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원고가 기왕에 범한 보안관찰대상범죄인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죄 또는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충분한 개인성까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써는 원고에게 그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1998. 6. 18.

재판장 판사 조중환, 판사 문용호
판사 이경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6월 30일(화)
제 11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차별에 맞서 하나로

동성에 모임, 전국적 협의체 구성

우리사회의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이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결성했다.

지난 27일 전국 23개 주요 동성애자 단체 회원 2백여 명은 종로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한동협)'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5월 30일 동성애 전문잡지 <버디> 주최로 열린 '전국 동성애자 대표회의'에서 합의된 뒤 이날 발족에 이르렀다.

대학동성애자 인권연합, 천리안 이반 모임 <퀴어넷>, 동성애 전문잡지 <버디>, 한국여성동성애자 인권모임 <개리개리> 등 여러 동성애 단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조직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국 동성애자 운동은 나름의 성장을 거듭해 오늘날 수많은 동성애

자 단체들의 결성을 이끌어 냈지만, 사회의 시선은 아직도 우리를 에이즈의 근원으로 왜곡하는 등 부당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협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변태 성행위로의 억압적 규정을 거부하고 동성애에 대한 물지각한 이해를 계몽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성을 부정하는 모든 의학적, 법률적, 교육적 관행의 중지 △ 언론의 동성애자에 대한 반인권적 보도관행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민주적 언론으로 위상 확립 △ 에이즈를 동성애자만의 질병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비과학적 홍보 중지 및 전국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동성

애 인권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촉구했다.

한편, 27일 집회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종교계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지 목사이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상임대표인 전우섭 목사는 "내가 이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목사이기 위태로울 수도 있다"면서도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소수자들과의 연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게 "앞으로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연행됐던 유가족 벌금형 선고

지난 26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다 연행된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4시 경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경찰청 혐의방문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던 유가족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다 27일 즉결심판에 회부돼 3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은심 유가족 회장과 함께 연행됐던 유가족 간사 김민정 씨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은평경찰서 김원일(수사2계) 형사와 윤창순 형사는 김씨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며 이들을 말하라고 압박했다. 또, 이들은 "형장을 가져오면 인간 이하의 짓을 할 수도 있다" "여경 20명을 불러 와서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유가족과 추모단체연대회의는 내일부터 3일간 경찰청과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감옥 인권실태를 분석·연구할 전문인력을 찾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교도소·구치소 인권실태 설문조사(이하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벌써 4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1백50여 개의 설문지가 수거됨으로 이는 전국 이래 최대 감옥 인권실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옥 인권실태 조사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수거된 자료를 가지고 우선 분석·연구작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작업과 종합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팀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신청기한 : 7월 10일까지
- ▶ 연구기간 : 7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 ▶ 모집대상 : 전공 대학원생, 법조인, 공법교수, 인권운동가 등
- ▶ 문의 : 유해정, 엄주현(741-5363)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환자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 4시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새벽 목포에서 상경한 30여 명의 결핵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발족식에서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려 하지만, 우리는 43만 결핵환자의 마지막 치료기관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엔 전국 각 대학 의대생들도 참석해 결핵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사를 표명했다. 전남대 의대 이병오(4학년) 씨는 "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은 국민 건강권 수호에 대한 국가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공의료의 약화와 의료의 상품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결핵환자들은 오후 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발족식을 마친 뒤 명동성당 농성자들을 제외하고 목포로 내려갔다.

.....주요 공판 안내

- ▶ 30일(화)
 - 한민승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김지은 (한총련·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유용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신건
 - 백금자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신건
 - 김민정 (국보법) 오전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 7월1일(수)
 - 강신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조은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 2부, 속행
 - 조원길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 차준국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 3일(금)
 - 이근안 외15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오택용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신건
 - 임성욱/김민숙/윤창배/방정욱/김함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신건
 - 박재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속행
 - 심정웅 외2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주/간/인/권/호/름

(98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 ◆ 22일(월)
 - 환경부, 99년부터 수돗물 검사 주민청구제 시행키로/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 김대중 대통령 비방 발언을 한 혐의로 김홍신 의원 불구속 기소
- ◆ 23일(화)
 - '실업극복 국민운동'(공동위원장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위원,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출범/기획예산위원회, 4대 사회보험 통합 등 경제·정부·사회·미래 등 4부문 국정과제 발표/통계청 발표, 5월 실업자 수 1백49만2천명, 실업률은 6.9%로 83년 2월 이후 최고치/도쿄 지법, 강제징병 한국인 보상을 위한 입법 촉구/외국인노동자 17명, '벌금면제와 출국허용' 요청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 시위/정부, 과적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등 26개 업종 확정/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정 분야 협의지위' 부여받아
- ◆ 24일(수)
 -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 앞 집회를 금지한 서대문경찰서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진보민청 전·현직 중앙간부 6명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벨로 주교 회담, 동티모르 내 군대 철수 등 약속
- ◆ 25일(목)
 - 김대중 대통령 "부패방지법 올해안 제정" 지시, 내무고발자 보호제 도입 및 공직자 재산등록 5급 이상 확대 등 내용 담아/건설교통부,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시영세민 주택개량 사업에 가구당 5-7백만원씩 5백66억 지원예정/한국기독교교장대회, 외국인노동자 전용교회 짓기로/연세대, 이화여대 등 5개 대학 여학생회,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 발족/보건복지부, 식품위생조사자 '보건증' 폐지/미 국방부, 육군이 보유한 병어리 대인지뢰 가운데 한반도 작전용과 훈련용 제외한 물량 모두 폐기하기로
- ◆ 26일(금)
 - 창원지검 직원, 가혹수사 만류하는 검사시보 폭행/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던 유가족 10여 명, 경찰청 혐의방문 도중 연행/정부, 미성년자 불법고용 유흥업소에 대해 곧바로 영입허가 취소하고 고용 알선사 및 고용업주는 구속수사하기로/한승헌 감사원장 서리,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권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계좌추적권) 요구/독일 하원, 외국인명명신청자 중 신분증명 관련서류를 파기하거나 출국을 거부하는 3만여 명에 대해 기존의 복지혜택 박탈하기로 하는 복지축소 법안 통과시켜
- ◆ 27일(토)
 - 국민화합시민연대 창립
- ◆ 28일(일)
 - 노동부 발표 '실업대책훈련 실시현황 분석'에 따르면, 3월 이후 실직자 재취업훈련 수료생 4천8백83명 가운데 12.3%인 5백99명만이 취업

인권
시경

곤봉으로 때맞는 외국인노동자

박천응(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23일 목동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벌금제도는 IMF 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노동자 실직자 갈 곳 없다,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용산 역에서 밥 먹자'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 주세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특히 23일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서는 벌금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30여 명이 자진해서 출국 신고를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전원 외국인노동자 보호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그러던 지난 6월 26일 한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출입국관리소 보호소 직원들이 '왜 데모를 했느냐?'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8시간 동안 무릎 꿇게 하는 기합을 주었다'는 제보와, 보호소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보호소 내에서 곤봉으로 때었다'는 제보였다.

다음날, 23일 집회 참가자중 아직 출국을 못하고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 4명을 면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때 보호소 내에서 폭행을 당한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이 기록하여 둔 메모를 보여주었다.

"23일 안산에서 점심을 먹고 12시에 출발하였으나 양천구청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1시 45분경 체포되었다. 오후 2시경 봉고차에 실려 목동으로 잡혀갔다. 잡혀가는 동안 경찰이 차 안에서 심한 말로 기초 조사를 하였다. 나와 친구는 수감에 채워졌다. 2시10분에 조사실에서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3시경 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수감된 방은 6호실이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들

어와 기합을 주었다.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머리에 짚지긴 상태로 1시간 동안 있었다. 4시 20분경 자율귀환 보장을 주장하며 자진 출국 신고를 마친 동료 외국인노동자 여러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몽골, 페루 사람 등 모두 21명이었다. 우리는 다시 5호실로 방을 옮겼고 그곳에서 다시 8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박지를 끼는 기합을 받았다. 21명이 수감된 5호실은 3미터 정도 크기로서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앉아서 뜯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27일 오전에 또 연락이 왔다. 출입국

8시간을 무릎 꿇고 손에
막지를 낀 채 모욕을
당한 외국인노동자들.
그들은 복종이 아닌
복수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왜 어제 목사님께 보호소 내 일을 이야기를 했느냐'고 심한 욕설과 꾸지람을 들었다는 것이다.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예약된 비행기표를 전달하고자 보호소를 방문한 우리 일행 역시 보호소 입구에서 짐승처럼 내쫓김을 당했다. 이렇듯 한국 사람에게도 마구잡이로 대하는 보호소 사람들이라면 보호소 내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었는가를 직감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지난 96년 4월 28일 부산에서 불잡힌 외국인노동자가 구치소로 이송된 후 96년 5-6월 동안 15개국 1백 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소 혹은

구치소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 결과, "당신은 회사, 구치소 안에서 한국 사람에게 맞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0%가 "맞았다"고 답변했다. 또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70%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인을 해치겠다고 답했으며, 총으로 쏘겠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구치소 안에서 얼마나 있었나?"는 질문에 1-2개월이 80%, 1-3주가 15%, 2개월 이상이 5%였고, "한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외국인들 눈물 때문에 이 나라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는 답변이 60%, "한국인들은 돈이 있어도 언제나 세상에 살 동안 고생할 것이다"는 대답이 30%,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10%로 나타났다.

한국에 올 때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지만 한국에서 나갈 때는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보호소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결코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니다. 잡힌 과정을 보면, 일하다 회사 안에서 잡힌 경우가 80%, 유흥가에서 6%, 기숙사에서 잘 때 8%, 여행중 3%, 역전, 버스 정류장에서 잡힌 경우가 3%로 대부분 한국에서 성실히 일하며 돈을 벌고자 했던 외국인노동자였다.

8시간을 무릎꿇고 손에 막지를 낀 채 모욕을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복종이 아닌 복수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음을, 곤봉으로 맞은 외국인노동자의 때맞은 가슴으로 흘리는 피흘림의 저항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교각 4명이 잘 수 있는 작은 방에 21명을 몰아 넣어 쪼그려 앉아 밤을 새우게 한 보호소는 차라리 삼청교육대의 짐승 우리였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 속에 민족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정부는 서울출입국 관리소 소장과, 보호소 파장 및 폭행 관계자를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9호 색인

(제1036호 - 제1156호)